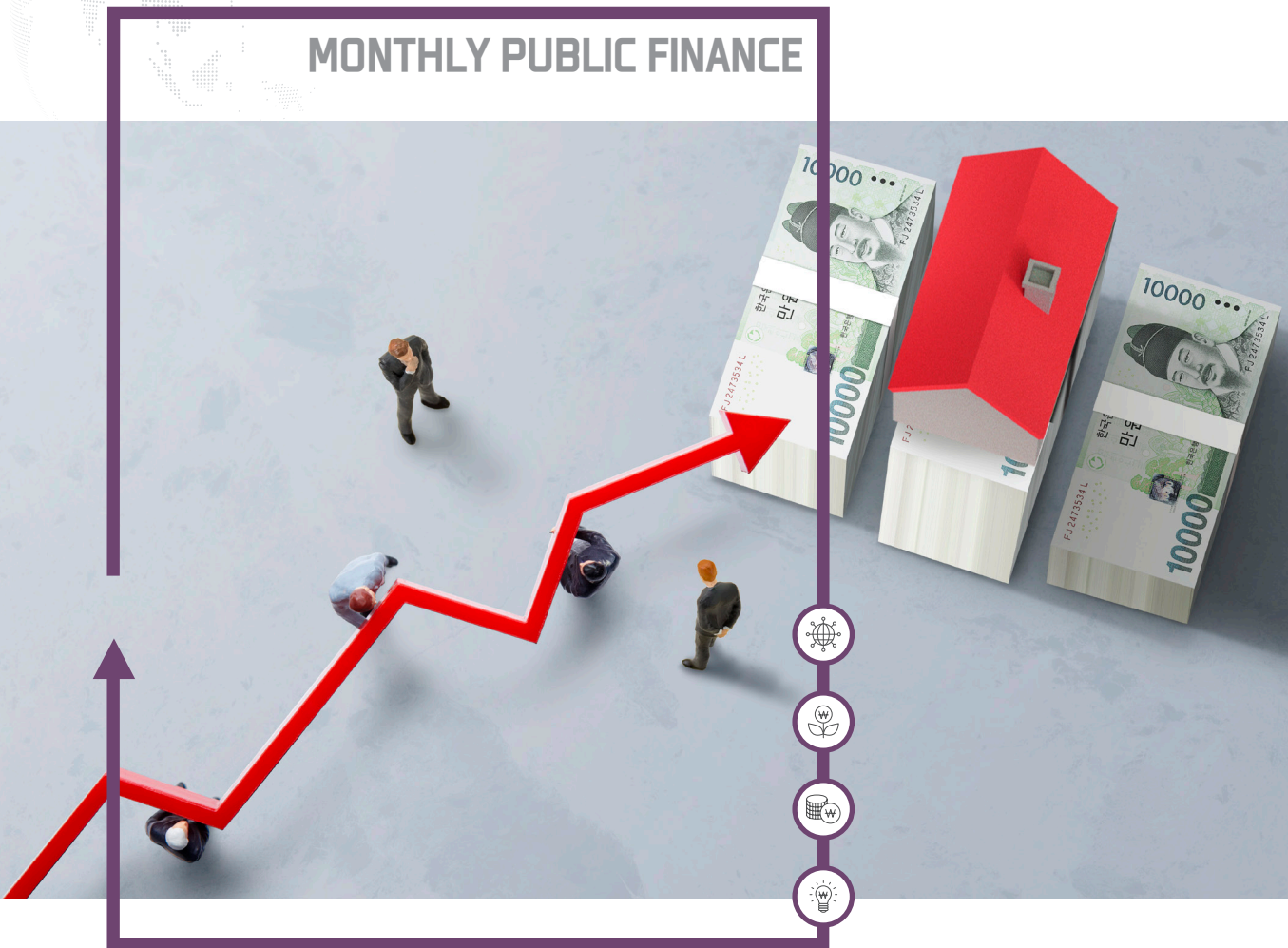


2022—5월 VOL.100

발간등록번호 11-1051000-000423-06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MONTHLY PUBLIC FINANCE



2022—5월 VOL.1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I. 재정운용동향

- | | |
|---------------|-----------------------|
| 1. 국제수입 | 조세분석과 (044-215-4123) |
| 2. 재정수지 |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
| 3. 국가채무(중앙정부) | 재정건전성과 (044-215-5744) |
| 4. 국채 | 국채과 (044-215-5135) |
| 5. 관리대상사업 | 집행전략과 (044-215-5332) |

II. 기타 부문별 현황

- | | |
|------------|------------------------|
| 1. 국유재산 | 국유재산정책과 (044-215-5166) |
| 2. 연금 | 재정관리총괄과 (044-215-5354) |
| 3. 부담금 | 재정성과평가과 (044-215-5376) |
| 4. 보증채무 | 국고과 (044-215-5123) |
| 5. 국가채권 | 국고과 (044-215-5113) |
| 6. 정부출자 | 출자관리과 (044-215-5177) |
| 7. 정부배당수입 | 출자관리과 (044-215-5177) |
| 8.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심사과 (044-215-5413) |

발행처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디자인·인쇄 경성문화사 044-867-7678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행 등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 044-215-5742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뉴스 - 보도자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I. 재정운용동향	03
1. 총수입	04
2. 총지출	08
3. 재정수지	10
4. 국가채무	11
5. 국채시장	12
II. 기타 부문별 현황	13
1. 국유재산	14
2. 보증채무	17
3. 정부출자	17
III. 주요 재정이슈	19
1. 그 간의 국유재산 개발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20
2. 주요국의 22년 예산 동향	23
3. 주요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운용현황	34
4.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의 지원 정책과 시사점	47
5. 기술안보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53
IV. 주요 재정통계	61
〈참고〉 재정 용어	98



I 재정운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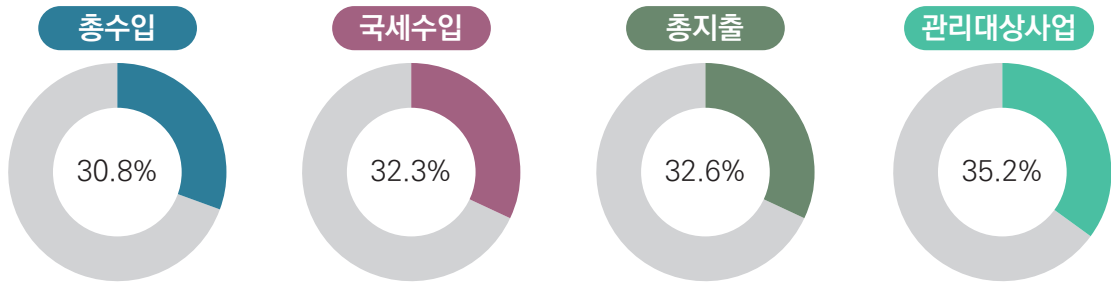
1. 총수입
2. 총지출
3. 재정수지
4. 국가채무
5. 국채시장



I. 재정운용동향

- 고용·수출 증가세 등으로 국세·세외수입이 증가하여 1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4.1%p 증가한 30.8%
- 감염병위기대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1분기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3%p 증가한 32.6%
-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45.5조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3.1조원 개선, 사보기금수지 흑자폭 축소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 폭은 확대(△3.0조원)
- 1분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81.9조원으로 '21년 결산 대비 42.8조원 증가

주요항목별 진도율('22년 1분기)



1. 총수입

◆ 고용·수출 증가세 등으로 국세·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총수입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4.1%p 증가한 30.8%

(단위: 조원, %, %p)

	'21년						'22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C)	3월 (누계, D)	진도율		추경** (G)	3월 (H)	3월 (누계, I)	진도율 (J=I/G)	3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	514.6	570.5	55.0	152.1	29.6	26.7	553.6	64.3	170.4	30.8	9.2	18.2	1.2	4.1
• 국세수입	314.3	344.1	30.7	88.5	28.2	25.7	343.4	41.1	111.1	32.3	10.4	22.6	4.2	6.6
• 세외수입	29.3	30.5	2.0	10.1	34.6	33.2	26.1	2.1	11.0	42.2	0.1	0.9	7.6	9.1
• 기금수입	171.0	195.8	22.4	53.5	31.3	27.3	184.1	21.1	48.3	26.2	△1.3	△5.2	△5.1	△1.1
(사보기금*)	99.5	124.5	14.9	35.3	35.5	28.3	104.8	13.4	29.2	27.9	△1.5	△6.1	△7.6	△0.5
• 세입세출 외	-	0.1	0.0	0.0	-	-	-	0.0	0.0	-	0.0	0.0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1차 추경 기준으로 2차 추경은 국회 통과후 반영

❶ (국세) 1분기 국세수입은 111.1조원(누계)으로 전년동기 대비 22.6조원 증가, 세입예산 (343.4조원) 대비 진도율 32.3%

- 소득세는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6.7조원 증가

* 상용근로자수(월평균, 만명): ('20.12~'21.2) 1,463 → ('21.12~'22.2) 1,533 (+4.8%)

- 법인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0.9조원 증가

*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조원, 개별): ('20) 67.5 → ('21) 106.8 (+58.2%)

- 부가가치세는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4.5조원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전년동기대비, %): ('21.3분기) +5.6, ('21.4분기) +6.4
수입액(억불): ('21.1~2월) 868.6 → ('22.1~2월) 1,132.9 (+30.4%)

- 교통세는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1.5조원 감소

*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20% 한시인하('21.11.12~'22.4.30)

(단위: 조원, %, %p)

국세수입	'21년						'22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C)	3월 (누계,D)	진도율		추경* (G)	3월 (H)	3월 (누계,I)	진도율 (J=I/G)	3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국세수입	314.3	344.1	30.7	88.5	28.2	25.7	343.4	41.1	111.1	32.3	10.4	22.6	4.2	6.6
• 일반회계	304.6	332.5	29.9	86.1	28.3	25.9	333.0	40.4	108.8	32.7	10.5	22.7	4.4	6.8
- 소득세	99.5	114.1	4.8	28.6	28.8	25.1	105.8	4.9	35.3	33.4	0.0	6.7	4.6	8.3
- 법인세	65.5	70.4	17.3	20.2	30.8	28.7	74.9	27.0	31.1	41.5	9.6	10.9	10.7	12.8
- 부가가치세	69.3	71.2	1.4	17.6	25.4	24.7	77.5	2.3	22.1	28.5	0.9	4.5	3.1	3.8
- 교통세	15.7	16.6	1.7	4.7	30.1	28.4	15.4	0.9	3.2	20.8	△0.8	△1.5	△9.2	△7.6
- 관세	8.3	8.2	0.7	1.7	20.7	21.0	8.7	1.0	2.8	32.5	0.4	1.1	11.8	11.5
- 기타	46.2	52.0	4.0	13.3	28.7	25.5	50.6	4.3	14.3	28.3	0.4	1.1	△0.4	2.8
• 특별회계	9.6	11.6	0.8	2.4	24.5	20.4	10.4	0.7	2.2	21.5	△0.0	△0.0	△3.0	1.1

* 1차 추경 기준으로 2차 추경은 국회 통과후 반영

② (세외수입) 1분기 세외수입은 11.0조원(누계)으로 한은잉여금 정부납입액 증가(+0.4조원)*, 과징금** 수입 증가(+0.2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0.9조원 증가, 진도율 42.2%

* 한은잉여금 정부납입액(조원) : ('21) 5.1조원 → ('22) 5.5조원

** 구글엘엘씨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공정위, +0.2조원)

(단위: 조원, %, %p)

	'21년						'22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C)	3월 (누계, D)	진도율		추경** (G)	3월 (H)	3월 (누계, I)	진도율 (J=I/G)	3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세외수입	29.3	30.5	2.0	10.1	34.6	33.2	26.1	2.1	11.0	42.2	0.1	0.9	7.6	9.1
• 일반회계	13.7	14.2	0.6	6.7	49.1	47.4	11.9	1.0	7.6	64.0	0.4	0.9	14.8	16.6
- 재산수입	6.1	6.2	0.0	5.2	84.8	83.3	5.1	0.0	5.5	108.4	△0.0	0.3	23.7	25.2
- 경상이전수입	6.3	7.0	0.5	1.3	21.1	19.2	5.7	0.9	1.9	33.8	0.4	0.6	12.7	14.6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0.8	0.7	0.1	0.2	19.8	23.3	0.8	0.0	0.2	20.0	△0.0	△0.0	0.2	△3.3
- 기타*	0.4	0.3	0.0	0.0	10.4	14.3	0.4	0.0	0.0	9.6	△0.0	△0.0	△0.8	△4.7
• 특별회계	15.6	16.3	1.4	3.4	21.8	20.8	14.1	1.1	3.4	23.8	△0.0	△0.0	2.1	3.0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4	8.1	0.6	1.6	25.0	19.7	6.7	0.6	1.4	21.5	△0.0	△0.0	△3.5	1.9
- 재산수입	0.4	0.2	0.0	0.0	10.5	18.7	0.3	0.0	0.0	14.5	0.0	0.0	4.0	△4.2
- 경상이전수입	5.0	5.0	0.3	0.9	17.8	18.0	3.9	0.3	1.0	24.8	△0.0	0.1	7.0	6.8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	1.5	0.2	0.5	26.1	29.9	1.6	0.2	0.4	28.0	△0.0	△0.0	1.9	△1.8
- 기타*	2.1	1.5	0.2	0.4	19.9	27.5	1.6	0.2	0.5	28.7	△0.0	0.1	8.8	1.2

*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 1차 추경 기준으로 2차 추경은 국회 통과후 반영

③ (기금수입) 1분기 기금수입은 48.3조원(누계)으로 보험료수입 증가에도 자산운용수입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5.2조원 감소, 진도율 26.2%

- (보험료수입 등)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가입자 수* 증가로 사보기금 보험료 수입 증가

* 전년동기 대비 1분기 국민연금 가입자수 증가(월평균, 만명) : ('22) +28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월평균, 만명) : ('22) +54

- (자산운용수입) 자산 시장 호황에 따른 이례적 실적을 기록한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평년 수준 상회

* 1분기 기금 자산운용수입(조원, 누계) : ('18) 5.2 ('19) 4.8 ('20) 5.9 ('21) 15.7 ('22) 8.8

(단위: 조원, %, %p)

	'21년						'22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C)	3월 (누계,D)	진도율		추경** (G)	3월 (H)	3월 (누계,I)	진도율 (J=I/G)	3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기금수입	171.0	195.8	22.4	53.5	31.3	27.3	184.1	21.1	48.3	26.2	△1.3	△5.2	△5.1	△1.1
- 사회보장기여금	77.0	78.1	8.3	20.2	26.2	25.8	80.7	8.8	21.1	26.2	0.4	1.0	0.0	0.4
- 재산수입	26.8	50.2	6.8	15.7	58.7	31.3	29.3	4.8	8.8	29.9	△0.0	△0.0	△28.8	△1.4
- 경상이전수입	31.0	30.0	3.4	8.7	28.1	29.1	32.6	4.4	10.5	32.3	1.0	1.8	4.2	3.2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7.9	8.5	0.6	1.3	16.9	15.6	8.8	0.6	1.4	15.9	0.0	0.1	△0.9	0.4
- 융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6.2	27.1	3.0	6.9	26.2	25.3	30.5	2.3	5.9	19.3	△0.0	△0.0	△6.9	△6.1
- 기타*	2.1	1.9	0.3	0.7	35.3	38.2	2.2	0.2	0.6	25.7	△0.0	△0.0	△9.6	△12.5

* 수입대체경비, 관유물매각대

** 1차 추경 기준으로 2차 추경은 국회 통과후 반영

2. 총지출

◆ 감염병위기대응,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동기 대비 2.3%p 증가한 32.6%

- (예산) 코로나 확진자수 증가에 따라 코로나 대응 사업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14.0조원 증가, 진도율은 32.9%

* 월별 신규확진자 수(백만명) : (2월) 2.3 (3월) 10.0 (4월) 4.1

- (기금)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등 신속 집행 결과 전년동기 대비 7.3조원 증가, 진도율은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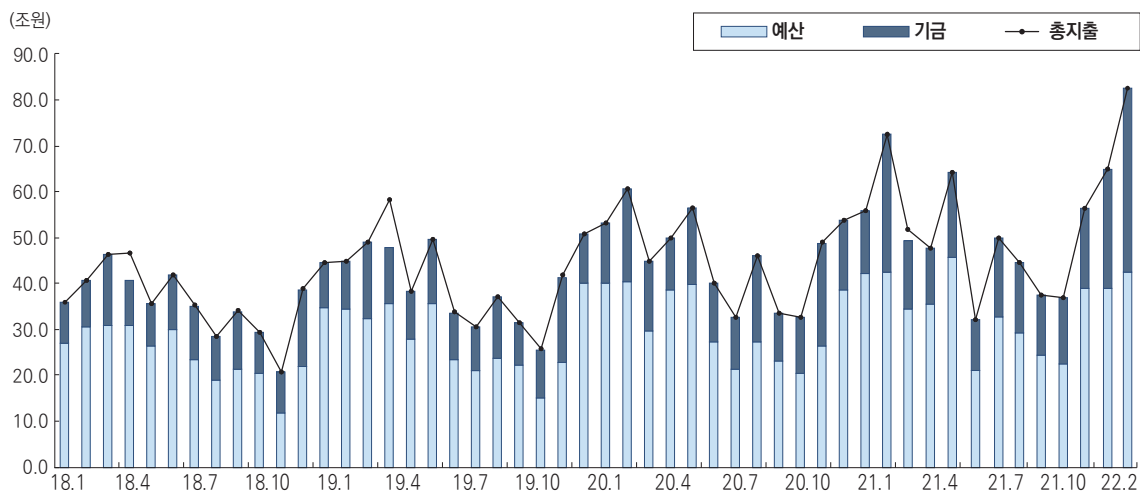
(단위: 조원, %, %p)

	'21년						'22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C)	3월 (누계,D)	진도율		추경** (G)	3월 (H)	3월 (누계,I)	진도율 (J=I/G)	3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지출	604.9	600.9	72.4	182.2	30.1	30.3	624.3	82.3	203.5	32.6	9.9	21.3	2.5	2.3
• 예산	409.7	398.9	42.3	123.1	30.0	30.9	417.2	56.5	137.1	32.9	14.1	14.0	2.8	2.0
– 일반회계	348.8	339.7	33.6	102.3	29.3	30.1	354.4	44.8	115.9	32.7	11.2	13.6	3.4	2.6
– 특별회계	60.9	59.1	8.7	20.8	34.2	35.2	62.8	11.6	21.2	33.8	2.9	0.4	△0.4	△1.4
• 기금	195.2	199.6	30.1	59.1	30.3	29.6	207.1	25.9	66.4	32.1	△4.2	7.3	1.8	2.4
(사보기금*)	63.2	64.4	6.0	16.8	26.6	26.1	64.8	6.0	16.9	26.1	△0.0	0.1	△0.5	0.0
• 세입세출외	-	2.5	0.0	0.0	-	0.1	-	-	-	-	△0.0	△0.0	-	△0.1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1차 추경 기준으로 2차 추경은 국회 통과후 반영

〈회계·기금별 총지출 추이(당월기준)〉



[참고] 성질별 지출내역

(단위: 조원, %, %p)

	'21년						'22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C)	3월 (누계,D)	진도율		추경*** (G)	3월 (H)	3월 (누계,I)	진도율 (J=I/G)	3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지출	604.9	600.9	72.4	182.2	30.1	30.3	624.3	82.3	203.5	32.6	9.9	21.3	2.5	2.3
- 인건비	43.8	42.8	4.7	12.3	28.0	28.7	45.2	5.0	12.8	28.5	0.3	0.6	0.4	△0.2
- 이전지출	408.7	416.3	46.6	132.0	32.3	31.7	429.8	56.7	152.9	35.6	10.1	20.9	3.3	3.9
- 자산취득	91.9	89.8	13.9	26.0	28.3	29.0	91.5	12.2	24.4	26.7	△1.7	△1.6	△1.6	△2.3
- 물건비	32.2	32.1	3.7	7.7	24.1	24.0	33.6	4.4	8.7	26.0	0.7	1.0	1.9	2.0
- 기타*	28.3	17.5	3.5	4.2	14.9	24.2	24.2	4.1	4.6	19.2	0.5	0.4	4.2	△5.1
- 세입세출외**	-	2.5	0.0	0.0	-	0.1	-	-	-	-	△0.0	△0.0	-	-

* 상환지출·예비비

** 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 1차 추경 기준으로 2차 추경은 국회 통과후 반영

3. 재정수지

◆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45.5조원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3.1조원 개선

■ 통합재정수지는 사보기금수지 흑자폭 축소*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확대(△3.0조원)

* 1분기 사보기금수지(조원, 누계) : ('19) 7.9 ('20) 10.0 ('21) 18.5 ('22) 12.3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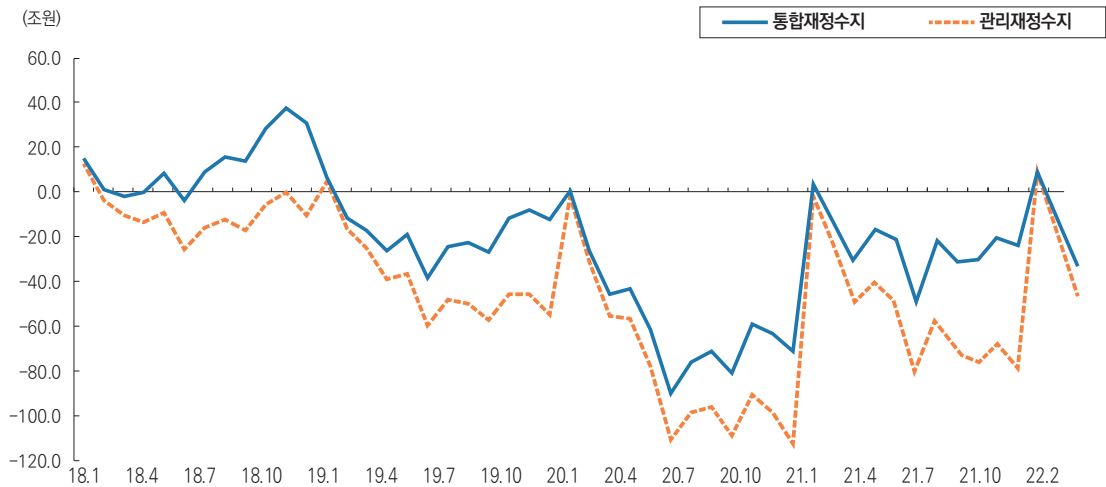
(단위: 조원, %, %p)

	'21년						'22년(잠정)				전년동기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C)	3월 (누계, D)	진도율		추경** (G)	3월 (H)	3월 (누계, I)	진도율 (J=I/G)	3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A)	514.6	570.5	55.0	152.1	29.6	26.7	553.6	64.3	170.4	30.8	9.2	18.2	1.2	4.1
■ 총지출(B)	604.9	600.9	72.4	182.2	30.1	30.3	624.3	82.3	203.5	32.6	9.9	21.3	2.5	2.3
■ 통합재정수지 (C=A-B)	△90.3	△30.4	△17.4	△30.1	-	-	△70.8	△18.1	△33.1	-	△0.7	△3.0	-	-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D)	36.2	60.1	8.9	18.5	-	-	40.0	7.4	12.3	-	△1.5	△6.2	-	-
■ 관리재정수지 (E=C-D)	△126.6	△90.5	△26.3	△48.6	-	-	△110.8	△25.5	△45.5	-	0.8	3.1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1차 추경 기준으로 2차 추경은 국회 통과후 반영

〈재정수지 추이(누계 기준)〉



4. 국가채무

◆ 1분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81.9조원으로 '21년 결산 대비 42.8조원 증가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전년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42.0조원(발행 53.3조원, 상환 11.3조원), **주택채** 잔액은 0.6조원(발행 3.9조원, 상환 3.2조원), **외평채** 잔액은 0.2조원* 증가

* 환율상승에 따른 외평채 원화 평가금액 상승분

(단위: 조원)

	'21년 결산	'21년(잠정)	
		1차추경	1분기
■ 중앙정부 채무	939.1	1,044.6	981.9
• 국채*	937.0	1,042.6	979.9
- 국고채권	843.7	948.4	885.7
- 국민주택채권	82.2	82.1	82.8
- 외평채권(외화)	11.2	12.0	11.4
• 차입금	2.0	2.0	2.0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1	0.1

*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94억원 포함

5. 국채시장

◆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8.9조원(경쟁입찰 기준 14.6조원)

❶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 통화긴축,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국고채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시장 변동성 확대

- 4월 중순 이후 금통위 개최, 추경안 제출(5.13)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으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에 따른 불안요인 상존

* 3년물(% , 기말) : ('21)1.798 ('22.1)2.189 (2)2.242 (3)2.663 (4)2.958 (5.16)3.046
10년물(% , 기말) : ('21)2.250 ('22.1)2.586 (2)2.675 (3)2.969 (4)3.242 (5.16)3.27

❷ 1~4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72.1조원 기록(연간 총 발행한도의 40.7%)

- 4월 국고채 발행실적은 총 18.9조원(경쟁 14.6조원) 수준이며, 4월 초에 크게 하락했던 응찰률은 4월 중순 이후 점차 회복 중

❸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자는 4월 중 2.2조원으로 37개월 연속 순유입을 지속하면서, 외국인 국고채 보유액도 4월말 174.8조원으로 역대 최고

* 外人 원화채 순투자자(조원) : ('20)+26.5 ('21)+63.9 ('22.1)+3.7 ('22.2)+4.2 ('22.3)+0.6
外人 국고채 순투자자(조원) : ('20)+23.3 ('21)+42.5 ('22.1)+4.3 ('22.2)+3.3 ('22.3)+1.0

〈국고채 관련 주요 통계〉

(단위: 조원, %)

		'21년말	10월	11월	12월	'22.1월	'22.2월	'22.3월	'22.4월
발행잔액(조원)		843.7	841.9	848.1	843.7	858.7	877.6	885.7	904.3
발행액(조원)		180.5	12.8	10.4	5.8	15.4	19.3	18.5	18.9
평균 조달금리*(%)		1.79	2.18	2.26	2.10	2.31	2.52	2.61	3.15
응찰률(%)		283%	278%	291%	277%	277%	277%	268%	254%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순투자)	164.1 (+42.5)	(+2.3)	(+2.6)	(+4.6)	168.4 (+4.3)	171.6 (+3.3)	172.6 (+1.0)	174.8 (+2.2)
	보유비중(%)	19.4%	18.7%	18.8%	19.4%	19.6%	19.7%	19.5%	19.3%

* '21년 말의 경우 '21년 평균 조달금리, 그 외 월평균 조달금리



II 기타 부문별 현황

1. 국유재산
2. 보증채무
3. 정부출자



1. 국유재산

◆ '22. 3월말 현재 국유재산은 전월 대비 0.9조원 증가한 1,312.1조원

- 행정재산(974.4조원)은 전월 대비 0.3조원 감소, 일반재산(337.7조원)은 전월 대비 1.2조원 증가

(단위: 조원, 잠정)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연간	연간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합 계		1,125.0	1,157.5	1,160.0	1,165.2	1,167.4	1,242.7	1,311.9	1,311.2	1,312.1
행 정 재 산 ¹⁾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km ²)	456.1 (4,999) (24,370)	476.8 (5,047) (24,427)	489.6 (5,067) (24,465)	490.0 (5,074) (24,484)	491.1 (5,079) (24,496)	547.7 (5,102) (24,540)	590.6 (5,110) (24,539)	591.3 (5,114) (24,547)	590.3 (5,114) (24,532)
	건 물	70.9	74.0	72.8	73.7	74.4	73.0	71.3	70.0	70.0
	공작물	287.5	285.7	285.9	287.5	287.7	294.4	301.4	301.3	301.9
	기계기구	1.0	0.9	0.9	0.9	0.9	1.2	1.2	1.2	1.2
	입목죽	5.8	5.4	5.5	5.5	5.5	5.4	5.5	5.5	5.5
	선박·항공기	2.8	3.0	2.9	2.9	3.0	3.4	3.7	3.7	3.7
	유가증권	-	-	-	-	-	-	-	-	-
	무체재산	1.1	1.2	1.3	1.5	1.6	1.6	1.7	1.7	1.8
	소 계	825.2	847.0	858.8	862.0	864.2	926.8	975.4	974.7	974.4
일 반 재 산 ²⁾	토 지 (필지수, 천) (면적, km ²)	28.7 (726) (788)	30.2 (770) (813)	31.1 (773) (816)	31.6 (777) (817)	31.4 (780) (818)	31.5 (780) (814)	39.1 (774) (814)	39.1 (775) (814)	39.1 (776) (815)
	건 물	1.8	1.9	1.9	2.0	2.0	2.1	2.1	2.2	2.2
	공작물	0.1	0.1	0.1	0.1	0.1	0.2	0.2	0.2	0.2
	기계기구	-	-	-	-	-	-	-	-	-
	입목죽	2.2	2.2	2.2	2.2	2.2	2.2	2.1	2.1	2.1
	선박·항공기	-	-	-	-	-	-	-	-	-
	유가증권	267.0	270.0	265.8	267.2	267.4	280.0	293.0	292.9	294.0
	무체재산	-	-	-	-	-	-	-	-	-
	소 계	299.8	304.5	301.2	303.2	303.2	315.9	336.5	336.5	337.7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22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ex) 청·관사, 도로, 하천 등

2) (일반재산)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

■ (국유재산 수입) 3월 중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전월 대비약 1,017억원 감소하였으며 2,106억원 규모

- 토지·건물·물품 등의 매각대 수입은 전월 대비 637억원 감소
-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수입은 전월 대비 30억원 감소
- 토지·건물·물품 등의 대여료 수입은 전월 대비 349억원 감소

(단위: 억원, 잠정)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연간	연간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합 계	37,236	38,022	2,815	2,401	1,292	2,580	3,198	3,123	2,106
• 매각대	28,478	29,624	2,640	2,009	1,199	2,176	2,555	2,544	1,907
- 토지, 건물 등 ¹⁾	20,535	21,955	1,940	1,330	672	1,299	2,543	2,531	741
- 기타고정자산 ²⁾	578	220	1	5	4	3	1	1	2
- 재고자산 ³⁾	7,363	7,447	699	674	523	874	12	12	1,163
- 유동자산 ⁴⁾	2	3	0	0	0	0	0	0	0
• 변상금 ⁵⁾	760	668	27	40	△22	103	92	92	62
• 대여료 ⁶⁾	7,998	7,730	148	352	115	302	551	487	138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d-Brain 기준) / '21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1)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축,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11, 712, 721, 722, 723목)

2)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포함) 매각수입(713목)

3) 양곡, 원자재, 비축물자 등 재고재산의 매각수입(731목)

4)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 수입(732목)

5)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에 수납한 변상금(571목)

6)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대여료(511, 512목)

■ (국유재산 취득·처분*) 3월 중 각 부처 취득·처분*으로 인한 국유재산 취득액은 9,875억원, 처분액은 1,986억원

* 취득·처분사유 중 가격재평가, 입력착오 등의 사유 제외한 주요 취득·처분 사유만 포함
(주요 취득사유) 매입, 교환, 기부채납, 출자, 국세물납, 국가귀속, 매립, 무주·미등록 재산 등록 등
(주요 처분사유) 매각, 교환, 무상양여, 무상귀속, 멸실 등

(단위: 억원, 잠정)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연간	연간	3월	6월	9월	12월	1월	2월	3월
합계	토지	취득	49,934	52,905	2,511	7,884	1,173	11,721	437	5,570	2,202
		처분	23,505	18,668	546	2,961	777	2,271	2,933	242	871
	건물	취득	50,496	49,709	2,183	4,337	1,610	12,804	419	104	267
		처분	1,884	5,410	3	482	323	2,613	3	-	27
	기타	취득	333,596	612,791	13,051	12,767	10,223	17,823	1,888	2,364	7,406
		처분	236,478	446,096	656	5,043	1,778	62,902	14	238	1,088
	계	취득	434,027	715,405	17,745	24,987	13,006	42,347	2,745	8,038	9,875
		처분	261,866	470,174	1,205	8,486	2,878	67,787	2,949	480	1,986
매매	토지	취득	7,928	8,431	806	421	122	2,687	176	576	1,191
		처분	16,300	15,967	538	400	298	1,659	647	221	740
	건물	취득	38,957	34,618	1,320	1,930	1,045	9,951	4	46	53
		처분	435	166	1	124	8	825	1	-	15
	기타	취득	268,230	568,754	12,952	12,512	9,983	16,732	1,693	2,203	2,162
		처분	236,105	446,043	655	4,982	1,637	62,876	14	237	1,086
	계	취득	315,115	611,803	15,079	14,863	11,150	29,371	1,872	2,825	3,407
		처분	252,840	462,176	1,194	5,505	1,943	65,361	662	459	1,841
교환	토지	취득	414	841	5	-	78	109	-	3	129
		처분	444	744	5	-	77	104	-	2	129
	건물	취득	29	56	-	-	-	-	-	-	-
		처분	26	46	-	-	1	8	-	-	-
	기타	취득	-	-	-	-	-	-	-	-	-
		처분	-	-	-	-	-	-	-	-	-
	계	취득	443	897	5	-	78	109	-	3	129
		처분	470	790	5	-	78	112	-	2	129
기타 (매매, 교환을 제외한 주요 취득·처분 사유)	토지	취득	41,592	43,633	1,700	7,463	973	8,924	261	4,991	882
		처분	6,761	1,957	3	2,561	402	508	2,285	19	2
	건물	취득	11,511	15,034	863	2,407	565	2,852	416	58	214
		처분	1,423	5,197	2	358	314	1,780	2	-	13
	기타	취득	65,365	44,037	98	255	240	1,091	196	161	5,243
		처분	372	53	2	61	141	27	-	-	1
	계	취득	118,468	102,704	2,661	10,125	1,778	12,867	872	5,210	6,339
		처분	8,556	7,207	6	2,980	857	2,314	2,287	19	16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d-Brain 기준) / '21년, '22년 자료는 잠정

** dBrain 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2. 보증채무

◆ 3월말 보증채무 잔액은 전월대비 0.01조원 증가*한 10.8조원

* 한국장학재단채권 잔액 1,400억원 감소(발행 1,000억원, 상환 2,400억원)

(단위: 조원)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1월	'22년 2월	'22년 3월
■ 보증채무	26.4	24.2	21.1	17.0	14.8	12.5	10.9	10.9	10.7	10.8
- 한국장학재단채권 ¹⁾	11.6	11.7	11.4	11.1	10.9	10.5	10.2	10.2	10.0	10.1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²⁾	-	-	-	-	-	0.5	0.8	0.7	0.7	0.7
- 예보채상환기금채권	14.7	12.6	9.7	5.9	3.9	1.5	-	-	-	-
- 수리자금	0.04	0.03	0.02	0.01	-	-	-	-	-	-

1) 한국장학재단채권: 학자금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장학재단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2년 보증한도 1.3조원, 3월말 기준 1,500억원 발행

2)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코로나19 위기 이후 기간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원리금 상환 보증으로서 '22년 보증한도 10.0조원('21년까지의 발행분 차감), 3월말 기준 발행실적 없음

3. 정부출자

◆ 3월말 정부출자금(162조 6,207억원)은 전월대비 3.6조원 증가

* 임대주택사업 지원을 위한 LH 출자(2.7조원), 고속도로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도로공사 출자(0.6조원) 등

(단위: 억원)

기관분류	'22년 2월말			'22년 3월말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공기업	384,227	792,433	1,176,661	384,448	827,738	1,212,186
준정부기관	41,638	1,066	42,704	41,788	1,066	42,854
기타공공기관	330,656	36,319	366,975	330,656	36,319	366,975
공공기관 외	2,581	1,611	4,193	2,581	1,611	4,193
합계	759,102	831,430	1,590,532	759,473	866,734	1,626,207

■ (대상기관) SOC, 에너지, 금융 등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총 39개 기관

(단위: 개)

구 분	SOC	에너지	금융	기타	계
기관수	14	7	7	11	39
업종	공항, 철도, 항만, 주택, 수자원	가스, 전력, 광물, 석탄, 석유, 송유관	은행, 주택금융, 해운금융	농수산물 유통, 관광, 조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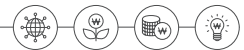


Ⅲ 주요 재정이슈

1. 그 간의 국유재산 개발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2. 주요국의 22년 예산 동향
3. 주요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운용현황
4.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의 지원 정책과 시사점
5. 기술안보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그간의 국유재산 개발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류중재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장

I. 그간의 국유재산 개발제도

국유재산이란 국토의 25% 수준을 차지하는 국유지와 청사와 같은 건물, 도로, 철도, 유가증권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유재산은 2016년 최초로 1,000조원 규모를 돌파하였으며,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오면서 2020년 약 1,160조원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8월경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그간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정책 환경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국유재산의 유지, 보존을 위주로 진행해오다가, 2000년대 이후 국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유재산 활용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2004년 공공기관에 위탁해 국유지를 개발하는 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다가, 보다 적극적인 개발·활용을 위해 2011년 이후 민간참여개발제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기금개발제도 등 다양한 개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했습니다.

2.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활용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라 국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립하고 국가산업을 지원하는 등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노후 청사 또는 관사를 단순히 재건축하던 틀에서 벗어나 새로 짓는 청관사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창업지원 공간, 생활 SOC 등을 복합 개발하는 사업을 다수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유휴 국유지에 공공주택용지, 법무타운, 인공지능·바이오 등 유망산업 육성공간을 조성하는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에도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복합개발의 일환으로 도심 가운데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면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마련하여 청년층 주거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총 16곳의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였으며 용산, 송파, 영등포, 종로 등 서울 도심과 안양, 성남 등 수도권 외에도 부산, 광주에도 사업지를 발굴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현재 광주 동구 복합청사가 완공되어 청년들을 위한 총 24호의 숙소를 제공하고 있으며, 16곳이 모두 완공될 경우 총 약 3,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청사+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영등포 복합청사	안양세관 복합개발
남양주 복합청사	관악등기소 복합개발
광주동구 복합청사	동작구 수방사군부지
서울지방병무청	성남 위례 군부지
부산남구 복합청사	남태령 군관사
종로 복합청사	용산 유수지
대방 군관사 복합개발	송파 ICT 보안클러스터
공릉 군관사 복합개발	부산연산5동 우체국

광주 동구 복합청사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개발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서울시 도봉구와 협력하여 도봉 세무서가 들어서는 건물에 헬스장, 수영장 등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SOC를 복합 건립하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복합개발 방식을 통해 청사를 청사로만 활용하였던 것을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국가정책 지원, 주민 편의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청사에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토지개발의 경우 교정시설 등 대규모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인해 유흡가 된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공주택 및 산업육성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경제를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16곳의 토지개발 사업지가 선정되었으며, 그 예로 의정부교정시설이 있었던 곳은 경기북부 법무타운으로 조성되는 동시에 공공주택과 창업공간이 마련될 계획입니다. 남양주 군부지가 있었던 부지에는 IT 기반의 신산업 육성공간과 함께 공공주택을 마련하고, 부산원예시험장이 있었던 부지에는 테마파크형 복합유통센터를 유치하는 한편,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과 공공주택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총 7곳의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으며, 9곳의 사업지는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업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토지개발 사업을 통해 총 2만호 규모의 공공주택 용지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봉세무서+생활SOC 조감



토지개발 사업대상지

의정부 교정시설	원주교정시설
남양주 군부지	창원교정시설
부산원예시험장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원주권 군부지	서울 대방동 군부지
광주교정시설	고양 舊 삼송초
전주지법·지검	수원 舊서울대 농대
대전교정시설	울산 덕하역 폐선부지
대구교정시설	광명 구 근로청소년 복지관 부지

3. 앞으로의 국유재산 개발·활용 계획

정부는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여 보다 적극적인 국유재산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거 및 청년 창업, 소상공인 및 국가 주요전략산업, 탄소중립 정책 등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유동성을 활용해 국유재산 개발 사업의 다양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참여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2014년 도입된 이후 활용되지 않았던 민간참여개발제도를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하여 민간 참여의 장을 넓히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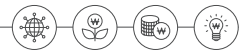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방식에 따른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지자체와의 협력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하면서 속도감 있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관리·처분 총괄청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기타 중앙관서와의 정책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개발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새로운 국유재산 정책방향은 금년 8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국유재산과 관련해 요구되는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총괄청으로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를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주요국의 2022년 예산 동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 본고는 최근 예산안이 발표된 미국, 캐나다, 호주 3개국을 중심으로 2022-23년 예산안에 제시된 각국의 재정 운용 방향을 검토하고자 함

1. 미국¹⁾²⁾

- (개요) 미국의 예산 주무기관인 관리예산처(OMB)는 2022년 3월 28일 '2023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을 발표함³⁾⁴⁾
- (예산 목표 및 편성방향) 국내 · 외 안보 및 안전 강화, 더 나은 미국 건설을 위한 투자, 세율 조정 등을 통한 재정책임 구현
- (경제전망) '22년 실질성장률은 전년(5.5%) 대비 1.3%p 감소한 4.2%로 전망하며, 이후 2025년에 저점(2.0%) 기록 후 장기적으로 2.3% 전망
 - 올해('22년) 실업률은 전년 대비 1.5%p 감소한 3.9%, 내년('23년)에 저점(3.6%) 기록 후 2025년부터 장기적 수준으로 3.8% 전망
 - 미국 경제의 2/3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구 소비의 실질 수치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팬데믹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출의 경우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낮은 회복(2021년 12월 기준)을 보임
- (재정전망) FY2023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1조 4,150억달러)대비 18.4% 감소한 1조 1,540억달러(GDP 대비 4.5%) 전망
 - (재정지출) FY2023 재정지출은 전년(5조 8,520억달러) 대비 약 1.0%(600억달러) 감소한 5조 7,920억달러(GDP 대비 22.7%) 계획
 - (재량지출⁵⁾) FY2023 총 재량지출 예산권한(budget authority)은 전년 대비 7.4% 증가한 1조 5,820억달러 계획
 - (의무지출) FY2023 의무지출(순이자지출 3,960억달러 포함)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4조 830억달러 전망
 - (재정수입) FY2023 재정수입은 전년(4조 4,370억달러) 대비 4.5%(2,010억달러) 증가한 4조 6,380억달러(GDP 대비 18.1%) 전망
 - GDP 대비 재정수입은 FY2028에 19% 수준에 도달한 후, FY2032까지 동일한 수치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향후 10년간 GDP대비 평균 수입비율은 18.8% 전망)

1) 구윤모 선임연구원

2) 출처: OMB,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2.3.28.; OMB,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 「Analytical Perspectives」, 2022.3.28.

3) 이하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주요국 예산안-미국[FY2023 대통령 예산안]」, 2022.5.의 주요 내용을 발췌함

4) 경제 전망 및 재정 전망의 전년 수치는 실적치가 아닌 추정치를 의미함

5) Base Discretionary Funding 수치 (Table S-7; Funding Levels for Appropriated Programs by Category)

- (국가채무) FY2023 연방정부 채무⁶⁾(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도(24조 8,360억달러) 대비 4.8% 증가한 26조 330억달러 전망 (GDP대비 수치는 감소 (FY2022) 102.4% → (FY2023) 101.8%)

〈표 1〉 미국 주요 경제 및 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단위: %)						
명목 규모(십억 달러)	22,899	24,631	25,853	26,966	28,064	29,200
실질GDP성장률	5.5	4.2	2.8	2.2	2.0	2.0
실업률	5.4	3.9	3.6	3.7	3.8	3.8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4.6	4.7	2.3	2.3	2.3	2.3
(단위: GDP 대비 %)						
수입	18.1	18.3	18.1	18.3	18.3	18.7
지출	30.5	24.1	22.7	22.8	23.1	23.3
재정수지	-12.4	-5.8	-4.5	-4.5	-4.8	-4.6
연방채무	99.7	102.4	101.8	102.2	103.1	103.7

자료: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1), 2022.3.28.

- (주요 재정정책) ①일자리 창출 및 경제 수용능력 증대 ②글로벌 위협 대응 및 미국의 리더십 회복 ③보건 인프라 강화 ④기후 위기 대응 ⑤경제 기회 확대 및 형평성(Equity) 추구 ⑥재정 건전화 등
-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수용능력 증대) 항만 및 수로에 대한 연방 투자를 통해 해상 화물 수송량 강화 및 도로 및 다리의 현대화 등
- (글로벌 위협 대응 및 미국의 리더십 회복) 전 세계의 민주주의, 자유, 안보 방어를 위한 미국 리더십 강화를 위해 약 18억달러 예산 배정 및 글로벌 보건 안보 과제에 106억달러 배정(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약 7억달러)
- (보건 인프라 강화) 미래 대유행 등에 대비한 보건 체계 확립 계획(주·지방 등에서도 신속한 대응 강화 지원)
- (기후 위기 대응) 연방 조달권한을 통한 미국산(American made) 탄소배출 제로 차량 수요 확대 및 기후 복원력 강화
- (경제 기회 확대 및 형평성(Equity) 추구) 지역사회 개발 보조금을 통해 취약 지역의 인프라 현대화, 경제개발 지원, 공원 생활 편의시설 조성 및 총기 범죄 대응 등 국내 범죄 예방을 위해 주·지방 정부의 범죄 대응력 지원

6) 정부 내부거래 제외

- (재정건전화) 재정책임 확보 수단으로 법인세율* 인상 및 부유세*(New Minimum Tax on Billionaires) 신설 계획

* 법인세율은 현행 21% → 28%로 인상, 부유세는 전체가구 중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최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최저세율 20% 신설 계획

2. 캐나다⁷⁾⁸⁾

* 캐나다의 FY2022 회계연도는 2022.4.1.~2023.3.31.이며, 연방정부는 2022년 4월 7일 2022 Budget을 발표함

- (예산기조) 캐나다 연방정부는 강력한 미래 경제 건설과 국민들의 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국민의 삶을 목표로 하는 2022년 예산안을 편성(「A Plan to Grow Our Economy and Make Life More Affordable」)
- (경제전망) 2022년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4.6%의 강한 반등에 이어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2026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2.9%로 전망됨
- (실업률) 2022년 실업률은 5.8%로 전망되며, 2023년 이후 전망기간 동안 5.5%까지 하락하여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물가상승률) 202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의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 예측됨에 따라 3.9%로 전망되나, 향후 2.0% 내외 수준으로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기대
- (재정전망) GDP 대비 재정적자는 FY2021-22에 -4.6%를 기록 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26-27에 -0.3%를 나타낼 전망
- (총수입) FY2022-23 총수입은 전년대비 140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4,084억 캐나다달러로 GDP 대비 15.2%를 기록한 이후 증가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총지출) FY2022-23 총지출은 전년대비 456억 캐나다달러 감소한 4,523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전망
- FY2022-23 프로그램 지출은 전년대비 476억 캐나다달러 감소한 4,254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5.8%), 이자지출은 전년대비 20억 캐나다달러 증가한 269억 캐나다달러(GDP 대비 1.0%)로 전망
- (연방채무) GDP 대비 연방채무(Federal Debt) 비율은 FY2022-23에는 45.1%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FY2026-27에 41.5%를 기록할 전망

7) 김진아 선임연구원

8) 캐나다 연방정부, <https://budget.gc.ca/2022/home-accueil-en.html>, 2022.4.7.

〈표 2〉 캐나다 주요 경제 및 재정 전망

(단위: %, GDP 대비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단위: %)						
실질GDP성장률	4.6	3.9	3.1	2.0	1.9	1.8
명목GDP성장률	13.1	7.7	4.8	3.9	3.8	3.7
실업률	7.4	5.8	5.5	5.5	5.5	5.5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3	3.9	2.4	2.2	2.1	2.0
(단위: GDP 대비 %)						
총수입	14.3	15.8	15.2	15.2	15.4	15.6
프로그램지출	27.6	18.9	15.8	15.3	15.0	14.9
재정수지	-4.6	-2.0	-1.4	-0.9	-0.6	-0.3
연방채무	46.5	45.1	44.5	43.8	42.8	41.5

출처: 캐나다 재무부, Budget 2022 Table A1.1, A1.4 일부 발췌, 2022.4.7.

■ (편성방향 및 주요 재정정책) 캐나다는 2022 예산안에서 주거, 기후, 일자리 및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정책을 제시

- (주거) 주택공급 확대, 생애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한 혜택 확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주택공급 확대 : 주택 가속화 기금 조성⁹⁾을 통한 주택 공급사업 추진, 신속 주택정책을 통해 6,000 가구의 저가 주택 공급 추진, 다세대 주택 개조 세액 공제¹⁰⁾ 도입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 포함
 - 생애 첫 주택구입자 혜택 확대 :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비과세 저축계좌¹¹⁾ 신설,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세액 공제 1만 캐나다달러까지 확대, 주택구입자들에게 일회성으로 500 캐나다달러 자금 지원 등 정책 시행 계획 발표
 - 부동산 투기 억제 : 단기간(12개월) 매매에 대한 양도차익 중과세 부과, 외국인 주택 구매를 향후 2년간 금지하는 등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 포함
- (기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오염저감 정책, 청정에너지 정책 추진,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확대
 - 오염저감 정책: 무공해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프로그램 2025년 3월까지 연장, 무공해차량 충전소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확장, 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정경제로의 전환 지원 등 오염저감을 위한 정책 제시
 - 청정 에너지 정책 추진 : 지역 간 송전 능력 강화 및 소형모듈 원자로와 같은 중요 청정 전력 프로젝트에 대한

9) 주택 가속화 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 : 연방정부는 2022-23 회계연도부터 5년간 40억 캐나다달러를 투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설하는 주택 세대당 인센티브를 주거나 주택건설 계획 및 진행과정에 대한 선행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빠른 주택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10만호 주택 공급이 목표

10) 다세대 주택 개조 세액 공제(Multigenerational Home Renovation Tax Credit) : 노인 또는 성인인 장애인을 위한 secondary suite을 건설할 경우 세액을 최대 7,500 캐나다달러까지 환급하는 정책

11) Tax-Free First Home Savings Account: 무주택자가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해 4만 캐나다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과세 계좌 제도

사전 개발 지원, 넷 제로(net-zero) 에너지 계획 수립 등 클린 에너지 관련 정책 지원에 투자

-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탄소배출 제로, 배터리 저장 및 청정수소 등 청정 기술에 대해 최대 30% 투자 세금 공제 계획 발표, 탄소 포집·활용·저장¹²⁾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적용¹³⁾

- (일자리 및 성장) 성장기금(Canada Growth Fund) 설립을 통해 민간투자 촉진, 캐나다 전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 구현, 캐나다 소규모 기업 연방세율 적용 대상 확대 등 일자리 및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 제시

- 성장기금 설립 : 중요 국가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150억 캐나다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성장기금을 설립하고, 저탄소 산업 및 신기술 육성에 투자하여 경제를 다각화하고 수출을 강화할 것이라 발표

- 유아교육 및 보육(early learning and child care)¹⁴⁾ : 2025-26까지 캐나다 전역의 모든 보육시설 하루 평균 보육비를 10달러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이며, 필요한 교육 및 보육 시스템 구현을 위해 유아교육 및 보육 기반 시설 기금에 투자할 계획

- 소기업 연방세율 적용대상¹⁵⁾ 확대 : 소기업 과세대상 자본 기준을 1,500만 캐나다달러에서 5,000만 캐나다달러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이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게 함

- 또한, 캐나다는 중요 광물전략(Critical Minerals Strategy)¹⁶⁾을 시행하기 위해 8년간 38억 캐나다달러를 지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글로벌 광물산업에서의 주요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 공언

- (기타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정책) 이 밖에도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부담의 덴탈케어 제공, 의료 지연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아동수당·노령연금과 같은 주요 수당 인상 등의 정책 포함

- 덴탈케어 : 연방정부는 연소득 9만 캐나다달러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국가보조 덴탈케어를 지원할 예정이며, 2022년 12세 미만 어린이를 시작으로 2023년 18세 미만과 노인·장애인, 2025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

- 의료지연 해소¹⁷⁾ : 연방정부는 의료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의료 교부금(Canada Health Transfer)에 20억 캐나다달러를 추가 배정

- 노령연금(Old Age Security), 소득보장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등 주요 수당들에 대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급여 인상

12) 탄소 포집·활용·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은 대기에 배출되는 CO2를 포집하여 저장한 CO2를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기술이며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기술로 꼽힘

13) 2022년부터 2030년까지 투자 세액 공제율 : 직접적으로 공기에서 CO2를 포집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 60%, 기타 CO2 포집하는 장비에 대한 투자 50%, 운송·저장·활용 장비에 대한 투자 37.5%이며, 2031년부터 2040년까지 세액 공제율은 절반수준으로 감소할 예정

14) 2021년 예산에서 연방정부는 5년간 유아교육 및 보육에 300억 캐나다달러 투자를 발표했으나 있음

15) 캐나다 연방 법인세율은 15%이나 사업소득 50만 캐나다달러까지는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9%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16) 캐나다는 주요 광물들이 풍부한 자원 공급국이나 대부분 먼 지역에 매장되어 있어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

17)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팬데믹 대응으로 70만건 이상의 일반진료가 지연 또는 취소된 것으로 파악

3. 호주¹⁸⁾

- 호주 정부는 2022년 3월 29일 FY¹⁹⁾2022-23(2022.7.1.~2023.6.30.) 예산안을 발표²⁰⁾
- (경제전망) 호주는 팬데믹의 지속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고, 특히 노동시장 및 소비 지출에서 예상보다 강한 모멘텀을 보이면서 지난 FY2021-22 MYEFO²¹⁾ 대비 경제 전망이 상향 조정됨
 - (경제 성장률) 소비, 기업 투자 및 수출 부문의 성장세로 실질 GDP 성장률은 FY2022-23에 3.5%, FY2023-24에는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예상보다 강한 소비 지출 및 고용 상황으로 인해 FY2021-22 실질 GDP 성장률은 4.25%로 지난 MYEFO 수치(3.75%)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
 - (리스크) COVID-19 유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급망 차질 및 물가 상승 압력은 세계와 국내 경제 전망의 주요 위험
 - 치명률이 높거나 백신에 내성이 있는 COVID-19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한다면 이는 국내 경제에 상당한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임
 - 호주는 러시아 무역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으나, 갈등이 고조되거나 장기간 유지된다면 이는 호주 경제에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것임

〈표 3〉 주요 경제 변수 전망

(단위: %)

구분	실적	전망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실질 GDP 성장률	1.5	4.25	3.5	2.5	2.5	2.5
고용 성장률	6.5	2.75	1.5	1.5	1	1
실업률	5.1	4	3.75	3.75	3.75	4
소비자물가지수	3.8	4.25	3	2.75	2.75	2.5
임금물가지수	1.7	2.75	3.25	3.25	3.5	3.5
명목 GDP 성장률	4.4	10.75	0.5	3	5.25	5

주: 실질GDP성장률은 연평균 증가율, 고용성장률·소비자물가지수·임금물가지수는 2분기(June Quarter) 기준 연간 증가율, 실업률은 2분기(June Quarter) 기준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p.6 〈Table 1.1〉, 2022.3.29.

18) 김은숙 선임연구원

19) Fiscal year: 회계연도

20) <https://budget.gov.au/>

21) Mid-Yea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반기 경제·재정 전망으로 보통 7월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12월경 발표

- (재정 전망) 성공적인 방역 정책과 COVID-19에 대응한 경제 지원이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오미크론 발병과 최근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재정은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재정수지) FY2025-26까지 5년 동안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는 지난 MYEFO 대비 총 1,036억 호주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FY2022-23 예산수지 적자는 지난 MYEFO 대비 209억 호주달러 개선된 780억 호주달러(GDP의 3.4%)가 될 것으로 예상
 - (채무) 경제 성장이 채무 비용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채무는 단기적으로 안정되고 중기적으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명목 GDP가 크게 증가하여 순 채무(Net debt)는 FY2020-21에 GDP의 28.6%, FY2021-22에는 27.6%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
 - * 2023년 6월 30일 기준, 순 채무는 GDP의 31.1%(7,149억 호주달러)로 추정되는데, 이는 지난 MYEFO의 GDP의 34.7%(7,731억 호주달러) 대비 낮은 수준
 - 총 채무(Gross debt)는 FY2021-22에 GDP의 39.5%에서 2025년 6월 30일 기준 GDP의 44.9%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4〉 예산총량(Budget Aggregates) 전망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실적	추정					
	2020-21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TOTAL
수입(Receipts) ¹⁾	519.9	556.6	547.6	585.2	615.2	643.9	2,392.0
GDP 대비 비율	25.1	24.3	23.8	24.7	24.7	24.6	-
지출(Payments) ¹⁾	654.1	636.4	625.6	641.7	662.3	687.0	2,616.6
GDP 대비 비율	31.6	27.8	27.2	27.1	26.6	26.3	-
예산수지(Underlying Cash Balance) ²⁾	-134.2	-79.8	-78.0	-56.5	-47.1	-43.1	-224.7
GDP 대비 비율	-6.5	-3.5	-3.4	-2.4	-1.9	-1.6	-
순 채무(Net debt) ³⁾	592.2	631.5	714.9	772.1	823.3	864.7	-
GDP 대비 비율	28.6	27.6	31.1	32.6	33.1	33.1	-
총 채무(Gross debt) ⁴⁾	817.0	906.0	977.0	1,056.0	1,117.0	1,169.0	-
GDP 대비 비율	39.5	39.5	42.5	44.6	44.9	44.7	-

주: 1. TOTAL은 FY2022-23부터 FY2025-26까지 수치의 합

1) 현금주의 기준

2) 현금주의 기준, 예산수지=수입-지출, 2020-21 이전은 미래기금(Future Fund) 순예상수익 제외

3) 채무(예금, 정부채권(시장가), 대출 및 기타 차입금)에서 자산(현금 및 예금, 선급금, 투자, 대출 및 출자 금액)을 차감

4) 정부채권(액면가)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p.75 (Table 3.2), 2022.3.29.

- (경제·재정 전략) 호주 정부는 강한 경기 회복과 저실업 목표를 달성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재정 전략을 “중기 재정 전략” 단계로 전환함

- 경제·재정 전략은 지속 가능한 민간 주도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미래의 충격에 잘 대응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
 - FY2021-22 예산안에서 “COVID-19 경제 회복 계획”과 “중기 재정 전략”을 제시한바 있음
 - * (COVID-19 경제 회복 계획) 고용 및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 및 소비자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 (중기 재정 전략) 채무의 안정과 감축을 위해 경기 성장에 집중하는 재정 전략
- “중기 재정 전략”으로의 전환은 긴급 재정지원의 시대는 지났고 채무 안정화 및 감소를 위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둔 재정 정상화가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 (예산 규모) FY2022-23 발생주의 기준 일반 정부 지출(accrual expenses)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6,285억 호주달러로 예상됨(〈표 5〉 참고)
 - 지출 감소는 COVID-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의 지원이 상당 규모 감소했기 때문
 - 현금주의 기준 일반 정부 수입(cash receipts)은 예상보다 강한 회복을 보인 노동 시장과 높은 원자재 가격으로 FY2021-22 MYEFO 및 예산안 전망치 대비 높게 나타남(〈표 6〉 참고)

〈표 9〉 일반 정부 재정 지출(expenses) 추정

(단위: 십억호주달러, %)

구분	2021-22 MYEFO	2022-23 예산안				
		수정	추정			
	2021-22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4-25
총 지출	633.8	639.6	628.5	643.8	665.4	686.8
전년대비 증가율	-5.6	-5.4	-5.0	-0.5	0.5	0.6
GDP 대비 비중	28.8	27.9	27.3	27.2	26.7	26.3

주: 1. 발생주의 기준

2. 전년대비 증가율은 실질 증가율을 의미하며, 이는 소비자물가 지수를 활용하여 산출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p.139 〈Table 5.1.1〉, 2022.3.29.

〈표 10〉 2021-22예산안 및 2021-22 반기경제재정보고서(MYEFO), 2022-23 예산안의 일반 정부 수입(receipts) 전망 변화 비교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추정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2021-22 예산안 수입(a)	482,053	494,000	532,855	571,969	*
변동(b-a)	50,077	22,449	17,399	19,196	*
2021-22 MYEFO 수입(b)	532,130	516,449	550,254	591,165	613,560
변동(c-b)	24,496	31,183	34,954	24,072	30,339
2022-23 예산안 수입(c)	556,626	547,632	585,208	615,237	643,900

주: 현금주의 기준이며, * 표시는 데이터 없음을 의미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p.116 〈Table 4.2〉, 2022.3.29.

- (편성방향) 더 많은 일자리 제공, 생활비의 선별적 지원, 지역 경제 강화, 의료 시스템 등의 필수 서비스에 대한 투자 강화, 국가 안보 및 회복력 있는 경제 투자 등 더욱 강력한 미래 건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
- (경제 강화) 소기업의 디지털화, 직업 훈련, 숙련 노동자의 이주 장려, 견습생 교육 및 국경 재개, 제조업 현대화 전략²²⁾ 등에 투자하여 더욱 강력하고 생산적인 경제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
- (생활비 지원) 생활비 지원 패키지(임시·선별적), 유류세 감면 등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
- (홍수피해 복구 지원)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의 홍수 피해에 대응하고 해당 지역의 복구를 위해 지원
- (지역 경제 및 인프라 투자) 4개의 주요 권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도로 및 철도 인프라 10년 계획을 시행하며, 지역 성장 및 생산성 촉진을 위해 지역발전 가속화 프로그램²³⁾을 수립
- (필수 서비스 보장) 동절기 COVID-19 유행에 대비하고, 보건 및 의료에 대한 연구, 노인 돌봄, 교육, 여성 안전, 격차 해소, 재향 군인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
- (불확실성 대응) 국가 안보 및 국방 능력에 투자하여 자국의 이익을 보호

〈표 11〉 FY2022-23 예산안 기능별 지출

(단위: 백만호주달러)

기능	추정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일반 공공서비스	33,121	26,518	25,514	27,159	25,821
국방	35,882	38,268	39,672	41,661	44,544
공공질서 및 안전	6,713	7,014	6,364	6,265	5,729
교육	43,357	44,788	46,034	47,353	48,977
보건	111,467	105,754	102,575	106,225	109,932
사회보장 및 복지	227,800	221,685	229,996	237,837	248,953
주택 및 지역사회시설	8,431	8,221	7,174	6,944	6,274
여가 및 문화	4,716	4,493	4,330	4,238	4,206
연료 및 에너지	8,444	9,381	10,647	10,922	11,347

22) Modern Manufacturing Strategy: 호주 제조업 역량 강화를 위해 6가지 중점 분야(자원 기술 및 주요 광물 처리, 식음료, 의료용 제품, 재활용 및 청정 에너지, 국방, 우주)에 대해 로드맵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 (참고: <https://www.industry.gov.au/sites/default/files/October%202020/document/make-it-happen-modern-manufacturing-strategy.pdf>, 검색일자: 2022.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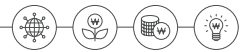
23) Regional Accelerator Program: 기반시설, 첨단제조, 견습 및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다각화하고 신규·기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능	추정				
	2021-22	2022-23	2023-24	2024-25	2025-26
농림·임업·수산	4,119	4,810	3,846	2,690	2,602
광업·제조·건설	4,310	4,781	4,616	4,012	4,081
교통·통신	16,070	18,915	20,570	18,020	12,739
기타 경제부문	23,631	13,155	10,919	10,716	10,431
기타	111,508	120,685	131,575	141,328	151,202
총액	639,569	628,469	643,833	665,369	686,839

출처: 호주 연방정부, Budget 2022-23, Paper No.1, p.141 <Table 5.3>, 2022.3.29.

주요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운용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1. 영국¹⁾

가. 영국의 지출검토(Spending Review) 제도²⁾

- (의미) 영국 재무부는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통해 정부 우선순위에 자금을 배정하고 지출한도를 설정하며 정부가 재원으로 달성할 주요 결과(outcome)를 규정함³⁾
 - 영국의 지출검토는 다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함으로써 중기 재정지출계획과 탑다운(Top-down) 예산이 결합된 예산편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⁴⁾
- (주기 및 계획 기간) 2004년까지는 3년의 계획 기간에 대해 2년마다 지출검토를 수립하였으나 이후에는 정치·경제적 상황을 반영해 계획 기간과 수립 주기가 변화
 - 영국의 다년도 지출검토는 향후 3~4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가장 최근 발표된 2021년 지출검토는 향후 3년 기간의 계획을 담고 있음
 - 2019년에는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단년도 계획을 발표

〈표 12〉 지출검토의 발표 시기와 계획 기간

발표일	계획 기간	지출한도 설정 연도	발표일	계획 기간	지출한도 설정 연도
1998년 7월	3년	FY1999-20 ~ FY2001-02	2013년 6월	1년	FY2015-16
2000년 7월	3년	FY2001-02 ~ FY2003-04	2015년 11월	4년 (5년)	FY2016-17 ~ FY2019-20 (FY2016-17~ FY2020-21)
2002년 7월	3년	FY2003-04 ~ FY2005-06			
2004년 7월	3년	FY2005-06 ~ FY2007-08	2019년 9월	1년	FY2020-21
2007년 10월	3년	FY2008-09 ~ FY2010-11	2020년 11월	1년	FY2021-22
2010년 10월	4년	FY2011-12 ~ FY2014-15	2021년 10월	3년	FY2022-23 ~ FY2024-25

주: 1. 2013년과 2019년은 ‘Spending Round’로 발표

2. 2015 지출검토에서 자원 DEL은 4년, 자본 DEL은 5년 기간의 지출한도를 설정

자료: Zaranko(2021), Table 5.1을 참고하여 작성

- (포괄 범위) 모든 정부지출을 대상으로 지출검토의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부처별 지출한도(DEL)’ 예산의 계획에 중점을 두고 있음

1) 한혜란 선임연구원

2) 참고자료: HM Treasury, “The government’s planning and performance framework,” 2021.6.14.; Keep, Matthew, Philip Brien, Brigid Francis-Devine, and Daniel Harari, *Background to the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 National Audit Office, *Spending Review 2015-Report by the Comptroller and Auditor General*, 2016.; Zaranko, Ben, “Spending Review 2021: plans, promises and predicaments,” *IFS Green Budget: October 2021*, 2021.; 하연섭·유승원,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방안 연구」, 2017.

3) National Audit Office(2016), p.12.

4) 하연섭·유승원(2017), p.105.

* 총 정부지출인 ‘총관리지출(TME)’은 ‘부처별 지출한도(DEL)’와 ‘연간관리지출(AME)’로 구성⁵⁾되며 각 지출은 자원(resource) 지출과 자본(capital) 지출로 구분됨

- 총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DEL 지출에 대해 다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계획
 - 공공서비스의 경상 운영 및 관리 비용이 포함된 ‘자원 DEL’ 지출과 정부 자산의 건설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지출이 포함된 ‘자본 DEL’ 지출을 구분하여 계획
- 2010년과 2015년 지출검토에서 일부 AME 지출이 지출한도에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평가됨⁶⁾
- (수립 절차) 지출검토는 수개월 동안 부처 및 재무부 담당자, 부처 장관 간 논의 과정(2015년 지출검토 과정은 <표 2>를 참고)을 거치며 외부 참여 절차도 마련되어 있음

<표 13> 2015 지출검토의 주요 과정

주요 절차	기간
지출검토 착수: 재무부가 부처에 지침·템플릿 제시(25%, 40% 지출 삭감 시나리오 제출 요청)	2015년 7월
부처들과 재무부의 비공식 논의	2015년 8월
부처가 수립한 초안을 재무부에 송부	2015년 9월
재무부 차관과 부처 장관의 회의/협상	2015년 9~11월
최종 결정(재무부 장관, 총리)/ 최종 지출검토 발표(재무부 장관)	2015년 11월

자료: National Audit Office(2016), pp.24~26.

- 관련 기관, 이해관계자, 개인 등이 정해진 기간 동안 재무부에 정책 관련 의견, 신규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을 제출할 수 있음
- 다만 지출검토는 입법 절차가 아니므로 의회의 공식적 역할이 없고⁷⁾ 의회의 공식 표결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음
- (구속력) 지출검토에 법적 구속력(legally binding)이 있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이후에 지출검토의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음⁸⁾
- 지출검토에서 설정된 부처별 지출한도를 이후에 재무부가 정부 우선순위의 변경을 반영해 예산안(Budget)⁹⁾에서 조정한 사례들이 있음

5) ‘부처별 지출한도(DEL: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s)’ 예산은 통제 가능한 지출로 NHS, 학교, 경찰 등에 대한 서비스 운영 지출이 포함됨. ‘연간관리지출(AME: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예산은 사회보장지출, 국가연금 지출 등 수요주도적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과 통제가 어려운 지출임

6) Zaranko(2021), p. 191.

7) Keep et al.(2021), p.9.

8) Keep et al.(2021), p.11.

9) Budget은 재무부 장관이 재정과 정부의 자세·지출 정책 변경안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법률로 지출권한을 확정하기 위해 매년 의회에 편성·제출하는 세출예산안(Supply Estimates)과는 다른 개념임

- 다만 부처 입장에서는 지출 한도 위반을 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어 부처들이 정해진 지출한도 미만으로 지출하는 경향이 있음¹⁰⁾
 - 지출한도 초과 시 소관 부처 장관이 재무부에 초과 규모, 원인, 시정조치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함
- (단년도 예산과 지출검토) 지출검토의 부처별 자금 배정을 바탕으로 각 연도 세출예산안(Supply Estimates)에서 정부의 지출 계획을 제시

나. 2021 지출검토의 주요 내용¹¹⁾

- (개요) 영국 재무부는 2021년 10월, 지출검토를 가을예산안과 함께 하나의 문서로 발표
 - 2021 지출검토에서 FY2022-23 ~ FY2024-25 기간의 부처별 지출한도와 권한이양지역(Devolved Administration)¹²⁾의 포괄 보조금을 설정
- (정책 방향) 정부는 2021 지출검토에 착수('21.9.)하면서 더 나은 재건, 국민의 우선순위 이행, 기업 및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방안을 지출검토에서 제시하겠다고 밝힘
 - 강하고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보장, 영국 전역의 균형 발전(Levelling up), 탄소 중립(Net Zero)으로의 전환 선도,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 비전 달성, 성장 계획(Plan for Growth) 이행 등을 중점 추진
- (지출 규모) FY2022-23부터 FY2024-25까지 총 3조 2,340억파운드를 지출할 예정
 - 이 중 총 DEL 지출은 이번 의회기간(FY2019-20~FY2024-25) 동안 연평균 3.8% 증가
 - 지출검토의 결과로 이번 의회기간 동안 모든 중앙부처의 예산이 증가(실질 기준)
- (지출 효율화) 정부는 지출검토를 통해 비효율적 지출을 절감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고 FY2024-25까지 중앙부처 경상예산의 5% 절감을 확정

2. 프랑스¹³⁾

- 프랑스는 EU의 안정·성장협약에서 합의된 국가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년도 공공재정계획법(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LPFP)을 통해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함¹⁴⁾
 - * 프랑스 재정법 체계에서는 중기재정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산 단년주의 원칙의 예외인 다년도 예산으로 취급함

10) Zaranko(2021), p.191, p.203.

11) 참고자료: Harari, Daniel, Lorna Booth, Philip Brien, and Matthew Keep,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A summary*, House of Commons Library, 2021.; HM Treasury, *Autumn Budget and Spending Review 2021*, 2021.; HM Treasury, "Chancellor launches vision for future public spending," press release, 2021.9.7.

12)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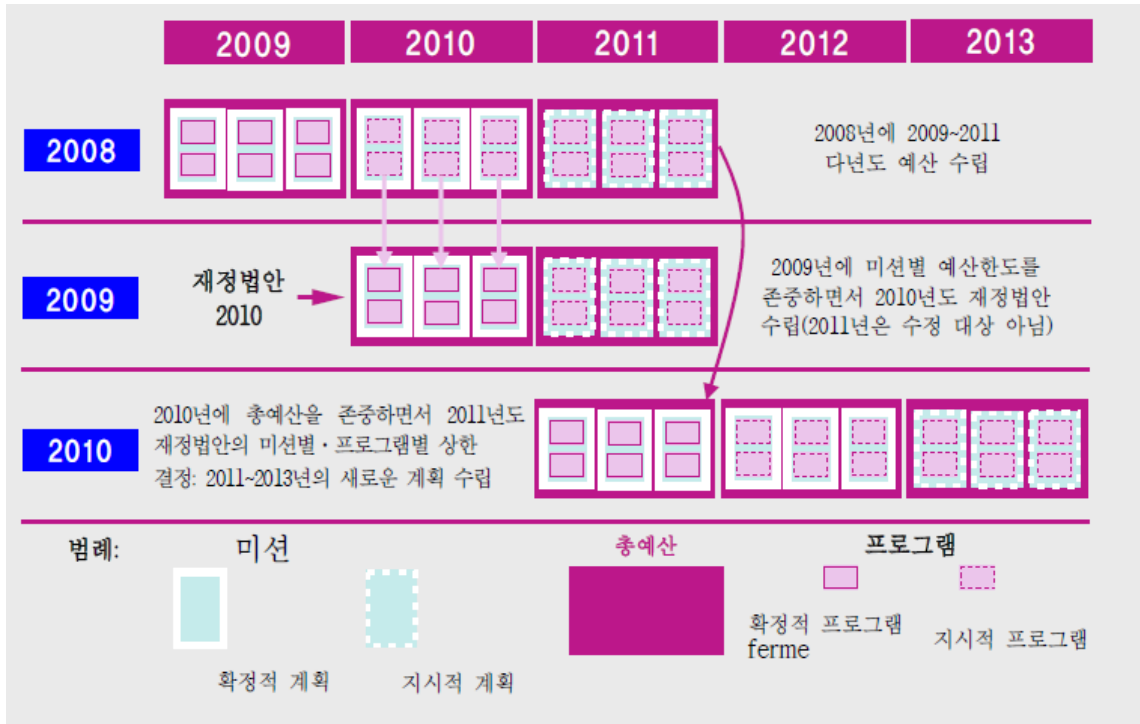
13) 염보라 연구원

14) 김은경,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와 김도승,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중기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프랑스 공공재정계획법률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10.을 참고하여 작성함

- 헌법 개정을 통해 2008년부터 법률형태의 공공재정계획법으로 다년간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시행중이며, 2년마다 3개년도의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함¹⁵⁾
 - 2009-2012년 공공재정계획법(Loi n° 2009-135 du 9 février 2009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pour les années 2009 à 2012)이 2009년 예산법안과 함께 제출되면서 최초로 시행됨
 - 중기재정계획은 법률안의 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며, 주요내용에 대한 위반 및 불이행은 위법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높은 책임과 구속력을 가짐
- 공공재정계획법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년도 재정의 방향을 정하고 공공회계의 균형목표를 규정함
 - 재무부의 경제전망국에서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거시경제상황을 예측하고 지출 한도를 설정하여 수립한 계획을 예산국으로 전달함
 -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목표의 전망은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수치를 대상으로 하며, 중앙정부의 3개년도 및 미션별 지출한도를 설정함
 - 국가채무는 프랑스 국채관리청(Agence France Tresor; AFT)이 발간하는 국가채무관리보고서에서 중앙정부 채무 중 양도성 채무(Outstanding Negotiable Government Debt)에 대한 정보만 포함함
 - 중기재정계획에서는 3개년의 지출한도와 미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여 1장에서는 주요내용, 2장에서는 관련 조항을 명시함
 - 첫 번째 장의 1절에서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목표와 전망, 2절에서는 부문별 재정지출 한도, 3절에서는 중앙정부 지출의 미션별 지출한도, 4절에서는 정부의 세입과 조세관리에 대한 내용을 다룸
 - 공공재정계획법의 이행을 위한 각 부문별 역할 등을 부속보고서에 기술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유사함
- 매해 단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시 공공재정계획법에 따라 예산안을 작성해야함
 - 해당 회계연도별 예산법안은 공공재정계획법에서 정하는 지출한도에 기속되어 있으므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증가율 등 재정목표 와 지출한도에 맞춰 예산을 반영해야함

15) 기존에는 중기재정계획 기간이 3년이었으나 2012년부터 5년으로 늘어남

[그림 3] 공공재정계획법과 단년도 예산편성과의 관계



출처: 「프랑스의 재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10., p.73 [그림10] 재인용

- (2018-2022 공공재정계획법)¹⁶⁾ 정부는 장단기 거시경제를 전망하고 정책우선순위의 이행을 위해 중기 재정 목표를 설정함
 - 지출조정을 통해 공공부채를 감소시키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재정구조 변화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재정지출의 GDP대비 3%p 이상 감축: 2017년 54.6% → 2022년 50.9%
 - 재정적자의 GDP대비 2%p 이상 감축: 2017년 -2.9% → 2022년 -0.2%
 - 국가채무의 GDP대비 5%p 감축: 2017년 96.8% → 2022년 91.4%
 - 조세부담률의 GDP대비 1%p 감축을 통한 가계구매력 증가, 중산층 보호 및 미래를 위한 투자: 2017년 44.7% → 2022년 43.6%
- 또한 EU의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매년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안정화 프로그램(Programme de stabilité)을 제출하고 있음
 - 중기예산목표(MTO)에 도달하기 위해 채택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국들은 향후 3년 동안의

16)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등 정치경제적 상황 악화로 이후의 공공재정계획법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임

재정계획인 안정화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이사회의 평가 및 권고를 받게 됨

- 프랑스 정부의 안정화 프로그램 계획안은 최고공공재정위원회(High Council of Public Finances, HCFP)¹⁷⁾의 의견을 수렴해 유럽집행위원회에 전달됨
- 안정화 프로그램에는 회원국의 예산, 성장, 고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거시경제 시나리오, 공공 재정 전략,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공공재정의 제도적 측면과 거버넌스 등의 목적을 통해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음

3. 독일¹⁸⁾

- 독일 연방 재무부는 중기재정계획(Finanzplan des Bundes)¹⁹⁾을 매년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²⁰⁾
- 1967년 경제안정 및 성장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r Stabilitä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StWG)²¹⁾ 및 1969년 예산원칙법(Haushaltsgrundsatzengesetz – HGrG)²²⁾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 당해 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 3년의 계획 등 5년 단위로 작성되며, 고정계획이 아닌 연동계획으로 매년 주요 거시경제 중기전망에 기초하여 새롭게 작성
 - 독일의 모든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서로 다른 정부 수준의 예산 및 재정 계획에 대한 조정은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에서 수행
- 중기재정계획은 의회에서 의결, 채택되는 문서는 아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과 함께 논의됨
- 중기재정계획과는 별도로 EU 회원국으로서 안정화 프로그램(Stabilitätsprogramm)을 매년 작성·제출²³⁾²⁴⁾

17) 최고공공재정위원회(HCFP)는 2012년 창설된 회계감사원 부속 독립 기관으로 주요 재정 문서(공공 재정 계획 법안, 재정 법안, 안정성 프로그램 등)와 관련된 거시 경제 예측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권한을 가지며 HCFP의 의견은 의회에 전달되어 예산 논의 및 재정 관련 법률에 관한 논의에서 고려됨

18) 박지혜 선임연구원

19) 연방 재무부, Glossar,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DE/Service/FAQ_Glossar/Glossar/Functions/glossar.html?lv2=f59e8c88-1592-444b-a813-c944663c56bf&lv3=585121a9-5abb-43ce-9c85-74bbf85ad843#glossar585121a9-5abb-43ce-9c85-74bbf85ad843, 검색일자: 2022.5.3.

20) 이명현, 『독일의 재정제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1.을 참고하여 작성

21) 연방 법무부, Gesetze im Internet,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abg/_9.html, 검색일자: 2022.5.3.

22) 연방 법무부, Gesetze im Internet, https://www.gesetze-im-internet.de/hgrg/_50.html, 검색일자: 2022.5.3.

23) European Commission, Stability and convergence programmes,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economic-and-fiscal-policy-coordination/eu-economic-governance-monitoring-prevention-correction/stability-and-growth-pact/stability-and-convergence-programmes_en, 검색일자: 2022.5.3.

24)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DE/Themen/Oeffentliche_Finanzen/Stabilitaetspolitik/Stabilitaetsberichte/stabilitaetsprogramm.html, 검색일자: 2022.5.3.

- EU 회원국들은 안정화 및 성장 협약(EU Stabilitäts- und Wachstumspakts)에 따라 EU 경제재무장관 협의회(ECOFIN)에 매년 자국의 중기재정계획을 제출해야 함
- 안정화 프로그램 보고서를 통해 각국이 구조적 재정 수지 분석(structural balance analysis) 및 지출 기준 제도(expenditure benchmark)를 기반으로 중기예산목표를 잘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
- 안정화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각 회원국의 중기 예산 목표, 중요 경제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 예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 설명, 주요 경제적 가정의 변화로 인한 예산과 부채에의 영향, 당해 연도 및 이후 3년을 포함한 5년 단위의 예산 정보 등

〈표 14〉 독일 중기재정계획 및 안정화프로그램 문서의 구성

	중기재정계획 2021~2025 목차1)	안정화프로그램 2022 목차2)
1장	2021~2025 거시경제 전망	요약
2장	2022 연방예산 및 2025년까지 재정계획	독일의 거시경제 전망
3장	연방 지출	독일의 재정 현황 및 정책(EU적 맥락)
4장	연방 수입	일반재정수지와 부채 전망
5장	연방 정부와 다른 공공 분야와의 재정적 관계	공공재정의 장기지속가능성

주1): 연방재무부, Finanzplan des Bundes 2021 bis 2025,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Web/DE/Themen/Oeffentliche_Finanzen/Bundeshaushalt/Haushalts_und_Finanzplaene/haushalts_finanzplaene.html, 검색일자: 2022.5.3.

주2): 연방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stabilitaetsprogramm-2022.html, 검색일자: 2022.5.3.

4. 미국²⁵⁾

- (개요) 미국의 중기재정계획은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 발표되지 않으며, 크게행정부와 의회로 분류되어 각자 중기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 있음
- (행정부 차원의 중기재정계획) 대통령 예산서의 일부로서 중기 전망치가 활용되고 있으며, 전망기간은 5개년과 10개년 주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의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서의 발표주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개로 구분 가능
 - ①(대통령 본 예산안의 중기계획) 미 연방법전*은 대통령의 본 예산(안)에서 예산안이 제출된 당해 회계연도와 후속 4년의 회계연도 기간 동안의 지출 추계 및 세출예산 수치를 제공하도록 규정(의무사항)하고 있으며, 당해 연도 예산정책으로 인한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및 기능별 지출에 대한 중기 전망치 활용
 - * 행정부의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기(매해 1월 첫째 주 월요일 ~ 2월의 첫째 주 월요일)는 미 연방법전 31편 1105조에 근거함

25) 구윤모 선임연구원

- 세출예산 또는 지출뿐만 아니라 당해 회계연도 및 그 이후 4년의 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정부의 세입(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관세 등) 추계도 의무화
 - * 세입전망은 예산안 제출 당시 효력이 있는 법규와 세입을 증가시키는 안을 근거로 하여 계산하도록 규정
- 연방정부 지출 전망은 재량지출과 의무지출로 구분되어 있으며, 연방 총 채무 및 순이자 지출 등이 포함
- (②대통령 수정 예산안의 중기계획) 대통령 본 예산안 제출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수정예산안(이하 MSR²⁶⁾)에서는 변화된 경제상황과 세출과 세입 추계치에 대한 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MSR이 제출된 회계연도 이후 4년간의 의무지출 프로그램 등에 대한 추계치를 제공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 * 행정부 수정 예산안의 의회 제출 시기는 미 연방법전 31편 1106조에 근거하여 매해 7월 15일까지로 규정
- 수정 예산안은 본 예산안 내용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형식으로 세입 및 세출 등의 예산 정보를 제공함

〈표 15〉 대통령 본 예산안의 중기재정 전망 예시

(단위: 십억달러)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Totals	
													2023-2027	2023-2032
Budget totals in billions of dollars:														
Receipts	4,047	4,437	4,638	4,874	5,076	5,406	5,696	5,969	6,227	6,500	6,795	7,083	25,690	58,264
Outlays	6,822	5,852	5,792	6,075	6,406	6,734	7,048	7,502	7,670	8,114	8,477	8,867	32,055	72,685
Deficit ²	2,775	1,415	1,154	1,201	1,330	1,328	1,352	1,533	1,443	1,614	1,682	1,784	6,364	14,421
Debt held by the public	22,284	24,836	26,033	27,271	28,644	29,988	31,368	32,923	34,388	36,022	37,727	39,542		
Debt held by the public net of financial assets	20,673	22,085	23,238	24,439	25,769	27,097	28,449	29,982	31,425	33,045	34,732	36,516		
Gross domestic product (GDP)	22,358	24,256	25,567	26,694	27,787	28,912	30,080	31,307	32,615	34,018	35,498	37,041		
Budget totals as a percent of GDP:														
Receipts	18.1%	18.3%	18.1%	18.3%	18.3%	18.7%	18.9%	19.1%	19.1%	19.1%	19.1%	19.1%	18.5%	18.8%
Outlays	30.5%	24.1%	22.7%	22.8%	23.1%	23.3%	23.4%	24.0%	23.5%	23.9%	23.9%	23.9%	23.0%	23.4%
Deficit	12.4%	5.8%	4.5%	4.5%	4.8%	4.6%	4.5%	4.9%	4.4%	4.7%	4.7%	4.8%	4.6%	4.7%
Debt held by the public	99.7%	102.4%	101.8%	102.2%	103.1%	103.7%	104.3%	105.2%	105.4%	105.9%	106.3%	106.7%		
Debt held by the public net of financial assets	92.5%	91.0%	90.9%	91.6%	92.7%	93.7%	94.6%	95.8%	96.4%	97.1%	97.8%	98.6%		

자료: OMB, Fiscal Year 2023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1), 2022.3.28

26) Mid-Session Review

〈표 16〉 대통령 본 예산안 이후 변화된 재정수치를 업데이트(Changes in Deficits from the Budget)한
수정 예산안의 중기 재정수지 전망 예시

(단위: 십억달러)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22- 2026	2022- 2031
2022 Budget baseline deficit	3,670	1,719	1,148	1,068	1,176	1,115	1,134	1,348	1,291	1,517	1,660		
Percent of GDP	16.7%	7.3%	4.7%	4.2%	4.4%	4.0%	4.0%	4.5%	4.2%	4.7%	5.0%		
Economic and technical reestimates:													
Receipts	-456	-238	-200	-221	-248	-266	-284	-308	-336	-367	-399	-1,173	-2,867
Outlays:													
Discretionary programs	-*	*	*	*	-*	-*	-*	-*	-*	-*	-*	*	*
Mandatory:													
Social Security	-5	18	34	42	46	50	52	55	58	61	65	190	482
Medicare	-10	11	22	34	38	42	46	50	51	57	60	147	410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21	23	24	24	24	25	26	28	29	30	116	254
U.S. coronavirus payments and tax credits	-32	-31										-31	-31
Premium tax credit	7	8	4	1	1	*	-*	2	4	5	5	13	28
Earned income tax credit	1	-1	*	2	2	3	4	4	4	5	4	6	27
Unemployment compensation	-122	-8	3	2	-1	*	-1	-6	-3	*	1	-3	-13
Medicaid	11	19	10	-5	-6	-10	-9	-1	-*	1	1	9	1
Other	12	*	1	2	*	-1	-1	-1	-1	1	1	3	3
Total mandatory	-138	38	98	102	104	108	115	129	141	158	168	450	1,161
Net interest ¹	39	23	45	88	121	139	140	138	128	108	92	416	1,022
Subtotal, outlays	-99	61	143	190	225	247	255	267	269	266	260	867	2,183
Total changes	-555	-177	-56	-31	-22	-19	-29	-41	-67	-102	-139	-306	-684
Mid-Session Review baseline deficit ...	3,115	1,542	1,092	1,037	1,153	1,096	1,105	1,307	1,224	1,415	1,522		
Percent of GDP	13.9%	6.3%	4.3%	3.9%	4.2%	3.8%	3.7%	4.2%	3.8%	4.2%	4.3%		

자료: OMB, Fiscal Year 2022 Budget of the U.S. Government, 「Mid-Session Review」, (Table 1), 2021.8.27.

- (의회 차원의 중기재정계획) 각 상임위에게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예산결의안을 지원하기 위해 CBO에서 발표하는 기준선 전망 보고서의 일부로서 중기 전망치가 활용되고 있으며, 전망기간은 5년과 10년으로 구분
 - (①예산결의안) 예산결의안의 경우 최소 향후 5년 동안의 연방 예산 총 규모 및 주요 기능별 세출 규모 배분 제시 등 예산편성 활동의 방향 설정의 일부역할로서 중기전망 활용* 의회 예산 결의안은 연방법전 2편 632조에 근거하여 매해 4월 15일까지 당해 회계연도와 함께 후속 4년의 회계연도에 대한 세출규모를 제시하여야 함
 - * 의회 예산 결의안은 연방법전 2편 632조에 근거하여 매해 4월 15일까지 당해 회계연도와 함께 후속 4년의 회계연도에 대한 세출규모를 제시하여야 함
 - (②기준선 전망) CBO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예산안이 발표되기 전인 매년 1월과 예산안 발표 후 3월에 발표하는 예산경제 기준선 전망 보고서에서 향후 5년과 10년으로 구분한 예산과 경제의 전망치 포함
 - * 기준선 전망은 1974년 의회예산법(Congressional Budget Act of 1974)과 1985년 균형재정 및 긴급적자 통제법²⁷⁾을 근거로 함

27) The Balanced Budget and Emergency Deficit Control Act of 1985

5. 일본²⁸⁾

- 일본은 2010년 6월 재정운영전략에서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한 후 2013년까지 3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을 발표하였으나, 현재는 구속력이 없는 중기재정전망만 발표하고 있음
- 2010년 6월 일본 정부는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의 달성을 위해 재정건전화 방안을 담고 있는 중장기 재정운영전략을 발표
- (배경) 버블경제 붕괴 후 거듭되는 감세정책과 오랜 경기침체로 세수입이 약 210조엔 줄었고,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짐(과거 20년간 국채잔고 약 470조엔 증가)
- (목표) 2020년 재정수지 흑자, 2021년 이후 장기채무 비율 안정화, 개혁진척 상황 공표를 목표로 함
 - (재정수지) 국가·지방의 기초재정수지는 2015년도까지 GDP대비 적자폭을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늦어도 2020년까지 흑자전환을 목표로 함
 - (채무 잔고) 2021년 이후 국가·지방의 GDP대비 장기채무 수준을 2010년 181%에서 안정적으로 감축시킴
 - (진척 상황 발표) 현재 및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매년 예산 결정 후, 각종 최신 재정지표와 재정건전화를 위한 진척 상황 등을 검증하여 공표
- (재정운영 기본원칙) 세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정책 도입 시 PAYGO원칙 도입, 매년 재정적자 감축, 사회보장비 등 구조적 재정지출에 대한 재원확보, 특별회계를 포함한 모든 세출 분야 사업 재검토, 지방재정 안정적 운영
- (중기 재정운영방침) 중기 재정전략을 위해 국채 발행 억제 등 세입·세출 운영방침을 제시
 - (국채 발행액 억제) 2011년 신규 국채발행액은 2010년 예산수준인 약 44조엔을 웃돌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의 신규 국채발행액 억제도 계획
 - (세입)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등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필요한 세입 확보
 - (세출) 2011년~2013년 전년도 당초 예산의 ‘기초적 재정수지 대상경비’ 규모(71조엔)를 실질적으로 웃돌지 않도록 하고, 지방 세출은 국가 전반의 세출 기조와 맞추어 지방재원 총액을 2010년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함
- 2013년 이후 매년 “경제재정의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²⁹⁾”을 통해 단년도 경제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고 구속력 없는 3년 단위 중기재정전망을 발표함
- (기본방침 개요)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은 지금까지 경제재생 및 재정건전화의 진행상황 평가와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
 - (중기전망 포괄범위) 중앙 및 지방의 기초재정수지를 전망
 - (총괄) 내각부에 의해 승인되며 정부 내에서 내부적으로 모니터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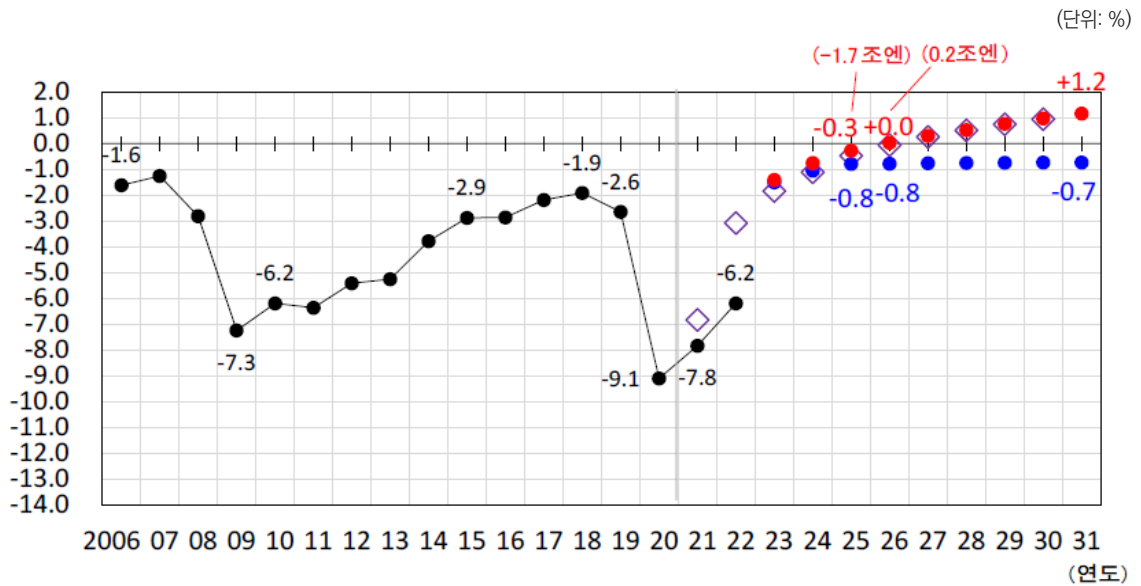
28) 강민채 선임연구원

29) 2001년 이후 각의(閣議)에 제출되어 의결되는 일본의 경제·재정정책으로 매년 6월경 내년도 예산안 및 세제개정안의 토대가 되는 기본 방침을 발표

- (재정정책 목표) 기초재정수지 흑자 달성과 함께 GDP 대비 채무 잔고를 안정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2013년) 중앙·지방정부의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적자를 2015년까지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2020년까지 흑자 전환, 그 이후에는 GDP대비 채무 잔고를 안정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2015년) 중앙·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를 2020년까지 흑자 전환하고, GDP대비 채무 잔고의 안정적인 감소
 - (2018년) 경제와 재정건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2025년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달성과 동시에 GDP대비 채무 잔고 안정적 하락 목표를 유지
 - (2021년) 현재는 2025년 중앙정부·지방 재정기초재정수지를 흑자화, 동시에 GDP 대비 채무 잔고의 안정적인 하락을 목표로 함
-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1’(이하 2021년 기본방침)(‘21.6.18.)에서 2025년 재정수지 흑자 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2022년 예산안(‘21.12.24.)에서도 2021년 기본방침에서 결정된 재정수지 목표 및 기조를 유지함
- 코로나19가 재정에 미친 영향을 검증하고, 2022년 회계연도 내에 재정수지 목표 달성 연도를 재확인할 예정
-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세출개혁 노력 유지
- 2022년 예산편성 지침에서 사회보장 개혁,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새로운 역할 부담, 디지털화를 통한 교육·과학 기술 개혁 등을 강조
 - 사회보장 관련 경비는 고령화 증가분만큼 실질 증가율을 설정하고, 일반세출 중 비(非)사회보장 관련 경비에 대해서는 경제·물가 동향 등을 감안하여 지금까지의 세출 개혁을 지속
 - 지방 세출 수준은 국가 일반세출 대응과 기조 내에서 교부단체 및 지방의 안정적 재정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 총액이 2021년도 지방재정계획 수준을 밑돌지 않도록 실질적인 동일 수준을 확보
- 녹색·디지털·지역 활성화, 아동·육아 등에 중점적으로 자원배분을 우선할 예정
- 최근 발표된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22.1.14)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추경 세출증가 등으로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나, 2026년 흑자화 전망(그림 참고)
- 2021년 기본방침 개혁³⁰⁾을 계속할 경우 흑자 전환은 1년 앞당긴 2025년 달성 전망
- GDP 대비 공채 등 잔고는 성장 실현 시나리오 하에서 전망기간 동안 감소할 전망

30)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실질 GDP 2%, 명목 GDP 3%를 웃도는 경제성장을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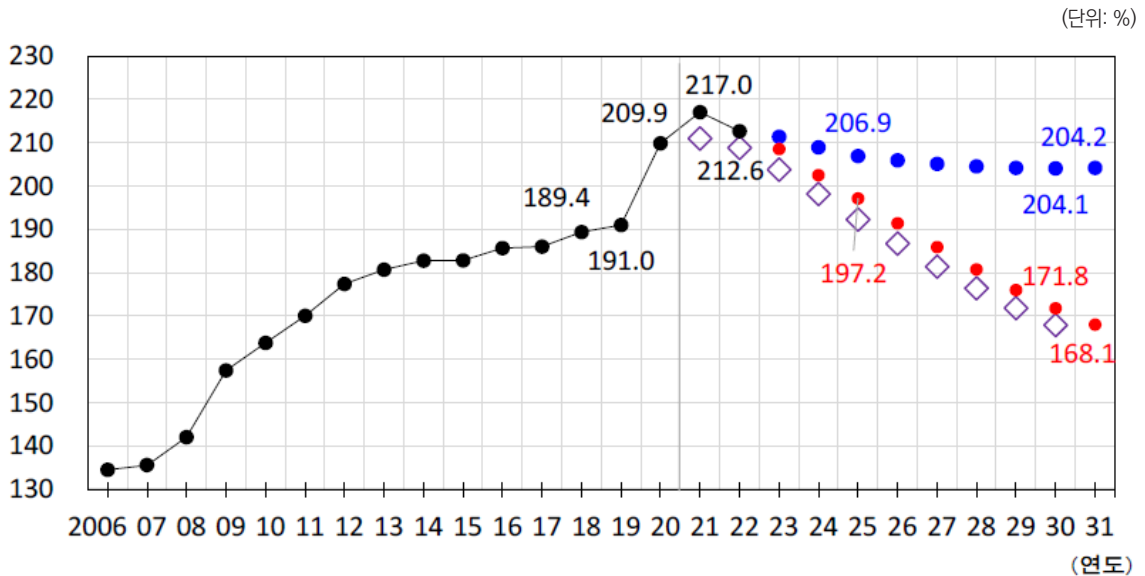
[그림 5] 국가·지방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주: 빨간점 - '성장 실현' 가정, 파란점 - '베이스라인' 가정, ◇ - '작년 7월 성장 실현' 가정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2.1.14.,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html>

[그림 6] 국가·지방 GDP 대비 공채 등 잔고



주: 빨간점 - '성장 실현' 가정, 파란점 - '베이스라인' 가정, ◇ - '작년 7월 성장 실현' 가정

출처: 일본 내각부, 中長期の經濟財政に関する試算, 2022.1.14., <https://www5.cao.go.jp/keizai2/keizai-syakai/shisan.html>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주요국의 지원 정책과 시사점



이금하 KOTRA 글로벌공급망실장

I. 공급망 안정화 정책 논의 배경

미국과 중국이 안보와 경제를 연계한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를 무기로 패권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무역 안보의 중요성이 부상했다. 냉전 종식 이후 GVC(Global Value Chain) 형성을 통해 높은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제가 움직여 온 상황에서, 상대국에 대한 기술 경쟁력 유지,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한 의존성 해결, 즉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2020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반도체 대란, 2022년 들어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에 따른 봉쇄조치는 주요 권역 및 국가의 공급망 우려를 가속시키고 있다. 전 세계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해 온 글로벌 분업화가 상호의존성이라는 무기가 되어 돌아와, 주요 국가들은 공급망 재편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공급망의 변화와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2021년 하반기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GVC를 되돌아보고 우리 공급망 안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신정부 역시 경제 활력 창출을 위해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 안정적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바, 본고를 통해 미국을 필두로 EU, 일본 및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주요국·권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가. 미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투자 부족, 아웃소싱 및 오프쇼어링 등 미국의 누적된 공급망 약점이 수면위로 부상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한 달 만인 2021년 2월 24일 America's Supply Chain(E.O. 14017) 행정명령에 서명, 미국의 산업 공급망 재점검을 지시했다. 이후 2021년 6월 8일 백악관은 100일 공급망조사보고서를 발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산화 및 동맹국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조달처 다변화, 국가안보, 경제안보, 기술우위에 필수적인 탄력적이고, 비상시에 빠르게 회복 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2022년 2월에는 미국 공급망 행정명령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평가하고, 6개 주요 산업 분야의 공급망을 분석한 〈Executive Order on America's Supply Chains: A Year of Action and Progress〉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이 ①물류·운송, ②식품 및 농산품, ③ 반도체, ④의료, ⑤주요 광물, ⑥대용량 배터리 등 6개 부문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공급망 불안을 잠재우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였다. 반도체의 경우, 지원 법안을 마련하고 생산 장려를 위한 자금 지원에 상·하원이 합의했으며, 미국 내 제조라인(Fab) 건설 및 확장을 위해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8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이끌어냈다. 대용량 배터리 원자재 및 소재 가공 프로그램에 30억 달러 투자가 이뤄진 것 역시 큰 성과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 공급이 불안정한 광물을 연방 핵심 광물 리스트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희토류의 분류·정제 시스템 구축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유치도 이루어냈다.

향후 미국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신규 정책은 행정부의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및 각 부처의 생산·수출 지원 확대를 통해 핵심광물과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먹거리 산업을 지속 발굴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9년까지 미국산 제품 인정 기준인 미국 부품 사용 비율을 75%까지 확대하는 바이아메리칸(Buy American)을 강화하여 자국 중심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을 도모하는 가운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美-EU 무역기술위원회(TTC), 쿼드(Quad) 등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가 전망된다.

나. EU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EU는 미래 핵심 산업의 전체 밸류체인에 걸쳐 자립화를 추진하기 위해 EU집행위 주도로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역내 공급망을 우선 구축 중이다. EU는 일찍이 2014년부터 역내 공급망

연합 구축 프로그램인 IPCEI(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 Interest, EU 공통관심 주요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별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보조금을 지원하여 추진해왔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2017년 EU 회원국 주요 기관, 정부, 기업, 연구소 등 500여개사가 결집하여 EU 배터리 연합을 출범시킨 것을 시작으로 IPCEI 프로젝트를 2회에 걸쳐 선정, 2025년까지 연간 700만대 이상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셀 자체 생산을 목표로 역내 배터리 산업 발전을 추진 중이다. 유럽의 25개 배터리 공장 프로젝트 완료시 2030년 연간 500GWh 규모 생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원규모는 총 61억 유로로 배터리 원료·소재, 셀, 시스템 및 재활용·지속가능성 등 4개 분야를 중점 지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12개국의 42개사가 프로젝트에 참가 중이다.

또한 EU는 고성능 반도체를 개발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를 역내에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IPCEI 프로젝트를 통해 17.5억 유로를 지원, 민간투자 포함 시 500억 유로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효율성, 전력 반도체, 센서, 측정장치, 반도체 재료 등 5개 분야를 중점 지원하게 된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4개국 29개사가 참가한다. 현재 2차 프로젝트가 준비 중에 있으며, 약 20개국에서 다수의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재 역내 자발적 공급망 실사 체계로는 인권 및 환경보호 등 ESG 관점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전 공급망에 걸쳐 기업 활동의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완화하고, 제거 조치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 한다. 인권·환경에 대한 기업 내부 정책 수립, 영향 파악, 예방, 대응, 불만 접수 이행사항 공개 등을 EU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역내 기업과 제3국 기업은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는 공급망 전 단계에 걸친 노동 및 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공급망 관련 新무역장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다. 일본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일본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은 아베 내각 이후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안전보장전략의 하나다.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라 2020년 상반기에는 중국 기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리쇼어링 지원에 주력하였으나, 2021년 이후로는 반도체, 배터리 등을 전략물자화 하는 방향으로 국내 공급망 강화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경제안전보장 관련 기금 설치로 2021년 11월 5,000억엔 규모로 결정되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21년 6월과 7월에 핵심 전략물자인 반도체와 배터리 전략을 잇따라 발표하였다. 우선 반도체 공급망 전략은 일본 내 반도체 양산체제 구축, 차세대 첨단 반도체의 설계·개발 강화, 반도체 기술의 그린이노베이션과 국내 반도체 제조 기반 재생을 목표로 한다. 그 성과로서 첨단 반도체 양산을 위해 대만 TSMC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고, 2021년 11월에는 TSMC의 일본 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비용 8,000억 엔 중 절반을 일본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침이 확정되었다. 한편, 배터리 공급망 전략은 일본 국내 첨단 배터리 공장입지 확충, 연구개발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반도체 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활용하여 차량용 첨단 배터리 공장을 일본에 건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세계 각국이 전략물자 확보와 중요 기술 획득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경제안전보장은 내각의 중요 과제임을 강조, 내각부에 경제안보 사령탑인 ‘경제안전보장담당실’을 신설했다. 또한 2022년 4월 중의원에 이어 5월 11일 참의원에서 최종 가결된 ‘경제안전보장법’을 토대로 ‘특정 중요 물자’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 반도체·배터리·희토류·의약품 등의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동 법 근거 에너지 등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 제품 사용여부의 사전 심사가 가능케 되기에, 대중 견제 등을 통한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에 실효성을 보이게 될지가 주목된다.

라. 중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

중국은 수입 중간재 대신 자국 제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수출하고 더 나아가 중국 중심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겠다는 ‘홍색공급망’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을 상징하는 ‘홍색(붉은색)’을 사용한 용어로, 자급자족 가능한 중국 내 공급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체적으로 원료에서부터 제품까지 완결한다는 중국의 수직계열화 시스템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용어다.

중국 정부가 2015년 핵심 부품과 원자재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계획에 홍색공급망 전략이 명확히 드러난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는데, 당시 미국 트럼프 정권은 중국 정부가 반도체 등과 같은 첨단 제조업 분야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산업육성정책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중국 제조 2025’의 폐기를 요청했다.

한편 최근 중국은 양회와 14·5 계획(제14차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미국 정부가 폐기를 요청했던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사실상 부활시키고, 미국의 간섭과 제재를 덜 받는 첨단산업의 자국 내 공급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첨단산업의 내수 시장 적용을 확대하고 부품과

장비를 내재화하는 전략에 착수한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2014년 9월 발표한 ‘집적회로 산업발전진흥개요’에 의거해 2019년 10월 ‘국가 IC(집적회로) 투자 기금 2기’를 설립하여 운용 중이고, 첨단 프로젝트 추진 기업 대상 소득세 감액 등 다양한 산업 육성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주요국 및 권역의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문제의식은 자국·역내 첨단 생산역량의 부재이다. 세계 각국이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으로 분업화를 심화함에 따라 GVC 상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만 집중했고, 그 결과 자국·역내 제조업이 붕괴되었다는 인식이다. 소재, 부품 공급선 확대 등 공급망 안정을 국정과제 우선순위로 두고, 산업정책을 통한 새롭고 넓은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펼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시점이다.

산업 성장전략과는 별개로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최근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각한 품목 공급망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 국가 또는 기업이 단독으로 공급망 전체를 구축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는 미국과 그 주요 동맹국 및 파트너국이 핵심 병목지점으로 이 점이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 정책을 자극하고 있다. 배터리는 한, 중, 일이 고루 최종제품 글로벌 시장을 점하고 있지만, 다운스트림으로 갈수록 탈 중국은 어려운 형국이다. 희토류 역시 중국의 강점이 두드러진다. 산업 특성상 절대적인 분절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 또는 파트너국가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기반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이 미국, 호주, 인도와의 쿼드(Quad) 중심 공급망 강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참고하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을 통해 안전보장 우려가 적은 국가들과의 국제협력의 틀을 활용하는 것 역시 방법이다.

한편 경제 및 무역이 국가 안보로 직결되는 상황이 심화되어, 주요국·권역이 더욱 적극적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존의 안보 목적의 품목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까지 전략물자화 될 수 있기에 더욱 폭 넓은 공급망 안정화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 또한 주요국·권역이 자체 공급망 구축을 강화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분야의 경쟁도 격화될 수 있기에, 공급망상 핵심지점을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 참고문헌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1~11호, 2022. 2.~5.

전략물자관리원, 세계공급망 재편동향과 무역안보상 영향 분석, 2021. 10.

KOTRA, 미국·EU 정부 미래산업 공급망 구축 동향 및 전망, 2021.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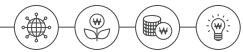
KIEP, 일본의 경제안정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2021. 11.

KIEP, 2022년 양회를 통해 본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2022. 3.

KOTRA, 중국 반도체 시장 동향: 자국 공급망 강화 추세, 2022. 2.

RIETI 戸堂 康之 ファカルティフェロー, 経済安全保障の焦点 過度な国内回帰、供給網弱く, 2022. 3.

기술안보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조용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I. 배경 및 정책 추진 경과

지난 2022년 3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인력양성,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지정, 국가전략기술원 설립, 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및 기간단축 등 특례, 특별회계 설치 등 우선 정책 지원을 통해 국가필수기술을 선제 육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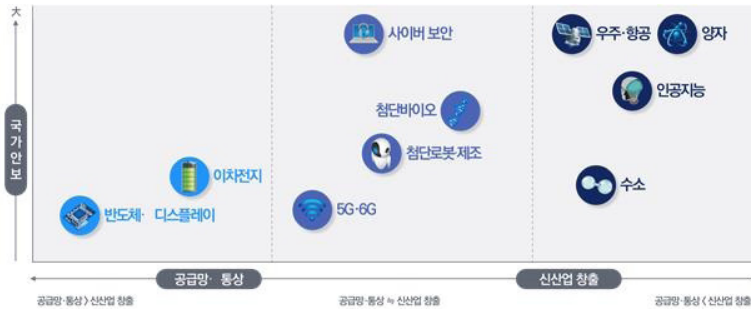
이번 발의 법률의 기초가 되는 안건은 2021년 12월 23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전략’이다. 국가 필수전략기술 개념을 정의하는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관점에서 국민경제적 및 외교적·안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체계를 강조한 이 문건은 기술 육성·보호 종합전략 수립 및 관련 R&D에의 과감한 투자, 제도 및 거버넌스 정비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5G 등을 제외하면 아직 국제적으로 추격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기술 패권 경쟁에서 지렛대로 활용할 만한 원천기술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일례로 최고 기술국 대비 국가별 기술 수준을 보면 양자(量子)는 중국 93.2%, 일본 90.4%, 한국 62.5%이며, AI의 경우 중국 91.8%, 일본 88.2%, 한국 87.4%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AI,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개를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고 관련 육성·보호전략을 발표하게 되었다. 이들 기술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최고 기술국 대비 90%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그림] 10대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 전략적 포지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각각 ‘국가전략기술’¹⁾ 및 ‘국가첨단전략기술’·‘핵심전략기술’²⁾에 대한 지원과 보호 내용을 담은 법률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각 부처들의 전방위적 정책적 움직임의 이면에는 미·중 전략적 패권경쟁에서 비롯된 국제질서의 재편과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기존에 국제정치, 국방 등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던 전통적 안보의 영역이 식량, 보건, 최근에는 경제 및 기술의 비전통 영역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기술-경제-안보가 일체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COVID-19 팬데믹 사태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미·중 패권경쟁에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GVC)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제사회는 바야흐로 ‘확장된’ 안보를 중심으로 동맹국 간 블록을 형성하면서 소다자주의 내지는 각자도생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2. 기술·경제안보에 대응하는 각국의 동향

이와 같은 미·중 패권경쟁의 이면에는 패권국과 패권도전국 간의 산업·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현상으로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 본질에는 다른 아닌 과학기술을 둘러싼 기술혁신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미·중 간 차세대 글로벌 패권을 두고 정치외교, 산업·경제, 군사, 과학기술 등 전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이 국제 패권경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에서 ‘기정학(技政學, Techno-politics)’의 국제질서 시

1) ‘조세특례제한법’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산업법)

대가 도래하고 있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AI, 로봇, 양자, 우주, 6G 등 핵심분야 첨단기술을 선점 및 우방국 중심의 기술블록화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글로벌 탈동조화(Decoupling) 추세 확산으로 국가 간 무역 갈등, 자국 우선주의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對중국 견제를 위한 동맹국과의 연대 협력을 통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영향력이 큰 신흥·와해성 기술(Emerging and disruptive technology)이 융합적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對중국 견제 강화를 통한 국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대규모 정책지원 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장경제·해양민주주의 국가 간의 기술-경제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무역통상법 301조3)에 따라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IP) 침해여부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화교자본이 장악한 BROADCOM社の QUALCOMM社에 대한 인수합병(M&A)을 금지한 행정명령 역시 국가안보를 이유로 社기업 간 자본거래를 제한한 대표적 사례이다.

이렇게 촉발된 對중국 견제는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도 강화되어 왔다. 美 상원은 2021년 6월 ‘미국 혁신경쟁법’4)을 발의하여 통과시켰다. 미래기술 및 과학연구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패키지 법안이다. 이 법안은 2,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 내에 과학기술 발전, 무역, 국가안보, 산업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는 패키지 법안으로 상원 6개 상임위원회로부터 도출된 6개 법안(Division으로 구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美 하원은 2022년 2월 ‘미국 경쟁법’5)을 의결했다. 반도체 산업 지원 및 첨단기술 육성, 미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의 국제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4자 안보동맹인 QUAD6)와 5자 안보동맹인 Five-eyes7) 외에도 호주-영국-미국 간 삼각 안보협의체인 AUKUS를 2021년 9월에 결성한 바 있다. 또한, EU와 무역기술위원회(TTC)를 만들어 2021년 9월에 1차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2022년 5월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하여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비롯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획이다.

EU의 경우 기술안보와 관련하여 미국과 TTC를 설치하여 산업 분야 6개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공조 강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EU 역외 의존도가 높은 원자재, 배터리, 의약품원료, 수소, 반도체, 클라우드

3)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미국 권리 침해시 업계 제소 및 USTR (U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자체 조사에 따른 협의 또는 관세 부과 보복조치를 규정

4) USICA: 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5) ACA: America Competes Act of 2022

6)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정기적 정상회담, 정보교환, 군사훈련 등 전략대화 협의체로서, 2007~2008년에 결성되었고 2017년 11월 재시작

7)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의 정보동맹으로서 1941년 결정

드·엣지컴퓨팅을 육성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기술자립화 및 유럽이 직면한 핵심 사회 현안에 대한 해법 제시 등을 추진중이다. 또한, EU 영업비밀 보호지침⁸⁾에 따른 산업상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영업비밀의 정의, 적법·불법취득, 사용·공개, 보호방법·수준, 구제방안 등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독일은 이러한 EU 지침을 수용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보호에 대하여 그간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분리하여 2019년 ‘영업비밀보호법’의 별도 법률을 제정하였다. 영국의 경우, 국가안보 및 투자법 제정과 함께 기업투자 규제, 대학 등 연구보안 강화를 위해 2021년 4월 ‘국가안보 및 투자법’⁹⁾을 제정한 바 있으며, 민감 분야의 활동을 실시하는 기업·투자자의 거래에 대해 영국 정부에의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여 심사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역시 경제안보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안보 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1년 4월에 개최된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과학기술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약속하였으며 5G·6G 및 Open-RAN(개방형 무선 액세스 네트워크)을 중요 협력 부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반도체와 같이 국제정세에 민감한 공급망에서 강력한 팀웍 기반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對美 파트너십 강화 외에도 10대 핵심기술 관련 경제안보가 강조되고 있다. 인공지능, 바이오, 재료, Beyond 5G, 슈퍼컴퓨터, 양자, 반도체, 우주시스템, 에너지·환경, 건강의료 분야가 그것이다. 이러한 국가안보 관련 기술 분야별 선별 전략에 대한 정량 분석과 함께 전문가의 의견 등을 근거로 신속한 지정·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과 동시에 ‘경제안보상’ 직위를 신설하고, 내각 관방에는 ‘경제안보법제준비실’을 설치하여 경제안보상 주관 하에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 추진을 위하여 2020년에 이미 자민당 내 ‘新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가 중심이 되어 ‘전략적불가결성’과 ‘전략적자율성’ 개념을 기치로 내건 ‘(가칭)경제안전보장일괄추진법’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2022년 2월에 제출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3월 17일부터 중의원에서 심의를 시작하였다. 동법에서는 특정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확보, 특정 핵심 인프라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확보, 특정 중요기술의 개발 지원, 비밀 특허제도 재도입을 주요 골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 R&D에 대한 기술통제와 국가안보국·공안조사청 등 기술보호를 위한 조직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래 선도를 위한 7대 과학기술 및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의 전략적 집중화를

8) DIRECTIVE (EU) 2016/94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2016년 8월)

9)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정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021년 3월 개최된 양회(两会)¹⁰⁾에서 ‘14.5규획’을 발표하면서 기술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2025년까지 장기적 육성이 필요한 7대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전략적 기술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개발·집중·육성이 시급한 8대 전략적 신흥산업 지정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14.5계획 요강에서는 우위 자원에 집중하여 반도체를 비롯한 다분야의 핵심기술을 공략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2021년 3월).

또한, 그간 중국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령에 있어서 수출통제에 관한 기본법이 부재하다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수출통제 관련 내용들이 다양한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어 법령 간의 체계성과 통일성이 부족하였고 유관 법령들 간의 모순 및 충돌로 인하여 제대로 된 집행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포괄적이고 통합된 수출통제 법안을 제정하여 민감한 물질과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고 중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수출통제법’이 2020년 10월에 제정됨에 따라 통일된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제 적용 체계가 마련되었다. 해당 법률은 수출통제의 범위, 수출통제리스트, 임시통제, 전면통제, 수출자의 자격 및 수출허가제도, 최종사용자 및 최종용도 관리, 역외적용 및 대등한 보복 조치 등을 포함하는 총 5개의 장과 49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수출통제법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등 국제협력의 증가와 2018년 제정되어 중국 제재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미국 수출통제법(ECRA)¹¹⁾ 등 이슈에 국가안보 차원의 적극 대응의 취지를 담고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정책방향

윤석열 정부는 공약과 110대 국정과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업·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로 확장된 국가안보 개념을 강조하고 국가적 정책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정세에 대해 비교적 타당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 필수전략기술 관련 정책

10) 전국인민대표대회(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会, 약칭 전인대(全人大))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약칭 정협(政协))의 중국공산당 2대 회의체

11) Export Control Reform Act

및 시책은 국정과제 차원에서 본다면 대표적으로는 국정목표 2, 4, 5번과 관련되어 있다.¹²⁾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10대 분야별 중점기술 도출과 관련 R&D 로드맵의 구성 및 인력양성·기술개발, 민간생태계·인프라 조성, 규제·제도개선, 표준선점, 공급망/통상 관점의 종합전략 수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1년 약 2.7조원 수준의 10개 필수전략기술에 대해 향후 수립될 R&D 로드맵을 토대로 투자 금액을 지속 확대하여 2022년 약 3.3조원의 정부R&D 투자를 목표로 한다. 로드맵 구성에 있어서는 해당 기술의 R&D 소관부처를 통해 소요를 접수받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분석·조정을 진행중에 있다. 전략적 평가를 통해 중요성이 높은 대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R&D 예비타당성 간소화,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등 기술개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지원이 수반될 전망이다.

[그림] 가용한 정책 수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격형	→	경쟁형	→	선도형
① R&D투자 및 인력양성	<div>✓ 도전적 목표 달성 연구개발(미DARPA) 본격화</div> <div> <div>✓ 출연(연) 등 장기 연구 거점</div> <div>✓ 기업수요 전문인력 공급 및 사업화 지원</div> </div>				
② 기업 혁신 활동 지원	<div> <div>✓ 혁신조달(신기술인증)/창업지원</div> <div>✓ 기업R&D/설비투자 강력한 조세지원</div> </div> <div> <div>✓ 실증·사업화 인프라</div> <div>✓ 선제적 규제개선</div> </div>				
③ 민군협력	<div> <div>✓ 군·산학연 민군기술협력 지원</div> <div>✓ 민간의 국방연구개발 참여 촉진</div> </div>				
④ 특허·표준 지원	<div> <div>✓ 원천특허 및 국제표준 선점 지원</div> <div>✓ 특허분쟁 시 우리기업 보호</div> </div>				
⑤ 통상지원 강화	<div> <div>✓ 디지털규범 선도 지원</div> <div>✓ 공급망 안정화 조치</div> </div>				
⑥ 기술보호	<div> <div>✓ 연구보안 강화</div> <div>✓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보호(수출통제, 핵심인력관리 등)</div> </div>				
⑦ 국제협력 및 공조	<div> <div>✓ 주요국과 개방형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div> <div>✓ 협력 지렛대로 우위기술 활용</div> </div>				

이와 같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제언한다.

우선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위한 新산업통상전략 실현에 있어서 정밀정보분석체계의 마련을

12) "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국정목표2-약속04-국정과제 20),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국정목표2-약속05-국정과제 24),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국정목표4-약속14-국정과제 75),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국정목표5-약속19-국정과제 98)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치는 역동적 경제
 - 약속04: 경제체질을 선진화하여 혁신성장의 디딤돌을 놓겠습니다.
 - 약속05: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습니다.
 ·국정목표 4: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약속14: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국정목표 5: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 약속19: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겠습니다.

장기적 시각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한다. ‘산업공급망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EWS¹³⁾가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되도록 하는 실무적인 작업이 다학제 연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WS는 국가별·산업분야별로 글로벌 센서를 촘촘히 심어 국가적 충격과 위기를 사전 감지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수집분석체계이다. 산업공급망 분석을 위해서는 산업기술 하부(downstream)의 최종제품·서비스 수준뿐만 아니라 상부(upstream)의 원천기술·원재료 수준까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급소와 필살기가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특정 부처나 특정 분야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긴 안목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다부처·다학제 메가 프로젝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가 필수전략기술 개념을 담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연구개발추진, 기반조성 등 항목에서 이번 국가안보 대응 기술전략의 시작점이 되는 종합정보분석 체계의 마련을 위한 실무적 절차·내용과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제상 논리적 문제 또는 충돌 요인에 대해 국내외 관련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사전에 파악하고 부족한 내용에 대한 보완적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발의를 추진중인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타법과의 차별성 및 실무추진에 있어서의 주요 시책의 중복성, 거버넌스 등에 있어 아직 쟁점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안보·미래혁신 관점에서 국가적 확보·육성이 필요한 주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의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규 제정 및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기술안보 관련 법률과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있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 조정 기능을 살려 예산이나 제도를 검토하는 방식과 연계하는 이슈도 현재의 발의 법률 보완 과정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판단한다.¹⁴⁾ 대표적인 사례가 전략기술 선정·관리, 인력양성, 기반조성, 추진체계 등의 항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021년 국가 필수전략기술 육성·보호 전략 수립의 후속조치 단계에서 법률적 검토를 정밀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있어 철학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및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이 미국의 USICA 하위 법률인 ‘반도체법(CHIPS Act)’ 및 ‘전략경쟁법(Strategic Competition Act)’과 매칭되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산업기술안보적 관점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전략기술육성법은 미국의 USICA의 하위 법률인 ‘끝없는 프론티어법(Endless Frontier

13) Early warning system: 조기경보체계

14)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메타버스 선도를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2022.03.30.)

Act)¹⁵⁾에서의 과학기술안보적 맥락과 닿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기초·원천과학과 응용·산업기술 간에는 별도의 분리의 관계가 아니라 항상 공존하는 관계여야 한다는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던 도널드 스토크스(Donald Stokes)의 논리¹⁶⁾를 따른다면 법제 간 연계성의 필요성도 확보될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제안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방식의 다학제적 시각이 필수적이다. 정밀정보분석체계에서나 과학기술안보 및 경제안보 관점의 법제 제정·추진에 있어서나 부처 간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연계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정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산·학·연·관의 다양한 주체들이 정보분석체계 구축 및 법제 정비 과정에서 끊임없이 정책·연구 경쟁을 하는 한편, 이들이 국가안보의 대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협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정과제에서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하여 국가안보 체계를 강화하고 융합적,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한 내용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부처·다학제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2021. 12. 22.

김규판,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전략 추진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11. 26.

김지혜, 「日 경제안보추진법(안) 제정 최신 동향」, 『수출통제 Issue Report』, 전략물자관리원, 2022. 4. 21.

조용래, 「대체불가 기술 확보가 新안보시대 핵심 생존전략」, 『STEPI Outlook 202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 1.

연합뉴스, [이슈 In] 격화하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G2 사이에 낀 한국, 2022. 5. 5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4126500501>, 2022. 5. 7. 접속)

이데일리, 「또 다른 규제 될라」…국가전략기술육성법 놓고 국회 엇갈린 시선, 2022. 3. 30 (http://m.ddaily.co.kr/m/m_article/?no=234540, 2022. 5. 10. 접속)

15) 용어의 원형은 바네바 부시(Vannevar Bush)가 집필한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1946)에서 가져오고 있는 바, 과학기술 인재양성 및 기초원천 기술에의 투자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음

16) Pasteur’s Quadrant (1997)



IV

주요 재정통계

1. 국민소득계정
2. 총수입
3. 총지출
4. 재정수지
5. 국가채무(중앙정부)
6. 세계잉여금
7. 국유재산 현황
8. 기금·투자플 운용현황
9. 보증채무 현황
10. 국가채권 현황
11. 부담금 운용현황
12. 정부출자 현황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14. 공공기관 현황



1. 국민소득계정

	GDP(경상)		GNI(경상)		1인당GNI(경상)		경제성장률(실질,%)			GDP 디플레이터(%)	
	억원	억달러	억원	억달러	만원	달러	GDP (전년 동기비)	GDP (전기비)	GNI (전년 동기비)	지수	상승률
2012	14,401,114	12,784	14,551,703	12,918	2,899	25,724	2.4	2.4	2.9	95.1	1.3
2013	15,008,191	13,708	15,103,849	13,795	2,995	27,351	3.2	3.2	3.8	96.0	1.0
2014	15,629,289	14,843	15,704,933	14,915	3,095	29,384	3.2	3.2	3.5	96.9	0.9
2015	16,580,204	14,658	16,632,066	14,704	3,260	28,814	2.8	2.8	6.3	100.0	3.2
2016	17,407,796	15,001	17,471,435	15,056	3,411	29,394	2.9	2.9	4.4	102.0	2.0
2017	18,356,982	16,233	18,431,809	16,299	3,589	31,734	3.2	3.2	3.3	104.3	2.2
2018	18,981,926	17,252	19,058,375	17,321	3,693	33,564	2.9	2.9	1.6	104.8	0.5
2019	19,244,981	16,510	19,411,079	16,653	3,753	32,204	2.2	2.2	0.4	103.9	△0.8
2020 ^o	19,331,524	16,382	19,480,207	16,508	3,762	31,881	△0.9	△0.9	△0.2	105.2	1.3
2021 ^p	20,574,478	17,978	20,825,765	18,198	4,025	35,168	4.0	4.0	3.5	107.7	2.3
2015. I	4,086,429	-	4,131,666	-	-	-	2.4	0.8	7.4	100.2	3.0
II	4,119,885	-	4,118,215	-	-	-	2.0	0.4	5.1	100.0	3.8
III	4,168,917	-	4,178,313	-	-	-	3.3	1.5	7.2	101.3	3.5
IV	4,204,974	-	4,203,872	-	-	-	3.4	0.7	5.7	98.6	2.4
2016. I	4,290,359	-	4,305,495	-	-	-	2.8	0.3	4.9	102.2	2.0
II	4,352,951	-	4,378,174	-	-	-	3.6	1.1	5.8	101.9	1.9
III	4,344,426	-	4,360,906	-	-	-	2.8	0.5	3.7	102.9	1.6
IV	4,420,060	-	4,426,860	-	-	-	2.6	0.6	3.3	101.0	2.4
2017. I	4,503,748	-	4,519,630	-	-	-	3.1	0.8	2.6	103.8	1.6
II	4,547,005	-	4,547,880	-	-	-	2.8	0.7	2.0	103.7	1.7
III	4,674,919	-	4,707,085	-	-	-	3.9	1.5	5.3	106.7	3.7
IV	4,631,311	-	4,657,214	-	-	-	2.9	△0.3	3.3	102.8	1.9
2018. I	4,677,736	-	4,698,289	-	-	-	2.9	1.1	2.7	104.7	0.8
II	4,730,232	-	4,742,459	-	-	-	3.0	0.6	2.2	104.7	1.0
III	4,793,935	-	4,814,788	-	-	-	2.4	0.7	0.2	106.9	0.2
IV	4,780,024	-	4,802,839	-	-	-	3.3	0.8	1.4	102.8	0.0
2019. I	4,748,672	-	4,756,266	-	-	-	1.9	△0.2	△0.4	104.2	△0.5
II	4,815,241	-	4,852,858	-	-	-	2.3	1.0	0.3	104.1	△0.6
III	4,822,857	-	4,891,984	-	-	-	2.1	0.4	0.5	105.3	△1.5
IV	4,858,210	-	4,909,971	-	-	-	2.6	1.3	1.0	102.0	△0.7
2020 ^o . I	4,793,443	-	4,840,393	-	-	-	1.5	△1.3	0.2	103.6	△0.6
II	4,746,695	-	4,781,749	-	-	-	△2.6	△3.2	△1.7	105.4	1.3
III	4,870,385	-	4,888,012	-	-	-	△1.0	2.2	△0.3	107.4	2.0
IV	4,921,001	-	4,970,054	-	-	-	△1.1	1.1	0.8	104.5	2.5
2021 ^p . I	5,012,481	-	5,082,141	-	-	-	1.9	1.7	3.8	106.2	2.6
II	5,110,032	-	5,204,964	-	-	-	6.0	0.8	6.1	107.1	1.6
III	5,180,213	-	5,212,509	-	-	-	4.0	0.3	2.8	109.9	2.3
IV	5,262,576	-	5,306,119	-	-	-	4.2	1.2	1.4	107.4	2.8
2022 ^o . I	-	-	-	-	-	-	3.1	0.7	-	-	-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2. 총수입

(단위: 조원)

연도	구분	총수입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세입 세출외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일반 회계	특별 회계	사회보장 기여금				
2016		401.8	242.6	235.7	6.8	23.5	9.4	14.2	135.6	56.9	0.13
2017		430.6	265.4	258.5	6.9	25.5	11.0	14.5	139.5	60.5	0.14
2018	1	50.8	36.6	35.4	1.2	1.7	0.6	1.1	12.6	4.8	0.00
	2	77.4	49.9	48.4	1.5	6.0	4.0	1.9	21.5	9.6	0.00
	3	121.2	78.8	76.8	2.0	7.9	4.6	3.3	34.4	15.2	0.00
	4	169.9	109.8	106.6	3.2	11.0	5.9	5.0	49.1	21.6	0.00
	5	214.0	140.7	137.0	3.8	12.7	6.4	6.2	60.6	27.8	0.00
	6	243.8	157.2	152.9	4.3	14.7	7.0	7.7	71.8	33.0	0.07
	7	291.9	190.2	184.9	5.3	16.8	7.5	9.2	84.9	38.0	0.07
	8	327.1	213.2	207.6	5.6	18.4	8.1	10.4	95.4	43.6	0.09
	9	359.2	233.7	227.7	6.0	19.4	8.5	10.9	106.1	48.6	0.09
	10	403.3	263.4	256.7	6.7	21.3	9.3	12.0	118.5	54.0	0.09
	11	432.7	279.9	272.9	7.0	23.1	9.9	13.2	129.7	59.5	0.09
	12	465.3	293.6	285.9	7.7	26.0	10.7	15.3	145.1	64.9	0.58
2019	1	51.4	37.1	36.0	1.1	1.7	0.6	1.1	12.6	5.2	0.00
	2	77.5	49.2	47.7	1.4	5.7	3.4	2.3	22.6	10.4	0.00
	3	121.0	78.0	76.1	1.9	7.2	3.8	3.4	35.8	16.1	0.00
	4	170.8	109.4	106.4	3.0	10.1	5.1	5.1	51.3	22.9	0.00
	5	215.8	139.5	136.2	3.3	12.0	5.7	6.3	64.3	29.6	0.00
	6	246.0	156.2	152.5	3.7	14.1	6.2	7.9	75.7	35.1	0.00
	7	293.9	189.4	184.6	4.8	15.5	6.5	9.0	89.0	40.5	0.05
	8	326.6	209.5	204.5	5.0	16.8	6.9	9.9	100.2	46.4	0.05
	9	359.5	228.1	222.8	5.3	18.7	7.4	11.3	112.7	51.9	0.05
	10	406.2	260.4	254.2	6.2	20.2	7.9	12.3	125.5	57.5	0.05
	11	435.4	276.6	270.0	6.5	22.0	8.5	13.5	136.7	63.6	0.05
	12	473.1	293.5	286.0	7.4	25.3	9.5	15.7	154.0	69.6	0.37
2020	1	51.2	36.5	35.6	0.9	1.6	0.6	1.0	13.2	6.8	0.00
	2	77.8	46.8	45.6	1.1	6.7	4.7	2.0	24.3	11.3	0.00
	3	119.5	69.5	67.9	1.6	8.6	5.3	3.3	41.4	19.1	0.00
	4	166.3	100.7	98.4	2.2	10.6	6.3	4.3	55.1	24.7	0.00
	5	198.2	118.2	115.5	2.7	12.4	6.8	5.6	67.6	31.5	0.00
	6	226.0	132.9	129.6	3.4	13.1	6.9	6.2	79.9	37.4	0.01
	7	280.4	168.5	163.5	5.0	16.0	8.1	7.9	95.8	43.1	0.01
	8	317.8	192.5	186.9	5.6	17.6	8.7	8.9	107.6	49.4	0.01
	9	354.4	214.7	208.5	6.2	19.6	9.3	10.3	120.1	55.3	0.01
	10	409.5	253.8	246.2	7.6	21.7	9.8	11.9	134.1	61.5	0.01
	11	437.8	267.8	259.8	8.0	23.3	10.3	13.0	146.7	68.1	0.01
	12	478.8	285.5	276.3	9.3	26.9	11.7	15.2	166.2	74.6	0.08
2021	1	57.3	38.8	38.1	0.7	1.7	0.6	1.1	16.8	6.0	0.00
	2	97.1	57.8	56.3	1.5	8.2	6.1	2.0	31.2	11.8	0.00
	3	152.1	88.5	86.1	2.4	10.1	6.7	3.4	53.5	20.2	0.00
	4	217.7	133.4	129.1	4.3	13.0	8.4	4.6	71.3	26.2	0.00
	5	261.4	161.8	156.7	5.1	14.6	8.9	5.7	85.0	33.4	0.00
	6	298.6	181.7	175.8	5.9	16.4	9.5	6.8	100.4	39.7	0.03
	7	356.9	223.7	216.3	7.4	17.8	10.0	7.8	115.4	45.7	0.03
	8	397.5	248.2	240.3	8.0	19.5	10.5	9.0	129.7	52.3	0.05
	9	442.4	274.5	265.9	8.6	22.2	11.1	11.1	145.6	58.5	0.05
	10	489.9	307.4	298.0	9.5	23.9	11.6	12.3	158.6	64.7	0.05
	11	523.9	323.4	313.4	10.0	26.0	12.5	13.5	174.5	71.5	0.05
	12	570.5	344.1	332.5	11.6	30.5	14.2	16.3	195.8	78.1	0.1
2022	1	65.3	49.7	48.6	1.1	1.8	0.6	1.2	13.8	6.1	0.00
	2	106.1	70	68.5	1.5	8.9	6.7	2.2	27.2	12.4	0.00
	3	170.4	111.1	108.8	2.2	11.0	7.6	3.4	48.3	21.1	0.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1. 조세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4	16.7	15.4	18.3	26.2	26.7	27.4	20.5	33.5	23.8
2005	17.1	16.3	19.7	26.6	27.1	27.0	20.8	34.9	24.4
2006	17.8	16.9	20.5	26.8	27.3	28.5	21.6	34.2	24.6
2007	18.8	17.3	20.5	26.9	26.8	29.1	22.5	33.2	24.7
2008	18.4	16.5	19.3	26.0	26.6	28.7	22.9	33.0	23.9
2009	17.4	15.2	16.7	24.9	25.3	28.8	22.6	33.0	22.9
2010	17.2	15.5	17.3	26.0	26.0	28.7	21.7	32.1	23.0
2011	17.6	15.9	18.3	26.8	27.1	28.8	22.3	32.3	23.3
2012	17.8	16.3	18.5	26.0	27.9	30.6	22.9	32.1	23.7
2013	17.0	16.9	19.4	26.0	28.6	30.8	23.0	32.6	23.9
2014	17.1	18.1	19.7	25.8	28.5	30.4	22.9	32.4	24.1
2015	17.4	18.3	20.0	25.9	28.6	30.0	23.2	33.1	24.1
2016	18.3	18.1	19.7	26.3	28.7	29.5	23.5	34.2	24.7
2017	18.8	18.6	20.6	26.6	29.3	29.2	23.4	34.5	24.5
2018	19.9	18.9	18.8	26.6	29.9	28.8	24.0	34.2	24.5
2019	19.9*	18.5	18.9	26.3	30.1	29.2	24.0	33.7	24.5
2020	20.0*	-	19.2	25.9	30.6	29.4	23.1	33.5	-

* 2021.6.9 한국은행 발표 2019년 확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1

2-2. 국민부담률 국제비교

(단위: %)

구분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OECD 평균
2004	21.2	24.8	24.8	32.2	42.4	39.2	34.3	45.9	32.2
2005	21.7	25.8	26.1	32.6	42.9	39.0	34.4	47.3	32.7
2006	22.6	26.6	26.8	32.8	43.3	40.5	34.9	45.9	32.8
2007	23.7	27.2	26.7	32.9	42.5	41.6	35.4	44.9	32.9
2008	23.6	27.0	25.6	32.2	42.3	41.6	35.8	44.0	32.3
2009	22.7	25.7	22.9	31.0	41.5	42.0	36.7	43.7	31.5
2010	22.4	26.2	23.4	32.1	42.1	41.7	35.5	42.9	31.6
2011	23.2	27.1	23.8	32.9	43.3	41.6	36.1	42.0	31.9
2012	23.7	28.0	23.9	32.1	44.4	43.6	36.8	42.1	32.4
2013	23.1	28.6	25.5	31.9	45.4	43.8	37.0	42.5	32.7
2014	23.4	30.0	25.9	31.7	45.4	43.3	36.8	42.2	32.9
2015	23.7	30.2	26.2	31.8	45.3	43.0	37.3	42.6	32.9
2016	24.7	30.3	25.9	32.4	45.4	42.2	37.8	44.1	33.6
2017	25.4	30.9	26.8	32.9	46.1	41.9	37.7	44.1	33.4
2018	26.7	31.6	24.9	32.9	45.9	41.7	38.4	43.8	33.5
2019	27.2*	31.4	25.0	32.7	44.9	42.4	38.6	42.8	33.4
2020	27.9*	-	25.5	32.8	45.4	42.9	38.3	42.6	-

* 2021.6.9 한국은행 발표 2019년 확정 GDP 반영

※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1

3. 총지출

(단위: 조원)

연도	구분	본예산 추경	총지출		예산				기금		세입 세출외
			집행액	진도율	집행액	진도율	일반회계	특별회계	집행액	진도율	
2018	1	432.7	35.8	8.3	27.0	9.1	23.9	3.1	8.8	6.5	0.00
	2	432.7	76.5	17.7	57.6	19.3	49.5	8.1	18.9	14.0	0.00
	3	432.7	122.9	28.4	88.4	29.7	73.8	14.6	34.5	25.6	0.00
	4	432.7	169.6	39.2	119.2	40.0	99.6	19.6	44.5	33.0	5.94
	5	432.7	205.4	47.5	145.6	48.9	122.2	23.4	53.8	40.0	5.94
	6	432.7	247.3	57.2	175.5	58.9	147.1	28.4	65.8	48.9	5.94
	7	432.7	282.7	65.3	199.1	66.8	167.9	31.2	77.4	57.5	6.18
	8	432.7	311.1	71.9	218.1	73.2	184.8	33.3	86.9	64.5	6.18
	9	432.7	345.2	79.8	239.5	80.4	202.6	36.8	99.4	73.8	6.27
	10	432.7	374.6	86.6	259.9	87.2	220.2	39.7	108.5	80.6	6.27
	11	432.7	395.3	91.4	271.8	91.2	229.6	42.2	117.3	87.1	6.27
	12	432.7	434.1	100.3	293.7	98.6	246.5	47.2	133.8	99.4	6.60
2019	1	469.6	44.5	9.5	34.7	10.5	29.9	4.8	9.8	7.0	0.00
	2	469.6	89.3	19.0	69.1	21.0	59.5	9.7	20.1	14.3	0.10
	3	469.6	138.3	29.5	101.4	30.8	85.8	15.6	36.8	26.2	0.10
	4	469.6	196.7	41.9	137.1	41.7	116.1	21.1	49.1	34.9	10.5
	5	469.6	235.0	50.0	165.0	50.2	139.3	25.7	59.4	42.2	10.5
	6	469.6	284.5	60.6	200.7	61.0	168.8	31.9	73.2	52.1	10.6
	7	475.4	318.2	66.9	224.0	67.4	189.5	34.5	83.6	58.5	10.6
	8	475.4	348.9	73.4	245.1	73.7	207.9	37.2	93.2	65.2	10.6
	9	475.4	386.0	81.2	268.9	80.9	228.1	40.8	106.6	74.6	10.6
	10	475.4	417.6	87.8	291.0	87.5	247.0	44.0	116.0	81.2	10.6
	11	475.4	443.3	93.2	306.2	92.1	259.5	46.7	126.3	88.4	10.7
	12	475.4	485.1	102.0	329.0	98.9	277.7	51.3	144.9	101.5	11.2
2020	1	554.7	50.9	9.2	40.1	10.6	34.6	5.5	10.8	6.1	0.00
	2	554.7	104.0	18.8	80.3	21.3	67.9	12.3	23.8	13.4	0.00
	3	554.7	164.8	29.7	120.6	31.9	100.7	19.8	44.2	25.0	0.01
	4	554.7	209.7	37.8	150.3	39.8	126.8	23.5	59.3	33.5	0.1
	5	554.7	259.5	46.8	188.7	50.0	162.0	26.8	70.6	39.8	0.1
	6	554.7	316.0	57.0	228.7	60.6	193.9	34.8	87.2	49.2	0.1
	7	554.7	356.0	64.2	255.9	67.8	219.1	36.8	100.0	56.4	0.1
	8	554.7	388.7	70.1	277.2	73.4	237.9	39.3	111.4	62.8	0.1
	9	554.7	434.8	78.4	304.5	80.7	261.7	42.7	130.2	73.5	0.1
	10	554.7	468.5	84.5	327.5	86.8	281.4	46.1	140.9	79.5	0.1
	11	554.7	501.1	90.3	347.9	92.2	299.0	48.8	153.0	86.3	0.2
	12	554.7	549.9	99.1	374.4	99.2	320.8	53.6	175.2	98.8	0.4
2021	1	558.0	53.9	9.7	38.6	10.3	33.6	5.0	15.3	8.3	0.00
	2	558.0	109.8	19.7	80.8	21.5	68.6	12.1	29.1	15.9	0.00
	3	572.9	182.2	31.8	123.1	32.2	102.3	20.8	59.1	31.0	0.00
	4	572.9	234.0	40.8	157.5	41.2	131.4	26.1	74.2	38.9	2.3
	5	572.9	281.9	40.8	193.0	41.2	160.3	32.7	86.5	38.9	2.3
	6	572.9	345.8	60.4	238.5	62.4	197.6	40.9	105.0	55.1	2.3
	7	604.9	377.6	62.4	259.5	63.3	216.8	42.7	115.8	59.3	2.3
	8	604.9	427.3	70.6	292.3	71.3	247.4	44.9	132.6	68.0	2.4
	9	604.9	472.0	78.0	321.6	78.5	273.3	48.2	148.1	75.9	2.4
	10	604.9	509.2	84.2	346.1	84.5	295.1	51.0	160.8	82.4	2.4
	11	604.9	546.3	90.3	368.7	90.0	314.6	54.1	175.2	89.8	2.4
	12	604.9	600.9	99.3	398.9	97.4	339.7	59.1	199.6	102.3	2.5
2022	1	607.7	56.3	9.3	39.0	9.4	35.8	3.2	17.3	8.9	0.00
	2	624.3	121.2	19.4	80.6	19.3	71.1	9.6	40.5	19.6	0.00
	3	624.3	203.5	32.6	137.1	32.9	115.9	21.2	66.4	32.1	0.00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3-1. 분야별 세출예산

분 야	'18				'19			
	본예산		추경		본예산		추경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 총지출	428.8	(100.0)	432.7	(100.0)	469.6	(100.0)	475.4	(100.0)
	(7.1)		(8.0)		(9.5)		(10.9)	
1. 보건·복지·노동	144.7	(33.7)	145.8	(33.7)	161.0	(34.3)	162.6	(33.9)
	(11.7)		(12.6)		(11.3)		(12.4)	
2. 교 육	64.2	(15.0)	64.4	(14.9)	70.6	(15.0)	70.7	(14.7)
	(11.8)		(12.2)		(10.1)		(10.2)	
3. 문화·체육·관광	6.5	(1.5)	6.5	(1.5)	7.2	(1.5)	7.3	(1.5)
	(△6.3)		(△5.5)		(12.2)		(13.4)	
4. 환 경	6.9	(1.6)	7.0	(1.6)	7.4	(1.6)	8.6	(1.8)
	(△0.3)		(1.4)		(7.2)		(24.7)	
5. R&D	19.7	(4.6)	19.7	(4.6)	20.5	(4.4)	20.9	(4.3)
	(1.1)		(1.5)		(4.4)		(6.0)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3.8)	18.2	(4.2)	18.8	(4.0)	20.5	(4.3)
	(1.5)		(13.5)		(15.1)		(26.0)	
7. SOC	19.0	(4.4)	19.1	(4.4)	19.8	(4.2)	20.4	(4.3)
	(△14.2)		(△13.5)		(4.0)		(7.4)	
8. 농림수산 식품	19.7	(4.6)	19.8	(4.6)	20.0	(4.3)	20.3	(4.2)
	(0.5)		(1.0)		(1.5)		(2.8)	
9. 국방	43.2	(10.1)	43.2	(10.0)	46.7	(9.9)	46.7	(9.7)
	(7.0)		(7.0)		(8.2)		(8.2)	
10. 외교·통일	4.7	(1.1)	4.7	(1.1)	5.1	(1.1)	5.1	(1.1)
	(3.5)		(3.6)		(7.2)		(7.2)	
11. 공공질서·안전	19.1	(4.4)	19.1	(4.4)	20.1	(4.3)	20.2	(4.2)
	(5.1)		(5.1)		(5.5)		(6.0)	
12. 일반·지방행정	69.0	(16.1)	69.1	(16.0)	76.6	(16.3)	76.7	(16.0)
	(8.9)		(9.0)		(10.9)		(11.1)	

(조원, %)

'20				'21				'22			
본예산		추경		본예산		2차 추경		본예산		추경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512.3	(100.0)	554.7	(100.0)	558.0	(100.0)	604.4	(100.0)	607.7	(100.0)	624.3	(100.0)
(9.1)		(18.1)		(8.9)		(8.3)		(8.9)		(11.9)	
180.5	(35.2)	197.8	(35.7)	199.7	(35.8)	216.7	(35.9)	217.7	(35.8)	221.0	(35.4)
(12.1)		(22.9)		(10.6)		(8.5)		(9.0)		(10.7)	
72.6	(14.2)	71.0	(12.8)	71.2	(12.8)	83.2	(13.8)	84.2	(13.8)	84.2	(13.5)
(2.8)		(0.5)		(△1.9)		(16.8)		(18.2)		(18.2)	
8.0	(1.6)	8.1	(1.5)	8.5	(1.5)	8.8	(1.5)	9.1	(1.5)	9.2	(1.5)
(10.6)		(12.0)		(6.3)		(3.9)		(7.3)		(8.4)	
9.0	(1.8)	9.2	(1.7)	10.6	(1.9)	11.9	(2.0)	11.9	(2.0)	11.9	(1.9)
(21.8)		(24.7)		(17.8)		(12.4)		(12.4)		(12.4)	
24.2	(4.7)	24.3	(4.4)	27.4	(4.9)	29.8	(4.9)	29.8	(4.9)	29.8	(4.8)
(18.0)		(18.2)		(13.2)		(8.8)		(8.7)		(8.7)	
23.7	(4.6)	35.5	(6.4)	28.6	(5.1)	30.4	(5.0)	31.3	(5.2)	43.8	(7.0)
(26.4)		(89.1)		(20.7)		(6.0)		(9.3)		(53.0)	
23.2	(4.5)	22.9	(4.1)	26.5	(4.7)	27.5	(4.6)	28.0	(4.6)	28.1	(4.5)
(17.6)		(15.8)		(14.2)		(3.8)		(5.5)		(5.8)	
21.5	(4.2)	21.4	(3.9)	22.7	(4.1)	23.4	(3.9)	23.7	(3.9)	23.7	(3.8)
(7.4)		(6.8)		(5.6)		(3.4)		(4.5)		(4.5)	
50.2	(9.8)	48.4	(8.7)	52.8	(9.5)	55.2	(9.1)	54.6	(9.0)	54.6	(8.7)
(7.4)		(3.6)		(5.2)		(4.5)		(3.4)		(3.4)	
5.5	(1.1)	5.1	(0.9)	5.7	(1.0)	6.0	(1.0)	6.0	(1.0)	6.0	(1.0)
(8.8)		(1.0)		(3.6)		(5.7)		(4.4)		(4.4)	
20.8	(4.1)	20.7	(3.7)	22.3	(4.0)	22.4	(3.7)	22.3	(3.7)	22.3	(3.6)
(3.5)		(2.8)		(7.2)		(0.3)		(0.1)		(0.1)	
79.0	(15.4)	94.0	(16.9)	84.7	(15.2)	96.8	(16.0)	98.1	(16.1)	98.1	(15.7)
(3.2)		(22.8)		(7.2)		(14.3)		(15.8)		(15.8)	

3-2. 관리대상사업

◆ 관리대상사업(중앙부처) 예산(204.6조원)의

3월 집행률은 35.2%(72.0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p 감소

* 인건비, 기본경비, 내부거래, 보전지출,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

(단위: 조원, %, %p)

구 분	'21년			'22년			전년동기대비
	연간계획 (A)	3월까지 누계(B)	집행률 (C=B/A)	연간계획 (D)	3월까지 누계(E)	집행률 (F=E/D)	집행률 (F-C)
중앙부처	293.3	107.1	36.5	204.6	72.0	35.2	△1.3

※ 상반기 조기집행목표(63%) 기 달성(68.2%)

* 20년의 경우 연간계획을 변경(309.3조원→318.9조원)하여, 집행률을 100% 이하로 조정하는 반면, 21년의 경우 연간계획을 고정 후 집행률 100% 초과를 인정하여 20, 21년도 집행률의 단순비교는 곤란

※ 관리대상사업 제도 개요

- 목적: ①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 강화, ②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근거: 국가재정법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 관리대상: 46개 중앙행정기관(일반+특별회계), 39개 기금의 주요사업비
- 관리방법: 기획재정부에서 부처별 진도율 관리(재정관리점검회의), 각 부처에서 사업별 관리

〈총지출 vs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범위('22년 기준)〉

구 분	총지출(본예산)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대상	예산 규모	대상	예산 규모
합 계	-	607.7조원	-	204.6조원
중앙부처	중앙행정기관 60개 기금 59개	607.7조원	중앙행정기관 46개 기금 39개	204.6조원
공공기관	-	-	-	-

※ 상세 집행실적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열린재정: www.openfiscaldata.go.kr)에서 확인가능

[참고] 연도별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구 분	연간계획 (본예산+이월액)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금액	진도율	금액	진도율
'16년	279.2	166.2	59.5%	169.7	60.8%
'17년	281.7	163.5	58.0%	166.3	59.0%
'18년	280.2	162.6	58.0%	174.1	62.1%
'19년	291.9	178.1	61.0%	190.7	65.4%
'20년	305.5	189.6	62.0%	203.3	66.5%
'21년	343.7	216.5	63.0%	234.2	68.2%
'22년	204.6	128.9	63.0%	-	-

4. 재정수지

(단위: 조원, GDP 대비 %)

연도	구분	총수입(A)		총지출(B)		통합재정수지(A-B)		관리재정수지(A-B-C)	
		사회보장성 기금수입		사회보장성 기금지출		GDP대비 (%)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C)		GDP대비 (%)
2016		401.8	75.4	384.9	35.8	16.9	39.6	△22.7	△1.3
2017		430.6	81.2	406.6	38.7	24.0	42.5	△18.5	△1.0
2018	1	50.8	6.1	35.8	3.6	15.0	2.5	12.6	
	2	77.4	11.8	76.5	7.1	0.9	4.8	△3.9	
	3	121.2	19.8	122.9	11.1	△1.8	8.8	△10.5	
	4	169.9	28.5	169.6	14.7	0.2	13.8	△13.6	
	5	214.0	36.2	205.4	18.4	8.6	17.9	△9.2	
	6	243.8	43.9	247.3	21.9	△3.5	22.0	△25.5	
	7	291.9	50.3	282.7	25.5	9.2	24.7	△15.5	
	8	327.1	56.2	311.1	28.2	16.0	28.0	△12.0	
	9	359.2	63.1	345.2	31.8	14.0	31.3	△17.3	
	10	403.3	69.6	374.6	35.3	28.7	34.3	△5.7	
	11	432.7	77.6	395.3	40.1	37.4	37.6	△0.2	
	12	465.3	85.1	434.1	43.4	31.2	41.7	△10.6	△0.6
2019	1	51.4	6.2	44.5	4.2	6.9	2.0	4.9	
	2	77.5	12.5	89.3	8.0	△11.8	4.4	△16.2	
	3	121.0	20.3	138.3	12.4	△17.3	7.9	△25.2	
	4	170.8	29.4	196.7	16.5	△25.9	12.9	△38.8	
	5	215.8	38.0	235.0	20.7	△19.1	17.4	△36.5	
	6	246.0	45.6	284.5	24.6	△38.5	21.0	△59.5	
	7	293.9	52.7	318.2	28.7	△24.3	24.0	△48.2	
	8	326.6	59.9	348.9	32.8	△22.3	27.2	△49.5	
	9	359.5	67.5	386.0	37.0	△26.5	30.5	△57.0	
	10	406.2	75.2	417.6	41.1	△11.4	34.1	△45.5	
	11	435.4	82.8	443.3	45.0	△7.9	37.7	△45.6	
	12	473.1	91.1	485.1	48.7	△12.0	42.4	△54.4	△2.8
2020	1	51.2	6.8	50.9	4.9	0.3	2.0	△1.7	
	2	77.8	13.9	104.0	9.2	△26.2	4.7	△30.9	
	3	119.5	24.3	164.8	14.3	△45.3	10.0	△55.3	
	4	166.3	32.1	209.7	18.9	△43.3	13.2	△56.6	
	5	198.2	40.5	259.5	23.8	△61.3	16.6	△77.9	
	6	226.0	49.5	316.0	28.9	△90.0	20.5	△110.5	
	7	280.4	56.8	356.0	34.3	△75.6	22.5	△98.1	
	8	317.8	64.5	388.7	39.4	△70.9	25.1	△96.0	
	9	354.4	72.9	434.8	44.9	△80.5	28.0	△108.4	
	10	409.5	81.4	468.5	49.8	△59.0	31.6	△90.6	
	11	437.8	89.6	501.1	54.6	△63.3	35.0	△98.3	
	12	478.8	100.0	549.9	59.1	△71.2	40.8	△112.0	△5.8
2021	1	57.3	10.9	53.9	5.7	3.4	5.3	△1.8	
	2	97.1	20.4	109.8	10.8	△12.7	9.6	△22.3	
	3	152.1	35.3	182.2	16.8	△30.1	18.5	△48.6	
	4	217.7	46.4	234.0	22.4	△16.3	24.1	△40.4	
	5	261.4	55.7	281.9	27.7	△20.5	28.0	△48.5	
	6	298.6	65.6	345.8	33.1	△47.2	32.5	△79.7	
	7	356.9	74.7	377.6	38.4	△20.7	36.2	△56.9	
	8	397.5	84.1	427.3	43.7	△29.8	40.4	△70.2	
	9	442.4	94.3	472.0	49.2	△29.6	45.0	△74.7	
	10	489.9	102.6	509.2	54.4	△19.3	48.3	△67.6	
	11	523.9	114.1	546.3	59.5	△22.4	54.6	△77.0	
	12	570.5	124.5	600.9	64.4	△30.4	60.1	△90.5	△4.4
2022	1	65.3	8.0	56.3	5.6	8.4	2.4	6.0	
	2	106.1	15.8	121.2	10.9	△15.1	4.9	△20.0	
	3	170.4	29.2	203.5	16.9	△33.1	12.3	△45.5	

*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 국가채무(중앙정부)

(단위: 조원, GDP 대비 %)

연도	구분	중앙정부 채무						
		GDP대비 비율	국 채				차입금	국고 채무 부담 행위
			국고 채권	국민 주택 채권	외평 채권			
2002		126.6	16.1	103.1	55.6	25.7	20.7	2.8
2003		158.8	19.0	140.6	81.5	30.1	28.5	2.4
2004		196.1	21.6	182.9	123.1	32.4	27.5	2.5
2005		238.8	24.9	229.0	170.5	37.1	21.4	2.2
2006		273.2	27.2	264.3	206.8	42.9	14.7	2.5
2007		289.1	26.5	280.5	227.4	43.3	9.7	2.9
2008		297.9	25.8	289.4	239.3	44.9	5.2	3.2
2009		346.1	28.7	337.5	280.9	48.3	8.3	3.2
2010		373.8	28.3	367.2	310.1	49.0	8.0	3.1
2011		402.8	29.0	397.1	340.1	48.9	8.1	3.3
2012		425.1	29.5	420.0	362.9	49.5	7.6	2.8
2013		464.0	30.9	459.5	400.7	51.3	7.5	2.7
2014		503.0	32.2	498.1	438.3	52.8	7.0	2.4
2015		556.5	33.6	551.5	485.1	59.3	7.1	1.7
2016		591.9	34.0	587.5	516.9	64.0	6.7	0.5
2017		627.4	34.2	623.3	546.7	69.4	7.2	0.2
2018		651.8	34.3	648.4	567.0	73.3	8.0	0.2
2019		699.0	36.4	696.3	611.5	76.4	8.3	0.1
2020		819.2	42.4	815.2	726.8	78.9	9.5	0.7
2021		939.1	45.6	937.0	843.7	82.2	11.2	0.1
2022.1		955.5	-	953.4	858.7	83.4	11.3	0.1
2022.2		973.6	-	971.5	877.6	82.5	11.3	0.1
2022.3		981.9	-	979.9	885.7	82.8	11.4	0.1

1) 국채 합계금액에는 국제기구출자전환증권 등의 금액이 포함됨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5-1.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추이

(단위: 조원, %)

연도	구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금액	GDP 대비
2002		133.8	17.0	-	-	-	-
2003		165.8	19.8	-	-	-	-
2004		203.7	22.4	-	-	-	-
2005		247.9	25.9	-	-	-	-
2006		282.7	28.1	-	-	-	-
2007		299.2	27.5	-	-	-	-
2008		309.0	26.8	-	-	-	-
2009		359.6	29.8	-	-	-	-
2010		392.2	29.7	-	-	-	-
2011		420.5	30.3	459.2	33.1	753.3	54.2
2012		443.1	30.8	504.6	35.0	821.1	57.0
2013		489.8	32.6	565.6	37.7	898.7	59.9
2014		533.2	34.1	620.6	39.7	957.3	61.3
2015		591.5	35.7	676.2	40.8	1,003.5	60.5
2016		626.9	36.0	717.5	41.2	1,036.6	59.5
2017		660.2	36.0	735.2	40.1	1,044.6	56.9
2018		680.5	35.9	759.7	40.0	1,078.0	56.8
2019		723.2	37.6	810.7	42.1	1,132.6	58.9
2020		846.6	43.8	945.1	48.9	1,280.0	66.2
2021		967.2	47.0	-	-	-	-

* '21년 D2, D3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확정 발표 예정('22.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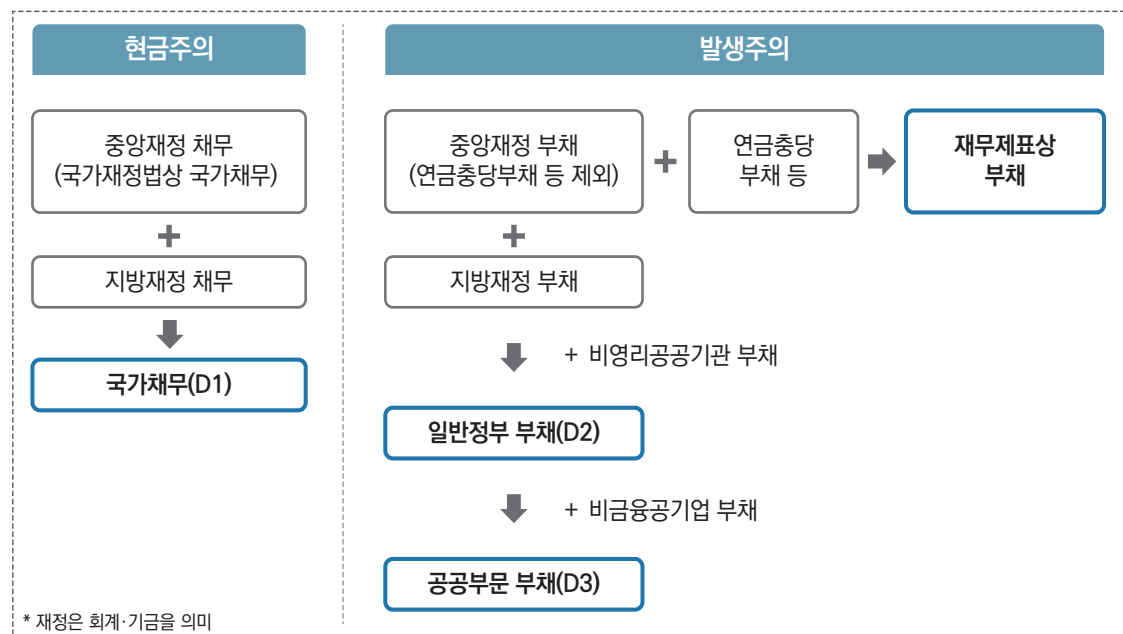
5-2. 부채 유형별 개념 및 활용

■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

* 재정동향에서 발표되는 중앙정부 채무는 현금주의 기준 국가채무(D1) 산출시 활용

* 재무제표상 부채는 발생주의 기준 부채인 D2, D3 산출시 활용

유형	'20년 규모 (GDP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 (D1)	846.6조원 (43.8%)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 운용계획
일반정부 부채 (D2)	945.1조원 (48.9%)	D1 + 비영리공공기관	국제지침, 발생주의	국제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 (D3)	1,280.0조원 (66.2%)	D2 + 비금융공기업	국제지침,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



5-3. 부채 규모 상세 비교('20년 기준)

(단위: 조원)

분 류				국가채무 (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합 계 (A+B-C)				846.6	945.1	1,280.0
공 공 부 문	일반 정부 (A)	중앙 정부	회계·기금	819.2	857.7	857.7
			비영리공공기관(222개)	-	53.7	53.7
			내부거래	-	△13.0	△13.0
		중앙정부 부채		819.2	898.4	898.4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243개)	30.0	56.6	56.6
			지방교육자치단체(17개)	1.6	6.6	6.6
			비영리공공기관(95개)	-	1.0	1.0
			내부거래	-	△1.2	△1.2
		지방정부 부채		31.6	63.0	63.0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		△4.2	△16.2	△16.2
	비금융 공기업 (B)	중앙(111개)		-	-	369.7
		지방(56개)		-	-	46.2
		내부거래		-	-	△7.8
		비금융공기업 부채		-	-	408.1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C)			-	-	△73.3

5-4. 일반정부 부채 국제비교

(단위: GDP대비, %)

구분	일반정부 부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호주	30.5	34.0	37.8	40.6	41.2	41.8	46.8	57.8
오스트리아	81.0	83.8	84.4	82.5	78.6	74.0	70.6	83.2
벨기에	105.5	107.0	105.2	105.0	102.0	99.9	97.7	112.8
캐나다	86.1	85.6	91.2	91.8	88.9	88.9	87.2	117.8
키프로스	102.9	109.1	107.2	103.1	92.9	98.4	91.1	115.0
체코	44.4	41.9	39.7	36.6	34.2	32.1	30.0	37.7
덴마크	44.0	44.3	39.8	37.2	35.9	34.0	33.6	42.1
에스토니아	10.2	10.6	10.1	10.0	9.1	8.2	8.6	19.0
핀란드	56.2	59.8	63.6	63.2	61.2	59.8	59.6	69.0
프랑스	93.4	94.9	95.6	98.0	98.1	97.8	97.4	115.2
독일	78.3	75.3	72.0	69.0	64.7	61.3	58.9	68.7
그리스	178.7	181.7	178.7	183.1	182.7	190.1	185.1	211.9
홍콩	0.5	0.1	0.1	0.1	0.1	0.1	0.3	1.0
아이슬란드	122.0	115.2	97.2	82.4	71.6	63.1	66.2	77.4
아일랜드	120.0	104.3	76.7	74.3	67.8	63.1	57.2	58.4
이스라엘	66.8	65.6	63.8	62.0	60.2	60.4	59.5	71.7
이탈리아	132.5	135.4	135.3	134.8	134.2	134.4	134.1	155.3
일본	229.6	233.5	228.4	232.5	231.4	232.5	236.1	259.0
한국	37.7	39.7	40.8	41.2	40.1	40.0	42.1	48.9
라트비아	40.4	41.6	37.1	40.4	39.0	37.1	36.7	43.3
리투아니아	38.7	40.5	42.7	39.9	39.3	33.7	35.9	46.6
룩셈부르크	22.4	21.9	21.1	19.6	21.8	20.8	22.3	24.8
몰타	65.8	61.6	55.9	54.5	47.5	43.5	40.6	53.3
네덜란드	67.8	68.0	64.6	61.9	56.9	52.4	47.6	52.8
뉴질랜드	34.6	34.2	34.2	33.4	31.1	28.1	31.8	43.1
노르웨이	31.6	29.9	34.5	38.1	38.6	39.7	40.9	46.8
포르투갈	131.4	132.9	131.2	131.5	126.1	121.5	116.6	135.2
싱가포르	98.2	97.7	102.2	106.6	107.7	109.4	128.2	152.0
슬로바키아	54.7	53.6	51.9	52.4	51.6	49.6	48.1	59.7
슬로베니아	70.0	80.3	82.6	78.5	74.2	70.3	65.6	79.8
스페인	95.8	100.7	99.3	99.2	98.6	97.5	95.5	120.0
스웨덴	40.2	44.9	43.7	42.3	40.7	38.9	34.9	39.6
스위스	41.6	41.6	41.7	40.5	41.2	39.2	39.8	42.4
영국	83.6	85.5	86.0	85.8	85.1	84.5	83.9	102.6
미국	104.6	104.6	105.1	107.2	106.2	107.5	108.8	134.2
선진국 평균	104.0	103.6	103.2	105.6	103.2	102.7	103.8	123.2

* 출처: IMF Fiscal Monitor('22.4월)

5-5. 국고채 추이

(단위 : 조원, %, 기말)

구분		'15	'16	'17	'18	'19	'20	'21	'22.1	'22.2	'22.3
국고채 발행	국채 잔액 (외화표시 외평채 제외) (전체채권 대비)	544.4 (35.0)	580.9 (36.4)	616.1 (37.1)	640.3 (37.2)	688.0 (37.8)	805.7 (39.3)	925.8 (41.5)	942.1 (41.7)	964.2 (42.2)	977.4 (42.5)
	국고채 발행잔액 (전체채권 대비)	485.1 (31.2)	516.9 (32.4)	546.7 (33.0)	567.0 (33.0)	611.5 (33.6)	726.8 (35.5)	843.7 (37.8)	858.7 (38.0)	877.6 (38.4)	885.7 (38.5)
	국고채 발행*	109.3	101.1	100.8	97.4	101.7	174.5	5.8	15.4	19.3	18.5
국고채 유통	3년물 유통금리	1.662	1.638	2.135	1.817	1.360	0.976	1.798	2.189	2.242	2.663
	5년물 유통금리	1.814	1.799	2.343	1.884	1.480	1.335	2.011	2.396	2.468	2.856
	10년물 유통금리	2.076	2.074	2.469	1.948	1.683	1.713	2.250	2.586	2.675	2.969
	30년물 유통금리	2.207	2.159	2.434	1.927	1.682	1.823	2.310	2.524	2.632	2.817
국고채 외국인 보유현황		67.7	72.5	77.8	86.3	98.3	121.6	164.1	168.4	171.6	172.6
(국고채발행 잔액대비)		(14.0)	(14.0)	(14.2)	(15.2)	(16.0)	(16.7)	(19.4)	(19.6)	(19.7)	(19.5)

* '22년 국고채 발행한도는 177.3조원

6. 세계잉여금¹⁾

(단위: 억원)

구분 연도	일반회계 세입 (A)	일반회계 세출 (B)	결산상 잉여금(C=A-B)						
			이월액 (D)	세계잉여금(C-D)					
				사용				다음연도 세입이입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채무 상환 ²⁾	추경 재원			
2001	1,020,084	986,685	33,399	9,325	24,074	-	-	5,381	18,693
2002	1,133,800	1,089,183	44,617	11,756	32,861	-	-	14,168	18,693
2003	1,196,755	1,172,229	24,526	13,264	11,262	-	-	11,262	-
2004	1,196,460	1,182,362	14,098	12,372	1,726	-	-	1,726	-
2005	1,364,592	1,342,077	22,515	10,148	12,367	-	3,818	8,549	-
2006	1,478,667	1,448,360	30,307	16,577	13,730	13,728	-	-	-
2007	1,711,722	1,543,309	168,413	14,985	153,428	54,133	50,640	45,685	2,970
2008	1,815,858	1,754,695	61,163	15,400	45,763	2,947	21,836	20,979	-
2009	2,049,475	1,998,760	50,715	14,628	36,087	7,864	14,394	-	13,829
2010	2,052,235	1,971,371	80,864	21,350	59,514	15,817	22,285	-	21,412
2011	2,148,604	2,074,469	74,134	22,849	51,285	19,586	16,167	-	15,532
2012	2,237,034	2,206,878	30,156	21,623	8,533	1,886	3,390	3,257	-
2013	2,323,929	2,295,443	28,485	27,673	812	-	414	-	398
2014	2,392,256	2,363,607	28,649	27,685	964	-	491	472	-
2015	2,619,383	2,578,816	40,567	15,290	25,277	-	12,891	12,386	-
2016	2,816,746	2,739,981	76,765	15,845	60,920	38,091	11,644	11,186	-
2017	2,929,006	2,804,840	119,166 ³⁾	18,745	100,422	59,762	20,736	19,923	-
2018	3,162,185	2,999,460	122,725 ³⁾	16,150	106,575	105,292	654	629	
2019	3,322,397	3,308,841	13,555	12,936	619	619	-	-	-
2020	3,923,670	3,852,230	71,441	14,248	57,193	22,653	17,615	16,924	-
2021	4,383,633	4,177,207	206,426	26,477	179,949	113,382	33,949	32,618	

1)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의미

2)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상환을 포함

3) 초과세수를 이용한 국채상환 '17년 0.5조원, '18년 4.0조원 차감

7. 국유재산 현황

(단위: km², 억원)

연도	구분	국유재산				
		토지		건물	유가증권	기타
		수량	금액	금액	금액	금액
2001	1,883,446	15,559	855,465	190,341	649,442	188,198
2002	1,955,207	15,616	810,825	205,219	745,358	193,805
2003	2,023,770	15,710	808,191	222,021	783,784	209,774
2004	2,176,295	15,842	810,386	241,754	864,933	259,222
2005	2,643,794	16,003	1,056,250	271,526	1,047,310	268,708
2006	2,700,805	16,166	1,065,739	290,160	1,068,466	276,440
2007	2,757,525	16,316	1,067,863	317,836	1,084,726	287,100
2008	3,096,441	16,420	1,077,385	352,814	1,313,441	352,801
2009	2,968,200	16,554	1,089,919	378,364	1,142,199	357,718
2010	3,174,828	16,660	1,085,475	424,558	1,274,254	390,541
2011*	8,743,377	24,023	4,361,579	418,381	1,438,480	2,524,937
2012	8,922,246	24,056	4,357,326	471,452	1,434,022	2,659,446
2013	9,120,698	24,236	4,346,113	525,113	1,546,465	2,703,007
2014	9,384,902	24,521	4,374,692	580,211	1,670,031	2,759,968
2015	9,901,975	24,718	4,485,830	616,825	1,988,350	2,810,970
2016	10,444,088	24,940	4,670,080	652,422	2,243,460	2,878,126
2017	10,757,551	24,996	4,630,097	677,188	2,456,556	2,993,710
2018	10,817,553	25,062	4,677,016	699,211	2,418,389	3,022,938
2019	11,250,365	25,158	4,848,771	726,592	2,670,304	3,004,697
2020	11,514,892	25,240	5,070,150	759,326	2,700,168	2,985,248
2021.12**	12,426,872	25,335	5,791,770	750,852	2,799,577	3,084,673
2022. 1**	13,119,123	25,354	6,297,664	733,495	2,930,167	3,157,797
2022. 2**	13,112,424	25,362	6,304,392	721,689	2,928,777	3,157,567
2022. 3**	13,120,773	25,348	6,294,711	722,271	2,940,408	3,163,383

* '11년도부터 국유재산가격평가 업무처리지침(2011.8.24.) 제정에 따른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22년 자료는 잠정

7-1. 국유지 현황

(단위: km², %)

연도	구분	국유지					
		행정재산 ¹⁾		보존재산 ²⁾		일반재산 ³⁾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01	15,559	12,627	81	785	5	2,147	14
2002	15,616	12,854	82	796	5	1,966	13
2003	15,710	13,078	83	823	5	1,809	12
2004	15,842	13,259	84	870	5	1,713	11
2005	16,003	13,496	84	927	5	1,580	11
2006	16,166	13,722	85	1,016	6	1,428	9
2007	16,316	13,886	85	1,099	7	1,331	8
2008	16,419	14,066	86	1,159	7	1,194	7
2009	16,554	15,431	93	-	-	1,123	7
2010	16,660	15,585	94	-	-	1,075	6
2011*	24,024	23,031	96	-	-	993	4
2012	24,056	23,129	96	-	-	927	4
2013	24,236	23,359	96	-	-	877	4
2014	24,521	23,668	97	-	-	853	3
2015	24,718	23,875	97	-	-	843	3
2016	24,940	24,109	97	-	-	831	3
2017	24,996	24,193	97	-	-	803	3
2018	25,062	24,276	97	-	-	786	3
2019	25,158	24,370	97	-	-	788	3
2020	25,240	24,427	97	-	-	813	3
2021.12**	25,335	24,540	97	-	-	814	3
2022. 1**	25,354	24,539	97	-	-	814	3
2022. 2**	25,362	24,547	97	-	-	814	3
2022. 3**	25,348	24,532	97	-	-	815	3

* '11년부터 행정재산 중 도로·하천·항만 등의 공공용 재산 포함, 행정재산(보존용)중 유산자산(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은 결산에서 제외됨

** 2020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1년, '22년 자료는 잠정

1) 행정재산: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도로, 구거 등)

2) 보존재산: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국유림 등), '09년부터 행정재산에 합산하여 결산

3)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재산

8. 기금·투자금 운용현황

1. 기금자산운용 현황

(단위: 십억원)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총계(68개)	778,769	1.23%	785,868	3.02%	883,569	2.83%
사회보험성기금(6개)	690,518	-1.87%	703,327	8.51%	799,328	8.72%
고용보험기금	10,494	-2.22%	8,594	7.06%	6,843	5.72%
공무원연금기금	9,913	-1.45%	9,638	8.36%	9,211	10.50%
국민연금기금	634,916	-0.89%	647,691	11.33%	742,239	9.58%
군인연금기금	1,038	-2.18%	1,059	5.59%	1,140	3.82%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6,481	-2.39%	16,767	11.15%	18,890	11.49%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7,676	-2.09%	19,578	7.58%	21,004	11.20%
금융성기금(8개)	19,758	2.01%	20,909	2.30%	25,143	2.45%
기술보증기금	2,059	2.21%	2,011	2.35%	2,354	2.2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54	2.04%	685	2.40%	691	2.0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	1.53%	0	1.60%	2	0.47%
무역보험기금	3,350	2.12%	3,328	2.60%	3,969	3.2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0	2.32%	837	2.36%	854	2.96%
신용보증기금	6,006	1.98%	6,234	2.57%	8,035	2.6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27	1.85%	695	1.95%	1,584	1.5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761	2.06%	7,119	2.54%	7,653	4.44%
계정성기금(4개)	16,305	1.61%	10,034	2.04%	8,296	1.48%
공공자금관리기금	16,038	1.42%	9,785	1.55%	8,017	0.72%
공적자금상환기금	15	1.88%	27	2.09%	22	1.45%
복권기금	171	1.24%	109	2.58%	156	2.27%
양곡증권정리기금	81	1.91%	113	1.93%	102	1.47%
사업성기금(50개)	52,187	1.45%	51,598	2.55%	50,802	2.29%
과학기술진흥기금	18	1.72%	27	1.74%	22	1.04%
관광진흥개발기금	109	1.76%	281	1.82%	218	1.47%
국민건강증진기금	294	1.72%	246	1.75%	443	1.05%
주택도시기금	40,157	-0.42%	38,410	6.06%	37,977	5.05%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790	-0.55%	980	3.67%	895	4.48%
국민체육진흥기금	-	-	-	-	32	1.52%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	-	-	-	-
국유재산관리기금	1,102	0.79%	1,303	2.92%	934	4.71%
국제교류기금	123	0.11%	105	5.01%	74	4.38%
군인복지기금	776	1.49%	814	2.53%	785	2.79%
근로복지진흥기금	101	-0.19%	107	3.53%	125	6.41%
금강수계관리기금	4	1.70%	9	1.81%	12	1.1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	1.70%	14	1.74%	9	1.02%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여유자금	수익률
남북협력기금	201	0.90%	87	2.25%	90	1.3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77	1.50%	265	4.04%	134	1.43%
농어업재해보험기금	173	2.19%	164	2.02%	123	1.28%
농지관리기금	1,167	1.00%	905	2.77%	737	2.80%
대외경제협력기금	116	1.78%	137	1.87%	118	1.18%
문화예술진흥기금	66	4.83%	148	4.25%	204	4.49%
문화재보호기금	23	1.71%	19	1.76%	19	1.1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57	-0.75%	2,638	4.75%	2,877	4.68%
방송통신발전기금	144	2.33%	205	2.14%	153	1.77%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	1.71%	13	1.74%	6	1.04%
보훈기금	179	0.42%	159	3.02%	120	3.67%
사학진흥기금	38	1.67%	103	1.94%	113	1.01%
석면피해구제기금	17	2.85%	14	2.54%	17	3.10%
수산발전기금	124	0.38%	199	2.87%	169	3.89%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2	2.44%	83	2.21%	80	1.99%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4	1.70%	33	1.73%	88	1.03%
언론진흥기금	12	1.79%	16	1.91%	18	1.84%
양성평등기금	14	1.71%	24	1.73%	24	1.02%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1.64%	10	1.77%	21	1.30%
영화발전기금	218	0.66%	166	4.31%	90	2.69%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27	1.71%	28	1.74%	22	1.04%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8	2.05%	76	2.13%	95	1.92%
응급의료기금	104	1.71%	91	1.77%	194	1.04%
임금채권보장기금	790	-1.22%	826	5.16%	721	5.6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6	2.06%	201	2.03%	174	1.5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020	0.51%	1,050	4.64%	1,156	7.59%
전력산업기반기금	336	2.12%	232	1.81%	226	1.08%
정보통신진흥기금	177	1.68%	257	2.35%	184	1.6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	1.78%	84	1.93%	157	2.18%
지역신문발전기금	5	1.71%	6	1.90%	6	1.39%
청소년육성기금	23	1.72%	24	1.75%	22	1.31%
축산발전기금	180	1.69%	207	1.70%	128	1.17%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기금	58	1.88%	65	1.84%	71	1.07%
한강수계관리기금	104	2.10%	143	2.15%	147	1.6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8	1.72%	362	1.79%	489	1.07%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	1.73%	12	1.71%	33	1.08%
국제질병퇴치기금	47	1.60%	51	2.09%	42	1.4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95	1.99%	204	2.19%	208	2.57%

※ 수익률은 기금별 수익률의 단순평균값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자산 이관(20~)

2. 기금별 자산배분비중 현황(2020년)

(단위: %)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국내 주식형	기타	단기 자산	중장기 자산
기금 전체(68개)	2.3	0.3	1.3	41.7	0.7	16.9	36.9	2.6	97.4
기금(68개)별 평균	39.6	14.7	9.4	16.0	10.4	2.1	7.8	54.3	45.7
사회보험성 기금(6개) 전체	0.8	0.0	0.0	41.1	0.1	18.2	39.7	0.8	99.2
사회보험성 기금(6개)별 평균	7.9	0.0	0.0	30.0	12.6	16.1	33.3	8.0	92.0
고용보험기금	14.4	0.0	0.0	38.1	0.0	15.7	31.8	14.4	85.6
공무원연금기금	12.7	0.1	0.0	30.1	0.0	18.8	38.3	12.7	87.3
국민연금기금	0.4	0.0	0.0	41.7	0.0	18.1	39.8	0.4	99.6
군인연금기금	15.3	0.0	0.0	0.0	75.9	0.0	8.8	15.3	84.7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8	0.0	0.0	31.3	0.0	20.9	46.0	1.8	98.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3.1	0.0	0.0	39.1	0.0	22.9	34.9	3.1	96.9
금융성 기금(8개) 전체	1.8	6.3	42.6	40.4	8.4	0.0	0.5	8.1	91.9
금융성 기금(8개)별 평균	14.1	12.1	37.6	29.9	5.9	0.0	0.4	26.2	73.8
기술보증기금	0.3	0.0	56.7	38.0	4.8	0.0	0.1	0.3	99.7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2	0.0	68.0	24.0	6.8	0.0	0.0	1.2	98.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무역보험기금	3.9	1.5	36.3	44.0	11.3	0.0	3.0	5.4	94.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0.2	0.0	49.7	45.0	5.1	0.0	0.0	0.2	99.8
신용보증기금	2.6	0.0	44.8	48.4	4.2	0.0	0.0	2.6	97.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5	95.5	0.0	0.0	0.0	0.0	0.0	100.0	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0.1	0.0	45.0	40.1	14.8	0.0	0.0	0.1	99.9
계정성 기금(4개) 전체	97.8	1.2	0.0	0.0	1.0	0.0	0.0	99.0	1.0
계정성 기금(4개)별 평균	62.5	24.0	0.0	0.0	13.5	0.0	0.0	86.5	13.5
공공자금관리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공적자금상환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복권기금	46.1	0.0	0.0	0.0	53.9	0.0	0.0	46.1	53.9
양곡증권정리기금	3.9	96.1	0.0	0.0	0.0	0.0	0.0	100.0	0.0
사업성 기금(50개) 전체	9.8	2.7	1.2	57.7	5.8	6.3	16.5	12.4	87.6
사업성 기금(50개)별 평균	45.6	16.2	6.8	13.4	10.6	0.9	6.5	61.8	38.2
과학기술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관광진흥개발기금	12.0	87.7	0.0	0.0	0.0	0.0	0.3	99.7	0.3
국민건강증진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주택도시기금	4.4	0.6	0.0	70.7	0.0	7.5	16.8	5.0	95.0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6.7	17.5	19.4	3.0	53.2	0.0	0.2	24.2	75.8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2	36.4	61.4	0.0	0.0	0.0	0.0	38.6	61.4
국유재산관리기금	7.9	0.0	18.0	0.0	68.5	0.0	5.5	7.9	92.1
국제교류기금	2.9	2.0	11.4	69.0	0.0	4.4	10.3	4.9	95.1
군인복지기금	20.6	1.5	3.6	0.0	51.2	0.0	23.2	22.1	77.9
근로복지진흥기금	11.3	10.1	16.1	0.0	54.5	0.0	8.0	21.4	78.6

기금명	단기자산		중장기자산					전체자산	
	현금성 자금	유동성 자금	확정 금리형	국내 채권형	국내 혼합형	국내 주식형	기타	단기 자산	중장기 자산
금강수계관리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5.5	4.5	0.0	0.0	0.0	0.0	0.0	100.0	0.0
남북협력기금	59.8	16.2	19.0	4.7	0.0	0.6	0.0	75.9	24.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68.1	23.7	0.0	4.4	0.0	1.7	2.0	91.8	8.2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1.0	89.0	0.0	0.0	0.0	0.0	0.0	100.0	0.0
농지관리기금	23.2	3.5	0.0	1.9	71.3	0.0	0.0	26.7	73.3
대외경제협력기금	83.9	9.2	3.3	3.6	0.0	0.0	0.0	93.1	6.9
문화예술진흥기금	10.8	24.2	0.0	25.8	0.0	5.1	34.1	35.0	65.0
문화재보호기금	88.7	11.3	0.0	0.0	0.0	0.0	0.0	100.0	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8	0.0	0.8	67.8	0.0	5.2	20.5	5.8	94.2
방송통신발전기금	46.8	47.4	3.2	2.5	0.0	0.2	0.0	94.1	5.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보훈기금	3.9	0.0	0.0	0.0	96.1	0.0	0.0	3.9	96.1
사학진흥기금	74.7	25.3	0.0	0.0	0.0	0.0	0.0	100.0	0.0
석면피해구제기금	9.8	0.0	3.5	85.5	0.0	1.2	0.0	9.8	90.2
수산업발전기금	21.3	0.0	0.0	0.0	0.0	0.0	78.7	21.3	78.7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1.9	37.9	0.0	0.0	50.2	0.0	0.0	49.8	50.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언론진흥기금	13.5	46.1	0.0	40.4	0.0	0.0	0.0	59.6	40.4
양성평등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29.9	18.0	52.1	0.0	0.0	0.0	0.0	47.9	52.1
영화발전기금	7.1	0.3	6.1	52.6	26.4	0.0	7.5	7.4	92.6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1	3.1	63.9	27.9	0.0	0.0	1.0	7.2	92.8
응급의료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임금채권보장기금	4.3	0.0	0.0	0.0	0.0	7.5	88.2	4.3	95.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36.5	63.5	0.0	0.0	0.0	0.0	0.0	100.0	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4.6	0.0	0.0	0.0	55.7	11.3	28.4	4.6	95.4
전력산업기반기금	98.8	1.2	0.0	0.0	0.0	0.0	0.0	100.0	0.0
정보통신진흥기금	25.6	67.3	2.7	1.7	2.5	0.1	0.0	92.9	7.1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69.1	30.9	0.0	0.0	0.0	0.0	0.0	100.0	0.0
지역신문발전기금	20.8	50.5	0.0	28.7	0.0	0.0	0.0	71.3	28.7
청소년육성기금	57.6	27.6	12.0	2.8	0.0	0.0	0.0	85.3	14.7
축산발전기금	86.1	13.9	0.0	0.0	0.0	0.0	0.0	100.0	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94.9	3.6	0.0	1.4	0.0	0.0	0.0	98.5	1.5
한강수계관리기금	23.2	8.1	34.3	34.4	0.0	0.0	0.0	31.3	68.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00.0	0.0	0.0	0.0	0.0	0.0	0.0	100.0	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77.8	0.0	0.0	22.2	0.0	0.0	0.0	77.8	22.2
국제질병퇴치기금	38.9	26.7	9.7	24.8	0.0	0.0	0.0	65.6	34.4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4.2	0.0	0.0	95.8	0.0	0.0	0.0	4.2	95.8

* 전체: 기금별 운용평잔을 고려한 가중 평균

** 평균: 기금별 자산비중의 단순 평균

3. 기금별 투자율 예치비중

(단위: 십억원, %)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여유자금	투자율	비중
총계(68개)	778,769	18,065	2.3	785,868	20,555	2.6	883,569	24,232	2.7
사회보험성기금(6개)	690,518	1,051	0.2	703,327	1,162	0.2	799,328	1,357	0.2
고용보험기금	10,494	-	0.0	8,594	0	0.0	6,843	0	0.0
공무원연금기금	9,913	-	0.0	9,638	72	0.7	9,211	169	1.8
국민연금기금	634,916	-	0.0	647,691	0	0.0	742,239	0	0.0
군인연금기금	1,038	1,022	98.5	1,059	1,049	99.1	1,140	1,132	99.3
사립학교교직원연금	16,481	30	0.2	16,767	40	0.2	18,890	56	0.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7,676	-	0.0	19,578	0	0.0	21,004	0	0.0
금융성기금(8개)	19,758	4,458	22.6	20,909	5,395	25.8	25,143	9,059	36.0
기술보증기금	2,059	605	29.4	2,011	571	28.4	2,354	808	34.3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854	204	23.9	685	123	18.0	691	124	18.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2	-	0.0	0	-	0.0	2	-	0.0
무역보험기금	3,350	1,126	33.6	3,328	1,255	37.7	3,969	2,021	50.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0	196	24.5	837	352	42.1	854	430	50.3
신용보증기금	6,006	1,130	18.8	6,234	1,607	25.8	8,035	3,061	38.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27	40	4.3	695	36	5.2	1,584	59	3.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5,761	1,158	20.1	7,119	1,452	20.4	7,653	2,556	33.4
계정성기금(4개)	16,305	554	3.4	10,034	1321	13.2	8,296	1,755	21.2
공공자금관리기금	16,038	383	2.4	9,785	1212	12.4	8,017	1,600	20.0
공적자금상환기금	15	-	0.0	27	0	0.0	22	0	0.0
복권기금	171	171	100.0	109	109	100.0	156	156	100.0
양곡증권정리기금	81	-	0.0	113	0	0.0	102	0	0.0
사업성기금(50개)	52,187	12,002	23.0	51,598	12,677	24.6	50,802	12,061	23.7
과학기술진흥기금	19	19	100.0	27	27	100.0	22	22	100.0
관광진흥개발기금	109	109	99.5	281	280	99.6	218	217	99.7
국민건강증진기금	294	294	100.0	246	246	100.0	443	443	100.0
주택도시기금	40,157	2,375	5.9	38,410	2,312	6.0	37,977	2,056	5.4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790	541	68.5	980	872	89.0	895	719	80.4
국민체육진흥기금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	-	-	-	-	-	32	0	0.0
국유재산관리기금	1,102	860	78.1	1,303	899	69.0	934	765	82.0
국제교류기금	123	99	80.2	105	86	81.9	74	65	87.0
군인복지기금	776	719	92.6	814	743	91.3	785	725	92.4
근로복지진흥기금	101	101	100.0	107	107	100.0	125	125	100.0
금강수계관리기금	4	4	100.0	9	9	100.0	12	12	99.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	13	99.2	14	13	92.9	9	8	94.3

	2018년			2019년			2020년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여유자금	투자풀	비중
남북협력기금	201	86	42.8	87	33	37.9	90	57	63.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77	224	46.9	265	163	61.5	134	109	81.6
농어업재해보험기금	173	1	0.7	164	35	21.3	123	34	27.4
농지관리기금	1,168	843	72.2	905	846	93.5	737	728	98.8
대외경제협력기금	116	87	74.6	137	124	90.5	118	103	87.3
문화예술진흥기금	66	24	36.6	148	45	30.4	204	33	16.3
문화재보호기금	24	24	100.0	19	19	100.0	19	19	100.0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957	1,845	94.3	2,638	1,746	66.2	2,877	1,568	54.5
방송통신발전기금	144	26	18.3	205	27	13.2	153	12	8.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1	21	100.0	13	13	100.0	6	6	100.0
보훈기금	179	179	100.0	159	159	100.0	120	120	100.0
사학진흥기금	38	37	97.1	103	50	48.5	113	81	71.1
석면피해구제기금	17	17	100.0	14	13	92.9	17	17	96.5
수산발전기금	124	124	100.0	199	199	100.0	169	169	100.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2	92	100.0	83	83	100.0	80	80	100.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4	44	98.9	33	31	93.9	88	88	100.0
언론진흥기금	12	12	100.0	16	16	100.0	18	15	83.6
양성평등기금	14	14	100.0	24	24	100.0	24	24	10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3	3	96.9	10	7	70.0	21	6	28.9
영화발전기금	218	190	87.0	166	145	87.3	90	84	93.1
원자력기금_연구개발계정	27	27	100.0	28	28	100.0	22	22	100.0
원자력기금_안전규제계정	48	10	20.8	76	13	17.1	95	31	32.9
응급의료기금	104	104	100.0	91	91	100.0	194	194	100.0
임금채권보장기금	790	790	100.0	826	826	100.0	721	721	99.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216	122	56.6	201	103	51.2	174	112	64.5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020	1,020	100.0	1,050	1,031	98.2	1,156	1,113	96.3
전력산업기반기금	336	237	70.6	232	212	91.4	226	222	98.4
정보통신진흥기금	177	33	18.4	257	37	14.4	184	19	10.5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74	74	100.0	84	57	67.9	157	49	31.5
지역신문발전기금	5	5	100.0	6	6	100.0	6	5	91.4
청소년육성기금	23	19	84.3	24	19	79.2	22	15	68.2
축산발전기금	180	180	100.0	207	207	100.0	128	128	100.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58	52	89.1	65	59	90.8	71	70	98.5
한강수계관리기금	104	52	50.0	143	47	32.9	147	77	52.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98	198	100.0	362	362	100.0	489	489	100.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0	10	100.0	12	12	100.0	33	33	100.0
국제질병퇴치기금	47	39	82.3	51	50	98.0	42	42	100.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195	6	3.0	204	143	70.1	208	208	99.9

8-1. '20년 기금 자산운용 평가 결과

◆ ('20년 기금 자산운용 평가) 41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제외) 평가 결과,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으로 평가

- ①(운용성과) **자산시장 호황**에 대응한 적극적 운용으로 **수익률 9.19%** 달성
 - ②(전략) **위기관리 체계*** 신속 구축, **ESG투자 안착**** 등 긍정 평가
- * 위기인식지수 등 위기모니터링 지표 마련·활용, 위기대응TF구성(주택도시기금 등)
 **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에 'ESG 투자현황' 지표 도입(기술보증기금 등)

〈자산운용평가 결과*〉

등 급	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미흡
총41개	1	13	24	2	1	-

* (탁월)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우수) 공무원연금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 별도 평가*되는 국민연금기금은 양호한 수익률 및 운용체계 개선 노력으로 평점 소폭 상승 ('19년 75.9점(양호) → '20년 78.3점(양호))

- * 국민연금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캐나다 CPPIB, 노르웨이 GPF, 미국 CalPERS, 네덜란드 ABP)과 비교 평가('17년~)
 - ①(운용성과)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수익률 9.58%** 달성
 - ②(전략) **전문위원회 법제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등 운용전략 선진화
- * 3개 전문위원회(수탁자책임위, 투자정책위, 위험관리·성과보상위) 설치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
 ** 장기(20~30년) 자산·부채 흐름을 반영하여 목표수익률을 설정하는 자산배분 전략

8-2. '22년 연기금 투자폴 운용

◆ (1분기) 연기금투자폴 운용 결과, MMF와 주식형(해외) 유형을 제외하고 전반적 약세, 반면 수탁고는 전분기 대비 감소

- (수익률)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채권 시장금리 상승*과 미 연준발 긴축 우려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따른 국내주식 약세장으로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수익률은 약세

* 국고채 3년물 금리 : ('21년 4분기 말) 1.80% → ('22년 1분기 말) 2.66%

** KOSPI 지수 : ('21년 4분기 말) 2,977.65pt → ('22년 1분기 말) 2,757.65pt

- (수탁고) 위탁기관의 대기성 자금 확대에 따른 MMF 수탁고 증가로 전분기 대비 투자폴 수탁고는 증가(1조 5,770억원)

〈투자폴 수탁고 추이〉

(단위: 억원, 평잔)

	'20.3/4	'20.4/4	'21.1/4	'21.2/4	'21.3/4	'21.4/4 (A)	'22.1/4 (B)	증감 (B-A)
■ 총수탁고*	284,022	305,348	304,624	341,977	363,459	358,294	374,064	15,770
- MMF	99,682	117,274	101,357	120,678	133,651	131,074	148,990	17,916
- 채권형	105,560	110,107	122,393	132,507	134,371	126,089	117,803	△8,286
- 혼합형	69,572	69,004	71,685	79,126	84,902	90,436	94,249	3,813
- 주식형(국내)	3,360	3,300	3,403	3,704	3,879	3,735	4,376	641
- 주식형(해외)	4,829	4,804	5,003	5,205	5,845	5,930	7,336	1,406
- 기타	1,020	859	782	759	812	1,030	1,210	180

* 수탁고에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은 제외

〈투자폴 수익률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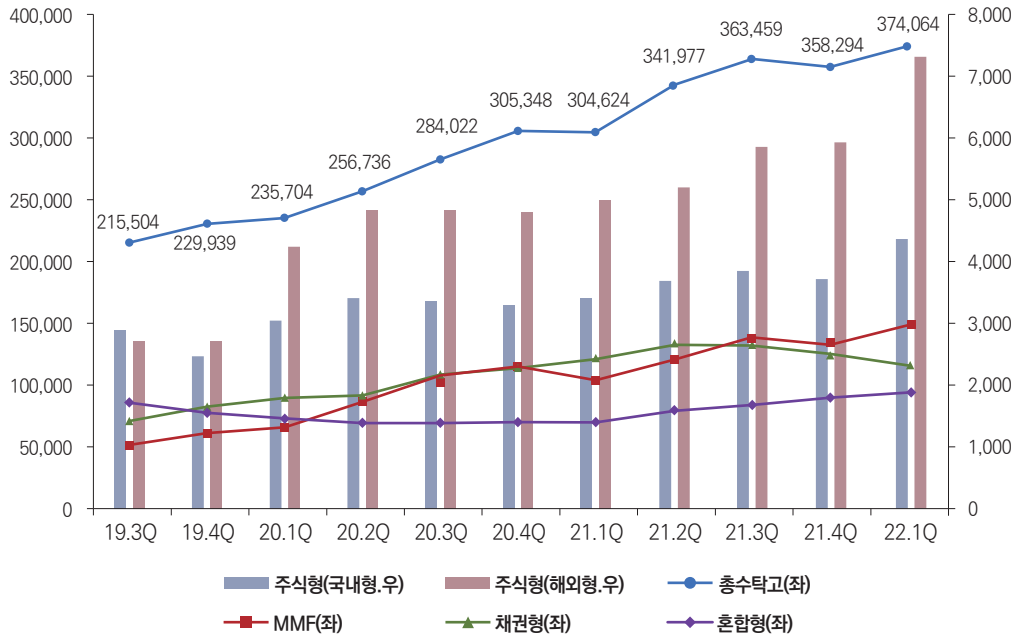
	'20.3/4	'20.4/4	'21.1/4	'21.2/4	'21.3/4	'21.4/4	'22.1/4
- MMF	0.76 (0.08)	0.67 (0.07)	0.71 (0.08)	0.69 (0.10)	0.77 (0.12)	1.11 (0.13)	1.49 (0.13)
- 채권형	2.20 (0.62)	1.05 (△0.03)	0.02 (△0.01)	△0.77 (0.09)	△0.25 (△0.54)	0.19 (△0.03)	△4.99 (△0.14)
- 혼합형	2.29 (0.22)	4.86 (0.85)	1.95 (0.39)	1.49 (0.01)	△0.93 (0.00)	0.46 (0.46)	△1.91 (0.17)
- 주식형(국내)	11.11 (0.67)	26.61 (2.25)	7.61 (1.04)	6.33 (△0.56)	△7.01 (0.60)	△0.58 (1.78)	△6.59 (0.74)
- 주식형(해외)	5.98 (△0.13)	7.44 (△0.24)	8.82 (1.07)	6.68 (△0.26)	3.42 (0.19)	6.96 (0.80)	△2.44 (0.33)

* 괄호안은 BM(BenchMark) 대비 초과수익률, 유형별 BM은 유형내 통합펀드들의 BM수익률을 펀드규모로 가중 평균한 값

** MMF와 채권형은 연환산 수익률, 혼합형과 주식형은 기간 실현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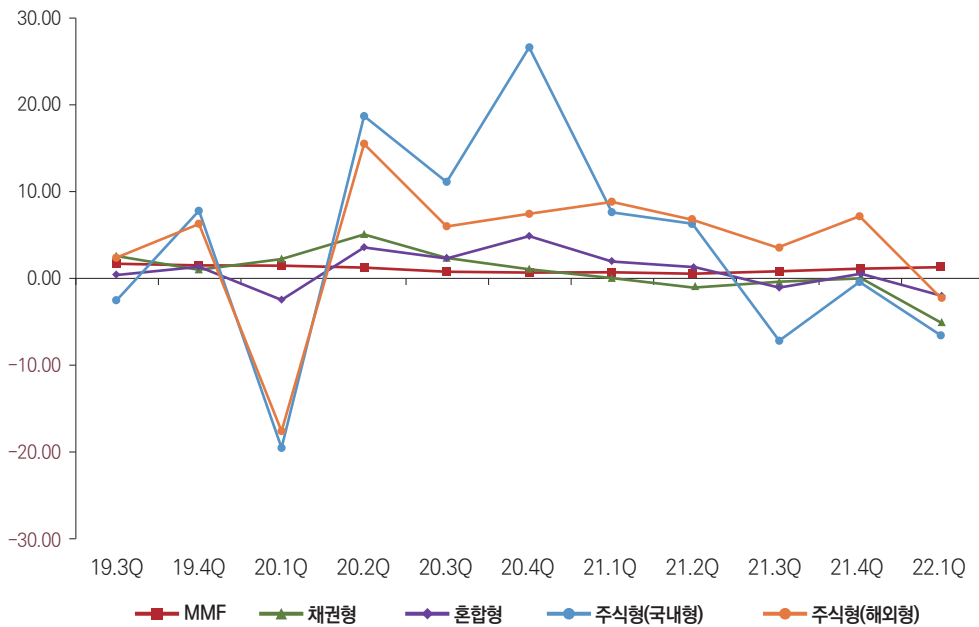
〈연기금투자자산 수탁규모 추이〉

(단위: 억원)



〈연기금투자자산 수익률 현황〉

(단위: %)



9. 보증채무 현황

(단위: 조원, GDP 대비 %)

구분 연도	보증채무					
		GDP 대비*(%)	한국장학재단 채권 ¹⁾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²⁾	예보채상환 기금채권	수리자금
2017	21.1	1.2	11.4	-	9.7	0.02
2018	17.0	0.9	11.1	-	5.9	0.01
2019	14.8	0.8	10.9	-	3.9	-
2020	12.5	-	10.5	0.5	1.5	-
2021.1	11.7	-	10.4	0.5	0.8	-
2021.2	11.8	-	10.4	0.6	0.8	-
2021.3	11.9	-	10.5	0.6	0.8	-
2021.4	11.7	-	10.3	0.6	0.8	-
2021.5	11.7	-	10.3	0.6	0.8	-
2021.6	11.7	-	10.3	0.6	0.8	-
2021.7	11.6	-	10.2	0.6	0.8	-
2021.8	10.9	-	10.3	0.6	-	-
2021.9	11.0	-	10.4	0.6	-	-
2021.10	11.0	-	10.4	0.6	-	-
2021.11	10.8	-	10.2	0.6	-	-
2021.12	10.9	-	10.2	0.8	-	-
2022.1	10.9	-	10.2	0.7	-	-
2022.2	10.7	-	10.0	0.7	-	-
2022.3	10.8	-	10.1	0.7	-	-

* 한국은행 신계열 GDP 기준(2010년→2015년 기준년 개편) 반영

1) 한국장학재단채권: '22년 보증한도 1.3조원, 3월말 기준 1,500억원 발행

2)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22년 보증한도 10.0조원('21년까지의 발행분 차감), 3월말 기준 발행실적 없음

10. 국가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국가채권						
		융자 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조세채권	경상 이전수입	사회보장 기여금	기타채권
2006	1,371,215	1,102,995	120,801	75,361	49,690	5,964	16,404
2007	1,448,024	1,131,011	161,705	79,947	49,286	5,545	20,530
2008	1,816,401	1,368,547	245,753	127,022	48,140	5,236	21,703
2009	1,747,314	1,274,268	302,333	103,109	44,993	4,475	18,136
2010	1,859,500	1,271,254	402,386	113,384	52,259	4,488	15,730
2011	1,813,990	1,191,221	391,257	143,627	52,764	12,858	22,263
2012	2,025,431	1,244,448	504,314	140,979	104,060	15,027	16,613
2013	2,237,460	1,247,499	613,758	222,967	112,537	17,518	23,180
2014	2,376,314	1,261,542	733,727	261,725	77,941	19,092	22,286
2015	2,678,314	1,285,690	973,963	298,281	80,953	18,507	20,920
2016	2,976,041	1,323,247	1,184,931	336,483	91,307	19,763	20,310
2017	3,169,260	1,420,066	1,227,652	376,539	101,010	20,783	23,209
2018	3,428,359	1,542,182	1,323,165	414,934	105,312	22,600	20,166
2019	3,792,599	1,661,090	1,534,296	441,086	110,881	24,592	20,654
2020	4,113,075	1,773,529	1,708,113	469,290	118,277	25,141	18,726
2021	4,761,511	1,925,669	2,101,034	534,963	156,705	25,995	17,145

〈회계·기금별 국가채권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연도	국가채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2006	1,371,215	96,576	344,977	929,662
2007	1,448,024	107,536	177,377	1,163,111
2008	1,816,401	152,238	183,925	1,480,238
2009	1,747,314	127,353	171,924	1,448,037
2010	1,859,500	141,802	160,490	1,557,209
2011	1,813,990	183,122	158,645	1,472,223
2012	2,025,431	175,951	149,699	1,699,780
2013	2,237,460	276,828	125,987	1,834,645
2014	2,376,314	324,161	115,446	1,936,707
2015	2,678,314	366,942	106,277	2,205,095
2016	2,976,041	409,741	100,435	2,465,865
2017	3,169,260	457,394	89,750	2,622,116
2018	3,428,359	498,458	85,233	2,844,670
2019	3,792,599	527,296	81,678	3,183,624
2020	4,113,075	558,332	79,182	3,475,561
2021*	4,761,511	625,374	81,416	4,054,722

* '21년은 가결산 기준 → 국회 확정 시 업데이트 예정

11. 부담금 운용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연도	개수		징수규모 및 사용								
			귀속주체별			분야별					
			중앙	지자체	공공 기관 등	산업· 에너지	환경	금융	국토 교통	보건 의료	기타
2001	101	67,683	53,745	6,789	7,149	31,119	11,559	5,905	5,404	99	13,595
2002	102	79,013	59,068	9,760	10,185	27,459	14,282	6,644	5,792	5,109	19,727
2003	100	93,006	67,652	12,193	13,160	22,636	17,843	14,143	6,909	7,020	24,454
2004	102	101,509	75,249	13,311	12,948	25,208	19,591	15,633	8,024	8,061	24,992
2005	102	112,647	89,289	12,628	10,730	29,420	21,526	18,179	8,200	12,921	22,400
2006	100	121,132	94,674	11,643	14,814	31,340	21,046	17,368	9,118	14,940	27,321
2007	102	145,882	109,850	17,825	18,207	33,833	24,259	22,489	14,170	15,486	35,645
2008	101	152,707	120,057	13,663	18,987	35,464	24,323	26,105	9,162	16,369	41,283
2009	99	148,047	117,740	13,277	17,031	36,258	25,323	28,057	10,089	16,380	31,941
2010	94	144,591	125,854	13,947	4,790	40,390	22,842	29,264	8,483	15,848	27,763
2011	97	148,101	128,894	13,732	5,476	40,528	23,571	30,913	8,827	15,689	28,573
2012	97	156,690	135,973	15,073	5,644	43,374	25,025	34,269	8,836	15,497	29,689
2013	96	163,934	106,127	15,775	5,837	45,341	26,171	36,905	9,439	15,333	30,745
2014	95	171,797	149,032	16,533	6,232	47,441	26,330	37,864	8,122	16,284	35,757
2015	94	191,076	165,165	18,671	7,239	51,278	27,649	38,288	8,128	24,782	40,951
2016	90	196,706	169,636	20,090	6,980	49,827	27,080	38,062	9,792	29,670	42,275
2017	89	201,561	173,419	21,355	6,788	49,535	26,859	40,839	14,279	29,768	40,281
2018	90	209,920	181,422	21,938	6,560	52,715	27,191	42,888	12,552	30,714	43,860
2019	90	204,282	176,819	21,315	6,148	47,529	28,970	45,401	12,498	28,156	41,728
2020	90	201,847	175,418	20,174	6,255	43,571	26,664	49,743	12,504	29,726	39,639

* 각 연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11-1. '20년 부담금 운용 결과

◆ **('20년 부담금 운용 결과)** '20년도 부담금 수는 총 90개*, 납부규모는 총 20.2조원**으로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0.2조원(△1.2%) 감소

* 부담금수(개) : ('14) 95 → ('16) 90 → ('18) 90 → ('20) 90

** 납부규모(조원) : ('14) 17.2 → ('16) 19.7 → ('18) 21.0 → ('20) 20.2

● **감소 : 코로나 19 영향**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 1.4조원 감소

* 출국납부금(△0.3조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0.1조원) 등

● **증가 :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이 1.2조원 증가

*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0.2조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0.2조원) 등

◆ **(귀속)** 중앙 17.5조원, 지자체 2.0조원, 공공기관 0.6조원 등

◆ **(사용)** 신용보증재원 등 금융 5.0조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등 산업·에너지 4.4조, 국민건강 증진 등
보건의료 2.7조원 등

12. 정부출자 현황(22.3월말 기준)

(단위: 억원, %)

주무부처	기관명	수권 자본금	납입 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 (B)	지분율 (B/A)
기재부	1 한국조폐공사	150	66	66	100.0
산업부	2 대한석탄공사	4,500	775	775	100.0
	3 한국광물자원공사	30,000	20,000	19,973	99.9
	4 한국전력공사	60,000	32,098	5,842	18.2
	5 한국가스공사	10,000	4,616	1,207	26.2
	6 한국지역난방공사	2,000	579	200	34.5
	7 한국석유공사	130,000	106,400	106,400	100.0
환경부	8 한국수자원공사	150,000	100,725	94,640	94.0
국토부	9 한국도로공사	400,000	397,343	350,067	88.1
	10 한국부동산원	500	90	44	49.4
	11 인천국제공항공사	80,000	36,581	36,581	100.0
	12 주택도시보증공사	50,000	34,442	19,913	70.3
	13 한국공항공사	100,000	23,578	22,541	95.6
	14 한국철도공사	220,000	107,996	107,996	100.0
	15 한국토지주택공사	500,000	427,280	382,570	89.5
해수부	16 부산항만공사	80,000	32,975	28,790	87.3
	17 인천항만공사	50,000	20,677	16,680	80.7
	18 울산항만공사	80,000	4,405	3,846	87.3
	19 여수광양항만공사	60,000	15,523	11,053	71.2
방송통신위원회	20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3,000	100.0
	공 기 업(20)	2,010,150	1,369,150	1,212,186	88.5
문화부	21 한국관광공사	500	324	179	55.2
농림부	22 한국농어촌공사	50,000	14,868	14,868	100.0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000	683	683	100.0
산업부	2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000	550	550	100.0
금융위	25 한국자산관리공사	30,000	16,119	12,407	77.0
	26 한국주택금융공사	50,000	20,616	14,166	68.7
	준정부기관(6)	136,500	53,161	42,854	80.6
기재부	27 한국수출입은행	150,000	127,483	87,628	68.7
	28 한국투자공사	10,000	1,000	1,000	100.0
국토부	29 새만금개발공사	30,000	13,970	13,970	100.0
	30 한국해외개발지원공사	5,000	3,936	2,050	52.1
해수부	31 한국해양진흥공사	50,000	29,493	15,800	53.6
금융위	32 한국산업은행	300,000	222,786	222,786	100.0
	33 중소기업은행	100,000	42,114	23,722	59.5
보훈처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	20	20	100.0
	기타 공공기관(8)	645,020	440,801	366,975	83.3
산업부	35 대한송유관공사	2,700	1,981	193	9.8
문화부	36 서울신문사	2,177	416	127	30.5
국토부	37 공항철도주식회사	15,000	2,200	922	41.9
방통위	38 한국방송공사	3,000	2,062	2,062	100.0
	39 한국교육방송공사	1,000	889	889	100.0
	공공기관 외(5)	23,877	7,547	4,193	55.6
	합 계 (39)	2,815,547	1,870,659	1,626,207	86.9

13. 정부배당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기관명	'20년 배당			당기 순이익	'21년 배당			배당 성향
	일반 회계	특별·기금	소계		일반 회계	특별·기금	소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1,671	2,248	3,920	33,328	2,275	3,570	5,845	20.00
2 중소기업은행	1,662	-	1,662	12,632	2,208	0	2,208	29.52
3 한국산업은행	1,030	90	1,120	4,875	1,925	172	2,096	43.00
4 한국주택금융공사	0	0	0	1,871	392	33	425	33.46
5 한국수출입은행	713	11	724	1,024	273	4	277	39.80
6 한국가스공사	79	13	92	△936	-	-	-	-
7 한국공항공사	209	195	404	△1,481	-	-	-	-
8 한국도로공사	1	332	334	305	1	118	120	44.47
9 부산항만공사	201	-	201	457	238	-	238	59.80
10 한국자산관리공사	139	-	139	585	142	-	142	39.97
11 울산항만공사	107	0.1	107	147	77	0.1	77	59.90
12 인천항만공사	15	5	21	879	157	56	213	30.00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1	-	11	63	25	-	25	40.00
14 한국조폐공사	39	-	39	△109	-	-	-	-
1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	13	5	2	-	2	40.00
16 한국부동산원	13	-	13	53	10	-	10	40.02
17 한국방송공사	1	-	1	327	33	-	33	10.10
18 한국농어촌공사	165	-	165	92	9	-	9	10.30
19 한국전력공사	-	-	-	19,515	1,421	-	1,421	40.00
20 한국관광공사	-	-	-	△477	-	-	-	-
21 한국교육방송공사	-	-	-	64	3	4	8	12.20
2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	-	147	-	-	-	-
23 한국수자원공사	-	-	-	3,377	-	-	-	-
24 한국석유공사	-	-	-	△31,715	-	-	-	-
25 한국광물자원공사	-	-	-	△16,403	-	-	-	-
26 한국철도공사	-	-	-	△12,381	-	-	-	-
27 서울신문사	-	-	-	5	-	-	-	-
28 여수광양항만공사	-	-	-	116	-	-	-	-
29 한국해양진흥공사	-	-	-	25,857	-	-	-	-
30 새만금개발공사	-	-	-	△93	-	-	-	-
31 해외인프라지원공사	-	-	-	△70	-	-	-	-
32 인천국제공항공사	-	3,994	3,994	△4,268	-	-	-	-
33 주택도시보증공사	-	707	707	2,918	-	616	616	24.99
34 한국투자공사	-	367	367	967	-	580	580	60.00
35 대한송유관공사	-	8	8	306	-	10	10	34.99
36 88관광개발주식회사	-	-	-	0.3	-	0.2	0.2	59.65
37 한국지역난방공사	-	-	-	279	-	39	39	40.00
38 공항철도주식회사	-	-	-	734	-	-	-	-
39 대한석탄공사	-	-	-	△1,141	-	-	-	-
합계	6,069 (18개)	7,971 (13개)	14,040 (22개)	80,694	9,194 (17개)	5,203 (13개)	14,396 (22개)	36.92

13-1. '21년 정부배당수입 현황

◆ 2021년 정부배당금(1조 4,396억원)은 전년대비 증가(+356억원) 하였으며, 평균 배당성향 (36.92%)은 전년대비 4.34%p 상승

■ 정부 배당수입 추이

(단위: 개, 억원, %, %p)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증감
출자기관수	36	36	38	39	39	-
정부배당금	15,562	18,060	14,382	14,040	14,396	+356
일반회계	7,888	8,622	6,696	6,069	9,194	+3,125
특별·기금	7,674	9,438	7,685	7,971	5,203	△2,768
배당성향	31.89	34.98	32.48	32.58	36.92	+4.34

14. 공공기관 현황

(단위: 명, 조원)

연도·유형		구 분	인원현황			재무현황		
			계	정원		자산	부채	당기 순이익
				임원	직원			
2017	공기업		132979	188	132791	570.6	364.4	4.3
	준정부기관		100438	319	100119	205.5	117.7	2.8
	기타공공기관		111792	326	111466	30.9	11.1	0.1
2018	공기업		140253	190	136380	580.9	371.5	2.0
	준정부기관		113974	320	113654	208.0	117.8	△1.3
	기타공공기관		128534	340	128194	35.9	11.7	△0.1
2019	공기업		147374	190	147184	601.8	388.5	1.3
	준정부기관		120478	323	120155	216.8	121.9	△0.5
	기타공공기관		151690	352	151338	38.9	14.2	0.0
2020	공기업		150410	191	150219	617.3	398.2	△0.7
	준정부기관		123429	327	123102	234.3	125.4	3.2
	기타공공기관		160988	363	160625	46.0	17.6	2.7
2021	공기업		150794	189	150605	658.0	434.1	△1.8
	준정부기관		126981	326	126655	255.5	128.2	7.0
	기타공공기관		165001	360	164641	55.5	20.6	5.6

* 인원현황은 '22년 지정 350개 공공기관 기준으로 작성

** 재무현황은 '22년 지정 347개 공공기관(수은, 산은, 기은 제외) 결산 기준으로 작성

15.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 '20년~'21.12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총 50건, 타당성재조사 총 10건 완료

- (예타) 총 50건 중 SOC분야 29건(58.0%), 건축분야 11건(22.0%), 정보화분야 3건(6.0%), 기타재정분야 7건(14.0%)
- (타재) 총 10건 중 SOC분야 6건, 건축분야 4건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총 50건 중 통과 40건(80.0%), 미통과 10건(20.0%)

〈예비타당성조사 결과('20년~'21.12월말 기준)〉

부처	여부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억원)	B/C	AHP
국토부	통과 33건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 도로개설(봉래산터널)	2,074	1.00	0.545
국토부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	986	1.02	0.555
국토부		신분당선 광고~호매실 사업	8,881	0.83	0.518
행복청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3,998	1.77	0.674
행안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658	1.41	0.758
문화부		양주아트센터 건립사업	871	2.46	0.686
산업부		킨텍스 3단계 건립사업	9,988	(시1)1.11 (시2)1.01	(시1)0.651 (시2)0.585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526	1.39	0.654
복지부		국민연금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3,328	1.56	0.741
국토부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25,786	0.81	0.542
국토부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11,955	0.46	0.559
농림부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사업	4,146	0.85	0.532
국토부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 사업	2,299	1.00	0.644
해수부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 재개발사업	6,061	1.24	0.650
문화부		국가문헌보존관 건립 사업	610	0.93	0.639
국토부		대구 도시철도 익스코션	6,711	0.87	0.503
농림부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2,076	0.96	0.637
국토부		광주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사업	1,162	0.95	0.590
국토부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	17,695	0.82	0.508
농림부		초등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	-	-	조건부추진
해경청		방제정 건조	735	1.29	0.729
교육부		시흥배곧 서울대병원 건립	5,312	0.96	0.56

부처	여부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억원)	B/C	AHP
과기부		혁신원자력 연구개발 기반조성사업	3,263	1.11	0.589
과기부		KIST 연구동(L2) 환경개선사업(Ⅳ)	884	1.05	0.658
복지부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조건부추진
복지부		영아수당 지원사업			조건부추진
복지부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조건부추진
문체부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사업	1,476	1.19	0.630
국토부		서낙동수계 국가하천 하천정비사업	1,528	5.18	0.724
국토부		고속국도 제15선(서평택~안산) 확장사업	10,002	1.11	0.663
해수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813	1.17	0.605
교육부		그린 스마트 스쿨 조성	119,068	E/C분석	0.575
해수부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 구축(광양항) 사업	6,915	0.97	0.594
국토부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신설	530	1.09	0.620
환경부		수도권(V)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1,615	1.63	0.704
환경부		전주권 광역상수도 관로 복선화	3,023	0.62	0.548
국토부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시1)13,282 (시2)13,341	(시1)0.83 (시2)0.84	(시1)0.617 (시2)0.617
행복청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1,800	0.84	0.519
해수부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건설사업	79,208	0.97	0.566
환경부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단계 조성	2,288	0.70	0.609
국토부	미통과 10건	부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사업	10,754	0.85	0.497
해수부		부산항 제2신항 건설	124,284	0.92	0.497
국토부		서해안고속도로(서평택~매송) 확장사업	철회		
국토부		서해안고속도로(매송~안산) 확장사업	철회		
복지부		대전의료원 설립	철회		
복지부		서부산의료원 설립	철회		
국토부		성남도시철도 2호선 사업	철회		
산업부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사업	4,643	0.35	0.415
국토부		과천선 급행화 사업	2,900	0.87	0.492
국토부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 사업	2,444	0.89	0.486

■ (타당성재조사 결과) 총 10건 중 통과 6건(60.0%) 미통과 4건(40.0%)

〈타당성재조사 결과('20년~'21.12월말 기준)〉

부처	통과 여부	사 업 명	결과		
			총사업비(억원)	B/C	AHP
해수부	통과 6건	보령항 준설토투기장 건설사업	841	2.68	0.716
국토부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9,017	0.85	0.571
국토부		중부고속도로(서청주~증평) 확장공사	2,560	(시1)0.75 (시2)0.77	(시1)0.512 (시2)0.519
행복청		화덕IC 연결도로 건설공사	986	1.61	0.687
국토부		태릉~구리IC 광역도로 확장사업	1,645	1.42	0.735
문체부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조성	698	2.23	0.774
농림부	미통과 4건	국가산채클러스터 조성사업	307	0.44	0.433
농림부		안동도매시장	철회		
행복청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공사	2,577	0.66	0.393
고용부		밀양폴리텍 건립사업	454	0.61	0.472

〈참고1〉 재정 용어 해설

-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국세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국방, 치안, 사회복지 등 정부의 일반적인 기능과 연관되는 지출을 담당하는 회계를 말한다. 일반회계 세입은 크게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공기업주식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국채발행 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출은 중앙행정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가 포함된다.
- **특별회계** 국가의 회계 중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해 설치될 수 있다. 특별회계 예산의 형식과 내용은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회계 예산에 준하게 되어 있다.
- **기금** 정부의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 예산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총지출** 총수입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더한 후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총지출은 정부부문의 전체적 재정규모의 파악이 가능하고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함으로써 순수한 재정활동의 규모파악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IMF에서 제시하는 기준인 통합재정규모에도 적용이 되는데, 다만 통합재정규모는 용자지출에서 용자회수를 차감한 순융자를 지출에 계상하고, 총지출은 용자지출 전체를 지출에 계상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 **총수입**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모두 더한 후에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 정부 수입규모이다. 재정의 실제 수입규모를 파악하고자 할 때, 모든 회계와 기금의 수입을 단순합산할 경우에는 회계간 전출입 금액 등을 중복계상하여 실제의 재정수입 전체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등을 제외하고 산출한다.
- **국세수입** 국세는 일반회계의 주된 재원으로서 내국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기타 내국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주세, 농어촌특별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는 특별회계의 세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일반회계의 세입이다.

- **세외수입** 정부의 수입 가운데 조세(租稅)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재산수입·경상이전수입·재화 및 용역의 판매수입·수입대체경비 수입·관유물 매각대·용자회수금·국공채 및 차입금·차관수입·전년도 이월금·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고 있다.
- **관리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수지를 말한다.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은 장기적인 미래 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합재정수지와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운용 목표로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부채는 중앙·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한 일반정부의 부채를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예수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IMF의 '01 GFS 기준에 따라 '12년에 처음으로 '11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를 발표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IMF, OECD 등 국가간의 재정건전성 비교시에 주로 이용된다.
- **공공부문 부채** 공공부문 부채는 '12년에 IMF, OECD 등이 공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작성지침(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에 근거한 것으로,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일반정부에 비금융공기업을 더한 공공부문의 부채규모를 산출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위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그간의 공공부문 부채 규모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14년 2월에 '12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 **국가채무** 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국가재정법 제91조에 근거한 국가채무는 국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하며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다. 우발채무나 공기업 부채, 통화당국의 채무 등은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재정운용 목표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 **국채** 국채는 말 그대로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하며 현재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 발행되고 있다. 국고채권은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외환보유액 확충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채권은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주거생활 안정 재원마련을 위해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고 있다.
- **국가채권** 국가채권은 융자회수금, 예금 및 예탁금, 사회보장기여금 등에 국가가 행사할 수 있는 금전청구권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채권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등 국가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가가 예산 확보없이 미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국회의 사전 의결은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실제 지출을 위해서는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과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으로 구분된다.
-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합산한 규모가 경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회보장부담률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징수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 **국유재산** 넓은 의미의 국가가 소유하는 일체 동산, 부동산 및 권리로서 공유재산·사유재산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좁은 의미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은 크게는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뉜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사용하는 기업용 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인 보존재산이 있다. 행정재산 이외의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에 속한다.
- **보증채무** 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서,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이행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이 그 주요 사례이다. 국가보증채무는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매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 **부담금**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부담금이란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외의 금전지급의무를 의미한다. 정부는 부담금 운용 관리를 위해 매년 부담금운용평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및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 **세계잉여금**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것을 결산상 잉여금이라 하고,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세계잉여금이다. 국가재정법 제90조 제2항에서는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 중 개별 특별회계법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세계잉여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가채무 상환에 순서대로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추경 재원으로 사용 또는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 **한은잉여금** 한은이 보유한 외화자산 운용수익에서 통화안정증권 발행비용, 법인세 및 법정적립금 등을 뺀 것을 말한다. 그 중 법정적립금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적립하는 금액으로 결산 순이익금의 100분의 30을 차지한다. 나머지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순이익금에 대해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하게 된다.
- **수입대체경비**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를 말한다. 여권발급수수료나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교육비 등이 그 예이다. 공공서비스 수요증가 등으로 연도 중 세출소요가 증가할 경우 해당 세입으로 세출소요를 직접 충당케 함으로써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연기금투자풀** 부족한 개별 연기금의 자산운용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1년 12월에 도입한 제도이다. 개별 연기금이 예탁한 여유자금을 투자풀 운영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선정한 전문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자금 예탁 여부, 예탁규모 등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참고2〉 2022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 일정

- 매월 둘째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하되, 월·토요일, 공휴일 등을 고려해서 조정

구분	발간예정일	구분	발간예정일
1월	13일(목)	7월	14일(목)
2월	17일(목)	8월	18일(목)
3월	17일(목)	9월	15일(목)
4월	14일(목)	10월	13일(목)
5월	19일(목)	11월	17일(목)
6월	16일(목)	12월	15일(목)



2022—5월 VOL. 1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기획재정부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대표전화 : 044-215-2150 www.moef.go.kr